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토론회, 국보법, 제3차개입금지, 철폐요구

문민정부 등장 이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국내 최초로 방한함에 따라 인권단체들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Abid Hussain)씨는 25일 입국하여 현재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피해자, 인권단체,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여 내년 3월에 열리는 제52차 인권위원회에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공식 조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6월 29일 종로성당에서는 민가협, 민주노총등은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토론회를 갖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제3차개입금지등 악법을 폐지하자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냈다.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이라는 주발제를 맡은 김중서 교수(배재대)는 "국가의 악법이 존재하는 한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도 자유롭게 말하는 것도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도 모두 불가능하다며 한국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 완전히 후진국이다"고 결론 내렸다.

주발제에 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체적 사례로 노동법, 언론, 사전심의제도 등이 거론되었다.

먼저 노동자들의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제3차개입금지과 정치활동금지법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민변)는

"제3차개입금지 적용과정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지원활동만이 처벌되고 사용자에 대한 개입활동은 전혀 처벌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규정이 극히 포괄적이고 애매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손춘석(언노련 정책실장)씨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한국언론의 상황에 대해 "아직도 안기부내 언론감시팀이 존재하고 40여명의 전담요원이 배치되어있고 정치권력은 세무조사를 통해 언론을 길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춘(가수, 작곡가)도 "사전심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전검열제도로서 우리 시대의 작가는 자유로운 창작·표현은 물론 자유로운 상상력마저 제한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기수, 피해자 가족, 인권운동가들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제한하는 모든 악법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자고 결의를 모았다.

한국은 문민정부 등장 이후 의사·표현의 자유의 신장을 진단하는 자리에서 여전히 인권 후진국임을 평가받았다.

한편, 국제엠네스티는 아비브 후싸인 특별보고관의 조사를 계기로 '한국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11쪽의 보고서를 작성 후싸인씨에게 전달했다. 한국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제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가보안법, 사상전향제도 제3차 개입금지 조항을 지적했다.

문민공화국 사고일지

▲ 93년 ▲

- 1. 1월 7일 <아파트 붕괴> 충북 청주시 우암동 우암상가아파트에서 액화석유가스가 연쇄폭발하면서 5층 상가 아파트 전체가 무너져 내려 주민 28명이 숨지고 48명이 중경상.
- 2. 3월 28일 <기차 전복> 경부선 구포역 북쪽에서 승객 6백여명을 태운 무궁화호 열차가 전복돼 78명이 숨지고 1백63명이 부상하는 한국철도 1백년사상 최대참사.
- 3. 4월 19일 <병원 화재> 충남 논산 정신병원에서 불이 나 '발목이 묶여 있던' 입원환자 34명이 사망.
- 4. 7월 26일 <비행기 추락> 승객과 승무원 1백10명을 태우고 목포로 떠난 아시아나항공의 보잉 737-500기가 좋지 않은 기상상태에서 무리한 착륙을 강행하다 추락했다. 이사고로 66명이 숨지고 44명이 중경상.
- 5. 10월 10일 <선박 침몰> 전북 위도면 해상에서 승무원 승객 4백여명을 태우고 부안군 격포항으로 가던 서해훼리호가 침몰해 선장을 포함한 2백92명이 사망. 이는 1945년 이후 국내 선박사고 사상 최악의 사고. 사고원인·과적·과승과 선박의 배수불량 등

▲ 94년 ▲

- 6. 10월 21일 <다리 붕괴> 출근시간에 성수대교 교각 사이 상판이 떨어져 32명이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
- 7. 10월 24일 <유류선 화재> 충북 충주호에서 유류선 화재가 발생해 30여명 사망. (성수대교 사고에 가리어 제대로 보도조차 안됨)
- 8. 12월 7일 <가스폭발> 서울 도심을 불바다로 만들었던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발생.

▲ 95년 ▲

- 9. 2월 7일 <화재> 한진해운 컨테이너 운반선에서 수리작업 중 불이 나 19명이 유독가스에 질식사.
 - 10. 4월 28일 <지하철 가스폭발>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사폭발, 사망자 최소 100명 이상. (피해자 대부분이 10대 중고생임. 부상자 약 200여명.)
- 총 사망자 수 - 약 684명
■ 총 부상자 수 - 약 1,000명

그리고 삼풍이 무너지다!!!!

동성애를 권리 선언

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결성 동성애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는 동성애자들의 권리선언이 국내 최초로 제기되었다.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공동대표 서동진등, 동성애자인권협회)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애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가해진 온갖 조롱과 박해를 물리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평화와인권

제 29 호 (95.7.10)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최저임금은 임금 억제의 보조 수단. 올 최저임금 28만8천1백50원

최저임금제가 노동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고 저임금을 해소한다는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임금 억제를 위한 보조 수단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4인 '최저임금 심의 위원회'(위원장 조기춘 고려대 명예교수)는 올해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8.97%로 확정했다. 따라서, 월 28만8천1백50원(일급 1만2백원)의 최저임금이 올 9월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대상자는 약 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임금 수준은 도시 노동자의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등, 민주노총(준))가 산정한 18세 단신 여자 노동자의 최저임금 35만6천8백5원에도 약7만원가량 모자라는 액수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8.97%는 도시노동자 가구의 94년 가

계지출 증가율인 14.3%에 비해 5%이상 낮다. 따라서, 최저임금 28만8천1백50원은 94년도 기준 도시근로자의 가계지출 평균인 1백26만4천원의 22.8%에 불과하다.

더욱이 현행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정부에게 "피고용자 10인이 하의 사업장에 안정규정과 최저임금제를 확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한편, 민주노총(준)은 노총, 경총 각 9명을 포함하여 총 26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정부와 사업주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임금억제 보조수단으로 삼고있다고 비판했다.

직장내 여성차별·성폭력, 법으로 막자

여성·노동계 9개 단체 국회에 청원

여성계와 노동계는 여성에 대한 간접 차별과 성폭력을 막기 위한 법조항을 새로 만들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여성단체연합', '전국금용노동조합연맹' 등 9개 단체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신인사제도와 비정규직의 확대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간접차별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직장내 성폭

력도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규제하여야 한다고 청원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 근거로 "일반적으로 남성은 종합직, 여성은 일반직에 일반적으로 배치(성차별에 따른 직군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부 형식적인 자유 선택의 기회가 부여되기도 하나 외형상 자유선택일 뿐 실질적으로는 한 직군으로 국한시키는 결과적 차별 구조를 낳고 있다"고 제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업무, 노동시간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과 후생복지, 모성보호, 사회보장

7.4공동성명 발표 23주년 불교인권위등 성명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한상범)는 4일 7·4 남북공동성명 23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미군의 철수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입각한 통일의 실현을 위한 노력도 촉구했다.

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있고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날로 늘어나는 직장내 성폭력이 모든 직장 여성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지난해 4월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직장내 성폭력의 법적구제와 제재근거가 되고 있으나, 이 법률에는 성희롱없는 직장을 만들어야 하는 사업주의 책임은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폭력상담소는 91년부터 94년까지 접수한 상담통계에서 "전체 상담건수 4천3백51건에 대해 직장내 성폭력이 11%인 4백80건에 이르며 20대 여성 피해자가 64.1%를 차지한다"고 한다.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인권'의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인권'이 널리 읽혀지고 다양한 취재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구독료는 년 3~5만원입니다.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민은행 508-24-0144-967
예금주 문 규 현

어린이·청소년 권리신장을 위한 민간보고서 완성 21개 민간단체 참여, 연대회의 결실

우리나라의 어린이의 인권 상황에 대한 종합보고서가 21개 민간단체의 공동참여로 완성되었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연대회의」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에 근거한 민간보고서(SUPPLEMENTARY REPORT)를 제네바에 있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 그룹」에 발송했다. 이보고서는 민간단체그룹을 통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소속 위원들에게 배포된다.

「공동육아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등 21개 단체와 이기범 교수(숙대 교육학)등 10여명의 필진이 참석하여 만든 민간보고서는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한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전반

적인 권리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현장활동가와 학계연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현실상황에 기초한 구체적인 내용과 27개 권고안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보고서가 조약과 조항과 관련된 법조문을 나열하는데 치중한 반면, 민간보고서는 현장에 취합한 사례에 기초해 아동인권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민간보고서에 담긴 주요권고사항은 △조약에 따른 국내법 정비 △아동학대 신고제 마련 △보육시설 확충과 예산편성 △학교교육에서 인권교육 실시 △학교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보장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혹은 보조인의 참여 보장 등이다.

재일한국인 정치범 석방 촉구 일본 국회의원 서명 청와대 등에 전달

일본의 국회의원 126명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재일한국인 정치범 7인의 석방을 요구했다.

「한국정치범 석방 95년 전국운동실행위원회」(전국운동)의 오자와 다카시(45)씨 등 6명은 3일 일본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요망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했다.

「수감중인 재일한국인 7명에 대한 인도적 배려에 관한 일본국회의원 요망서」는 “고령이나 장기간의 옥살이 때문에 재일정치범들의 건강상태가 궁극하며, 이들이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석방을 실현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들은 “해방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축하스러운 8월 15일에 인도적인 배려로 이들 재일 한국인이 가족결로 돌아 갈 수 있게 된다면 한일 양국 국민의 우호관계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일동포의 신분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감중인 정치범은 손유형(65), 이현치(43), 김태홍(37), 김장호(52), 김병주(72), 서순택(65), 이성우(73)씨등 7명이다.

넬슨 만델라 한국방문 인권단체들 성명

세계적인 장기수이자 인권운동가로 알려진 넬슨 만델라씨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되어 6일 한국에 왔다. 만델라씨는 악명 높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흑백분리정책) 철폐를 위해 싸우다 27년동안 옥살이를 했고, 94년의 다인종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3백년간 지속된 백인 지배체제와 흑백분리제도를 없앤 인물이다.

하지만, 흑인 민권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그의 방한에 대해서 국내 인권 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우려의 비판의 뜻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만델라 대통령이 간혀 있던 긴 세월동안 많은 국제인권단체들의 석방요구와 지원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한국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인권단체들은 “만델라 대통령의 방한이 한국과의 경제교류와 우호관계정립에만 한정된다면 전세계 인권운동단체들에게 실망을 안겨 줄 것”이라며 정부는 만델라 대통령의 방한을 ‘국민적 지도자간의 만남’이라면서 전적으로만 몰아가는 자세를 버리고, ‘진정한 국민의 정부’가 되기위한 노력을 75명의 장기수의 석방과 억압의 상징,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나타내 보일 것을 요구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도 탑골공원에서 열린 목요일집회에서 김선명씨를 비롯한 장기수와 국가보안법 관련 양심수의 전원석방을 촉구했다.

유서대필사건 강기훈 공대위 항소

「강기훈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위원장 함세웅 신부는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 분석실장 김형영씨를 공문서 위조 및 위증죄로 고발한 것에 대한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불복, 3일 서울고등 검찰청에 항소했다. 91년 발생한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에서 김형영씨는 고 김기설씨와 강기훈(32)씨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감정해 강씨의 구속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10월 김씨를 허위공문서 위조 및 위증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성재)는 장애인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편의 시설에 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조문숙 간사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대학내에 얼마나 설치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로 장애인의 접근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조씨는 현재 몇몇 대학을 조사했지만 대학 관계자들이 호응하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조사 항목에는 점자안내지도, 유도블럭,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망, 경사로 설치 여부, 휠체어사용가능 여부, 승강기·화장실·세면실·주차장 등의 이용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는 자원봉사원 교육을 통해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화와 인권

제 30 호 (95.7.17)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해고자 복직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 노동부 경총,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강력 반발

최근 이해찬 서울시 부시장이 서울지하철 해고노동자의 노사자율 원칙에 의한 복직에 대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 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자 재야노동계를 중심으로 이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측의 전념 노동부장관은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소송 취하 등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12일 30대 그룹인사와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갖고 “해고노동자 문제는 장기적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결코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대해 해고노동자들은 즉각적인 항의집회로 강력히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준) 전국 금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길, 전해투)는 14일 오후 4시 마포 경총앞에서 40여명이 모여 항의 집회를 가졌다. 전해투는 “노동부가 노동쟁의 조정법 2조에도 명기되어 있는 해고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은 노사문제를 파행적 대립 구도로 몰아가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부와 경총에 대해 해고노동자 복직문제는 노사협상 대상이 아니라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순수한 요구를 왜곡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경총을 즉각 해체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해고노동자 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전념 노동부장관의 발언은 지난 7월초 울산지법이 해

고자 문제를 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수 변호사는 “해고자 복직 문제는 정부와 회사의 노조 활동 탄압으로 비롯된 것이므로 이들을 원상 회복하는 데서부터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안이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고 노사관계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등 80년 광주민중학살 책임자들에게 대해 검찰의 불기소 방침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5.18관련 사회단체와 인권단체는 권력형 범죄에 역사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이 50년에 가입한 유엔 제노사이드 조약(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권침해 범죄자에 대한 불처벌 문제」에서 국제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반 보벤(네덜란드 림버그 대학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올해 단체 협상 과정에서 많은 사업장에서 해고자 복직이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데, 해고자 복직이 공식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경영자측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14일까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제노사이드 조약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도 유럽 각국은 제2차대전의 전범들을 체포, 재판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내에서는 ‘과거 청산의 법적 제문제’를 발표한 바 있는 박원순 변호사는 “진실의 은폐는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다시금 짓밟는 것”이며 “권력행사에 관련하여 불의와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재산의 몰수등 일 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원칙은 제2차대전 이후 서구에서는 일반화되었 고, 48년 집단학살 범죄를

‘아시아 시민사회동의 연대를 위한 전북지역토론회’
시민 사회운동간의 교류 필요 인식계기

7월 11일 오후 7시 가톨릭 센터 3층 회의실에서는 본 정의평화정보센터(대표:문규현 신부)주최 ‘아시아 시민사회운동의 연대를 위한’ ‘전북지역토론회’가 전북지역 사회운동단체 활동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21세기 사회발전과 연대의 모색을 위한 7월 아시아 워크숍, 참석차 내한한 필리핀 대중민주주의 연구소(IPD:소장 E. 토레)임원과 아일랜드 사회운동관련 임원과 참여연대 이대훈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문규현 신부는 인사말에서 “다양한 운동이 함께한 이런 자리는 정말 소중한다고 생각하며, 전통적 민족민주운동과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이 ‘연대’하여야 한다”면서, 우리운동의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는 민족민주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연대운동’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규현 신부는 “전북지역 토론회가 각 사회단체간의 연대의 끈이 될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인사말을 마무리하였다.

필리핀의 C몬테메이여(IPD,인론담당)는 필리핀의 사회와 운동상황에 대해서 86년 독재가 종식된 이후 사회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형태가 달라졌고 사회운동은 달라진 상황에 적응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현 라모스 대통령이 추진하는 ‘필리핀 2,000’(경제성장정책)은 가난에 시달린 많은 국민들로

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정책은 경제성장과 아울러 민중의 삶과 복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제개혁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필리핀 2,000’이 지역 산업별,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 운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D.헤이스(제3세계 개발전문 자원기구 노조 담당)는 아일랜드는 유럽의 제3세계에 속하여 있고 사회운동의 주 관심사는 경제발전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주력하고 있으며, 사회단체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정의의 향환과 트너쉽 형성(연대활동)을 강조했다.

J.휴어(서비스산업노조연맹,교육및정책담당)는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이 점차적으로 수동적으로 변해 가는 상황에서 작업장안의 근로조건 개선은 중요한 활동 내용이다. 아일랜드에 진출한 새한미디어나 대우는 고용불안을 이유로 노조를 인정치 않고 있으며, 한국의 노동조합 활동이 아일랜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노동운동과 아일랜드 노동조합운동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세계 사회운동상의 변화는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깊이 있는 연대와 교류가 필요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읍태인여중교사 성폭행사건 재판연기

지난 7월 14일 오전 10시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권남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읍 태인여중 김모(27)교사의 성폭행 항소심 선고공판이 담당판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살펴 봐야 한다며 8월 11일(금)오전 10시로 연기하였다.

김교사는 이 학교 교장인 은모(49)씨가 상사임을 빙자해 성폭행을 일삼아 왔으며 93년 9월 전주지방법원에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은씨를 고소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6월 15일 11차 재판에서 담당검사(문세영)는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된 공소제목을 강간 및 위력 등에 의한 간음으로 변경하였다. 이 공소변경은 예비적 변경으로 강간 및 위력에 의한 간음의 죄목이 추가된 것이다. 한편 김교사성폭행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박상희)는 8월 11일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삼풍붕괴사고 축소수사비난 ‘전국연합’ 성명서 발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전국연합)은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

가 전직구청장과 서울시, 건설부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기피하고 있다”며 “축소수사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남호 현구청장 역시 “삼풍백화점의 중축공사와 매장용도변경 승인 등을 실질적으로 처리한 당사자”라며 “붕괴참사의 책임자인 그에 대한 사법처리를 미루는 것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검경이 예속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위비삭감 연대회의 사회복지 예산 증액해야

국방부가 지난 6월 1일 재정경제원에 제출한 96년 국방예산이 12.5%로 증액된 사실이 밝혀져 국방비삭감을 위한 건의서를 사회단체가 준비하고 있다.

‘방위비삭감을 위한 연대모임’(연대모임)은 7월 중 재정경제원에 ‘방위비 증액을 반대하고 사회복지예산 규모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짜여져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보내기로 했다. 연대모임은 14일까지 이 취지에 동의하는 평화통일, 사회복지, 사회시민 단체를 모으고 있다.

국방부 예산안은 현재 검토, 조정중이며 당정회의, 청화대 보고를 거쳐 10월 국회 심의를 받게 된다.

○ 행사 안내 ○

- ▲ 전북여성의 전화 7월 강좌 ‘여름철 건강법’, 일시:7월 18일 12시30분
- ▲ 아동의 심리적 발달과 과제
주최:전북여성운동연합
일시:7월 22일 오후 2시

평화와 인권

제 31 호 (95.7.24)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 스 : 0658-45-0152

특별법 특별 검사제로 광주 학살자 처벌 전북지역 규탄집회, 전북총련 항의농성 시작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 결정에 대한 사회 각계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광주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시민단체들은 21일에도 특별법 제정과 특별 검사제 도입을 통한 광주 학살자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과 광주 5.18관련 단체등 사회단체 대표 30여명은 이날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5.18학살자 처벌을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강신석 목사 등, 5.18공대위)는 22일 오후 6시부터 민주당 광주지부 사무실에서 5.18학살자 처벌을 요구하는 무기농성에 돌입했다.

5.18공대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학살자들과 함께 정권을 연명하려는 김영삼정권의 퇴진을 향한 총체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5.18공대위는 광주 전남지역의 140여개 사회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전북지역 규탄대회 ‘검찰의 경쟁상대는 독일 나치법익론’

7월 22일 오후 4시 전주코아백화점앞에서는 민주주의 민족통일전북연합(공동의장,한규채등,전북연합)주최 ‘5.18 학살자 불기소처분 규탄 및 기소촉구대회’가 전북연합소속회원과 시민 학생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한규채 공동의장은 대회사에서 “부모는 자식의 한마디라도 귀 기울이려고 노력한다. 정부는 15년간이나 외쳤던, 국민들의 소리를 외면하지만, 역사는 우리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세력은 길거리에서 싸워 통곡하는 우리의 함성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권 없음’결정에 대해 반박연설에 나선 홍진일씨(전북대 법과대학생회 회장)는 “이번 검찰의 결정은 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의 의사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검찰의 경쟁

상대는 독일나치시대 법익론’이며 특별검사제와 특별법 제정 도입을 위해 투쟁한다”고 말했다.

전북연합은 우리의 요구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 무효화 △5.18광주학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특별검사제와 특별법 제정

산재노동자에게 일터를

산재장애자 문제와 사회보장을 위한 공청회

산재노동자에 대한 단순 보상을 넘어 직업재활이 가능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산재추방대책회의’는 19일 오후 6시 ‘산재장애노동자 문제와 사회보장을 위한 공청회’를 종로성당에서 가졌다.

이제까지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이 주로 보상의 문제에 머물러 있었다. 즉, 보상금을 받은 후 지속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산업재해자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신체장애자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95년 조사에 의하면 산재장애인들 중 현재 취업자는 36%에 불과하고 조사

△극각적인 책임자처벌 △광주시민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구했다.

한편 22일 기소촉구 집회 이후 전북지역대학총학생회 연합(의장:전북대 총학생회 회장 엄성복)소속 17개 대학총학생회 회장단은 전주 코아백화점앞에서 5.18 책임자 처벌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무기농성과 이를 위한 서명작업에 돌입했다.

대상자는 32.5%가 생활보호 대상자이다.

남규현 교수(한신대 사회복지학)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보상의 차원을 넘어 지속적인 직업활동능을 가능케 하는 직업훈련 등 구체적인 재활 프로그램의 제공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노동자는 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어서는 안된다. ‘노동권’의 확보라는 의미에서 기업은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의무고용을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우현(민주노동 집행위원)씨는 “이제 산재장애인 노동자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노동자로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보상체제를 현실화하고 의학적 재활은 물론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적 재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행사 안내 ○

- ▲ 환경운동연합 제3기 어린이 환경학교
7월 31~ 8월 2일까지 변산 반도 청림야영장
- ▲ 정읍태인여중교사 성폭행 사건 11차 재판
8월 11일 오전 10시 광주고등법원 301호법정

48년 국보법 제정이후, 총 2천 7백여명 구속 '국가보안법피해자대회' 열려

7월 20일 오후 6시, 200여 명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옥살이 경험자들은 '국가보안법피해자대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연합회관에 모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온 국민이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민족분단의 걸림돌이며 인권침해의 최대주범인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뜻이었고 자신들이 앞장설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날 주최측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의 적용을 받아 구속된 사람은 2천 7백여명에 이른다. 적용된 예를 살펴볼 때 언론, 출판활동, 문학·예술활동, 교육·종교·정치활동등 국민의 생활 구성구석 안 미친 부분이 없다. 관련 구속자의 이름과 사건을 훑어보면 지나온 현대사의 명암이 나타난다. 48년 제정이후 제2공화국시기까지의 구속자 함석헌(사상계,58년)등, 박정희 정권시기 유현목('은막의 자유'관련,65년), 김지하(당시'비어'관련,72년), 한승헌('어느 사형수의 죽음앞에'어떤 조사 필화사건,74년), 리영희('8억인과의 대화'필화사건,77년)등, 전두환 정권시기 정상모('말')지 보도지침 관련,87년),김현장, 문부식,김은숙(부산시문화원 방화사건,82년), 김대중, 문익환(김대중 내란음모사건,80년)등, 노태우 정권시기 문익환, 유원호(방북,89년), 강기훈(유서대필사건,91년)등이다. 그리고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에는 청소년 단체까지도('샘'사건, 94년) 국가보안법의 희생양이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감옥 안에 갇혀있는 이들이 4백 여명이나 된다.

참석자들은 "92년 유엔인권이사회의 폐지권고 이후 국제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법원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제청을 하거나 국보법 기소자에 대해 무죄석방을 내리는 등 국보법 폐기여론이 더 이상 물러나지 않을 상황"이라는 데 고무되었다. 이들은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근거해 국보법에 의한 피해 사항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집단적으로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인권조약에 근거한 집단적 제소의 움직임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구체적 실천방향과 참석자들의 공동대응이 차분하게 논의되기에는 부족했다는 점이 이 자리를 찾은 이들을 아쉽게 했다.

원광대 '자주대오' 사건 관련자 추가 연행

지난 5월 30일 원광대 '자주대오' 연행되었다가 풀려난 장대영(군복무중)씨가 7월 22일 연행되었다. 장대영씨는 93년 총학생회 간부로 활동했고 현재 전주경찰서 보안과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연행되었던 사람들은 6명으로 전주교도소와 군에 수감중이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제거해야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강연에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45,스리랑카 변호사)씨는 '여성폭력에 관한 유엔의 대응'이란 제목으로 21일 서초변호사회관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쿠마라스와미씨는 "전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수임과 계층, 문화에 관계없이 만연해 있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회 내에서 그들의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에서 파생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가 최근에 이르러서 국제인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며 "여성의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제사회는 국가, 지역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삶에서 여성이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와 성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전북준비위원회 발족

7월 20일 오후 3시 전주동학혁명기념관에서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전북준비위원회(공동대표 박창신, 백남운등 19명)발족식이 52개 단체 참석으로 열렸다.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전북준비위원회 사업계획

△7월28일 노동자 통일대 '녹두'발대식
△8월8일 '녹두통일축전'
△8월12일 '인간띠잇기대회'
△8월14-15일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참가

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94년 5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그 원인, 결과'를 조사하기 위해 임기 3년의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다. 이에 매년 보고서를 작성,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쿠마라스와미씨는 여성폭력의 전반적 문제를 다룬 1차보고서를 95년 2월 유엔인권회에 제출했으며, 보고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가에 의한 폭력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96,97년 보고할 2·3차 보고서에는 가정과 사회에 의한 여성폭력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쿠마라스와미씨는 한국에서의 군 위안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조사중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시아평화우호기금철회축구' 제175차 수요 시위

제 175차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수요시위가 7월 19일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정대협은 성명에서 지난 7월 18일 일본정부가 밝힌 '아시아 평화우호기금'발족에 대한 반대사를 강력히 밝혔다.

지난 6월 14일 일본정부가 '아시아 평화우호기금 사업계획'을 발표한 이후 많은 피해자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발족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수요시위의 분노는 폭발되었다.

평화와 인권

제 32 호 (95.7.31)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등 각계 움직임 활발

5.18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각계에서는 특별법제정 입법청원등 활발한 대응을 벌이고 있다.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 외 11인,5.18 국민위원회)는 24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5.18광주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특별검사제 도입 입법청원

'5.18광주민중항쟁연합'(상임의장 정동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25일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과 관련, '특별법'('국회중언법')에 대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이제 국민은 더 이상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검찰에게 검찰권행사를 넘겨 줄 수 없다"며 "이 나라에서 사라진 공정한 검찰권의 부활과 떨어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이 법이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특별검사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불가능한 검찰 대신에 국회 또는 국민들의

요구로 국회가 결의할 때에 법조계 인사중에 임명하고 국회의 감독하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다.

'5.18 불기소 처분'에 대한 도민들의 항의 계속됨

지난 29일 오전 10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북연합(공동대표 박창신등,전북연합) 회원등 40명은 전주지방검찰청에 5.18 피의자 전두환(5.18광주민중항쟁시 보안사령관)등 7명을 국회중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위중등의 죄로 고발했다.

이날 고발장은 "피고발인 등은 지난 1988년과 1989년에 있었던 국회청문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국회중언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최근 5.18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의해 허위진술을 하였음이 드러나 국회중언법 제14조 제1항의 위반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한편 7월 28일 오후 3시 익산에서는 민주주의민족통일익산연합(의장 전병생),익산시민모임,경실련 관계자들이 모여 '검찰의 '공소권없음'에 대한 항의와 특별법 제정을 시행할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장스케치>

'삭발식'끝에 터져 버린 5.18유가족의 눈물

28일 오후 한여름의 땀방울이 사정없이 내리쬐는 장충단 공원의 단상에서 아홉 명의 5.18 단체회원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삭발에 참가한 이들은 오월단체 회원들로 세사람을 빼고는 모두 환갑이 넘은 노인들이었다. 올해 나이 73세인 박영만씨를 비롯해 아주머니도 4명이나 되었다. 이들의 모습을 3천여 명이 일어난 채로 지켜보았다.

그들의 머리가 바리칸으로 밀려 파르스름한 맨머리가 드러날 때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이들의 눈자위가 붉어졌다.

함께 농성하던 5월단체의 젊은 사람들은 60이 넘는 이들의 삭발을 강력히 만류했다. 하지만, "자식이 죽었는데, 머리 깎는 게 뭐가 무서워, 우라 할 것이여", 이 말에는 누구도 더이상 만류할 수 없었다. 머리를 깎는 동안 아주머니들은 수시로 수건을 눈가로 가져갔다. 남자들은 묵묵히 땅을 내려다 봤다.

"광주학살자를 비호하는 김영삼 정권 퇴진하라" 그들의 선창에 뒤따라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도 속연했다.

5.18유족회 송영도씨(여)는 "광주에서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죽었는데, 법정에 세워보지도 않고 이대로 끝내자는 겁니까?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싸울 겁니다."

호기 있는 다짐과 함께 단상을 내려왔지만, 내려오자마자 같이 농성하던 회원들과 부둥켜 안고 참았던 울음을 토해 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돼. 이렇게는 못 살아."

"저런 아픔을 당한 희생자들의 원한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이대로 묻어두고 넘어가자니 이 정권도 틀려 먹었어."

산전수전 다 겪었을 어느 노인의 한마디는 소리 높은 구호보다도 호소력이 있었다. 곧 이어 행진 대열이 갖춰졌다. 대열 앞에는 막 머리를 깎은 파르스름한 머리가 햇빛을 받아 분노처럼 파랗게 빛났다. 집회장 입구에는 분수의 물줄기를 배경으로 80년 당시 5.18학살만행을 증언하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그날을 증언하고 있었다.

우조교 성희롱 사건, 원심파기 판결 박용상판사 '공정성과도덕성문제있다'

전 서울대 우아무개 조교 성희롱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5일 전서울대 우아무개 조교가 신 아무개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신고수와 서울대총장,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심파기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비난하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참여연대 여성위원회」(위원장 이화숙)는 27일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민사9부 박용상 부장판사가 "대표적인 정치판사이자 권력 추수형 인물이고, 재산축전에 앞장섰다"며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박판사는 살인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김기용순경의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하여 12년형을 확정했고, 사

노명 사건 관련으로 구속·기소된 신형록씨의 구속만 기일을 잘못 계산해 선고공판을 열지 못한 채 석방한 바있다. 또한,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을 높게 선고하는가 하면 부산 최대의 밀수조직의 두목을 집행유예로 석방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밖에도 5공 시절 언론자유를 질식시킨 언론기본법의 제정에 참여하기도 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박판사는 93년 중고생인 자녀의 이름으로 땅을 사들였고, 94년 공직자재산변동 조사 결과 1년에 2억4천9백만 원대의 재산증식을 기록, 법관으로서 최고 재산증식액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용상 부장판사의 해임추구 및 탄핵소추, 항소심 재판부 및 대법원장에 대한 항의서한 발송, 항의집회 등을 시민단체 및 여성단체들과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귀영씨 간첩단 사건 재심결정에 검찰 항고

대표적인 조작간첩사건으로 알려진 '부산 신씨일가 사건'의 재심이 결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태우 부장판사)는 24일 신귀영씨 측이 신청한 간첩사건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보인다"며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부산지방검찰청은 부산지법의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26일 부산고법에 항고했다.

8.15특사 연기 가능성 높아져 민가협등,무조건적인사면복권,수배해제요구

지난 6.27 지자체 선거직 후 정부여당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사면복권이 8월 15일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안우만 법무부장관이 당정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발언하고 난후 일부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여 더욱 증폭되었다.

민가협, 민주노총(준), 천주교인권위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해방 50주년을 맞는 8.15 대사면 조치가 예상된다는 언론보도에 기대를 하면서도 그 시기와 사면복권, 가석방의 폭에 대해서는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오는 8월7

이화춘씨 석방촉구 집회

일본의 「이화춘씨를 구원하는 회」는 지난 21일 일본 동경 도시마 구민센터에서 이화춘씨 2심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의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한국 정부가 "혈육의 애정까지 정권유지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화춘씨의 2심판결을 단호히 규탄하고 이씨의 석방을 위한 투쟁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이화춘(36)씨는 지난해 8월 26일 국가기밀 누설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씨는 일본에 있는 숙부 이좌영씨를 만나 5천4백만엔을 받고 정기적으로 이좌영씨에게 국내의 정보들을 보고한 혐의다. 그러나, 이씨는 "돈을 생활비로 받았고, 이좌영씨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1주일간 '세계최장기수 김선명과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양심수의 무조건적인 전원석방과 민주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 수배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정권 출범이후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가석방조치는 93년에 세 번 있었는데, 3월6일, 5월28일, 12월24일 등에 총226명이 가석방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가석방은 만기가 채 2개월도 남지 않은 이들이 대다수여서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94,95년에는 한번의 가석방 조치도 없었다.

전북지역 3개 노동조합 장기파업 계속

-한국메트로텍스 직장폐쇄-

지난 6월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전북대학교노동조합을 비롯, 도내 3개노동조합이 파업국면에 처해있다. 전북대와 군산대학교 노조는 전국대학노조연맹 산하 국립대위원회 소속으로서 전국 국립대학과 공동교섭을 계속하여왔으나 입장의 현격한 차이로 계속 2달여 동안 파업중이다.

한편, 군산 한국메트로텍스노조는 사측이 협상결렬을 근거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사측이 노조집행부를 퇴진하지 않는한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재협상에 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각계에서는 사측의 강경입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평화와인권

제 33 호 (95.8.7)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장기수, 양심수 석방을 위한 1995인 선언 7-13일까지 민주인사에 대한 전면적 석방 캠페인

유엔이 정한 '관용의 해'이자 분단 50년절을 맞는 올해 김선명씨를 비롯한 장기수들과 양심수, 수배중인 민주인사들에 대한 전면적인 석방과 수배해제, 사면복권을 위한 캠페인이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치러진다.

민가협을 비롯해 민주노총(준), 천주교 인권위, 한교협 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민변,참여연대,경실련,여연 등은 2일 오전 10시 세실레스트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5년 세계최장기수 김선명씨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성우 변호사(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민주화 문제가 여전히 후진적이다.

김선명씨 등 장기수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버려진 사각지대였다. 이런 계기를 통해 종교·문화·시민·인권 단체들이 공동사업을 벌이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라면서 캠페인이 갖는 의의를 밝혔다. 1995인 선언에 대해 소개한 김상근 목사(한교협 인권위, 인권협 대표) "1995인으로 했던 것은 올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분단과 민주화를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한 이들의 권리 회복을 역설했다. 송월주님(조계종총무원장)이 낭독한 1995인 선언에는 김판석 목사, 김승훈 신부, 지선스님, 김대중씨 이기택 민주당 총재, 한승헌 변호사, 김상근 교수, 강연균씨, 권영길 민주노총준 공동대표, 정태홍 한총련 의장 등 중

교·정치·법조·보건의료·학술·노동·문화예술·사회시민단체 등이 총망라되어 참석했다. 또, 이들은 '양심수 전원석방 및 사면복권, 수배해제를 위한 1995인 선언'(1995인선언)과 함께 발표된 이 캠페인은 명동성당 입구에 모형감옥을 설치 '하루 감옥체험'을

하는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결들여 예년의 8.15 양심수 석방 캠페인에 비해 참가단체의 규모나 내용에서 매우 힘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지역에서는 9일 오전 12시 전주 평화동 교도소에서 전북기독교인권위원회 주최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용길 장로, 은수미씨 석방촉구 엠네스티, 박장로 양심수 선정, 긴급행동 돌입

「국제 엠네스티」(엠네스티)는 2일 박용길 장로를 양심수로 선정하여 그의 석방을 위한 긴급행동(urgent action)을 회원들에게 요청했다. 엠네스티는 박씨의 북한행이 자신의 양심을 표현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상 10년 정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데, 고령인 박씨의 건강이 염려된다며 김영삼 대통령과 안우만 법무부장관, 권영해 안기부장앞으로 박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고, 아울러 민가협에 복사본을 보낼것을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6월28일 중국 북경을 거쳐서 평양에 도착 김일성 주석의 1주기 추도식에 참가하기 위해 방북하

였다가 7월 31일 판문점을 통해 귀국,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엠네스티는 지난달 14일부터 전세계 회원들에게 강릉교도소에 수감중인 은수미(31)씨의 석방과 신병 치료를 요구하는 편지를 한국정부관계자들에게 보낼것을 요청했다.

은수미씨는 92년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수사과정에서 가슴을 심하게 맞아 협심증과 관절염을 앓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복부종양 제거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교도소측은 외진관리가 어렵다며 일주일만에 퇴원 명령을 거쳐서 평양에 도착 김일성 주석의 1주기 추도식에 참가하기 위해 방북하

○ 행사 안내 ○

- ▲ 「제6차 범민족대회 전북통일문제 한마당」
8월 8일 오후 5시 전북대 이세종 광장
- ▲ 8.15 50주년 한민족 공동행사
△ 전야제 8월 8일 오후 6시 전주시청광장
△ 「민족공동행사 학술세미나」
8월 9일 오후 2시-5시 원불교 전주교당 3층
△ 전북기독교연합회 주최 「8.15 50주년 기념예배」
8월 13일 오후 4시 전주 완산교회
- △ 「인간미팅기 대회」
8월 13일 오후 5시 20분 남문-코아앞
- ▲ 정읍태인어중교사 성폭행 사건 11차 재판
8월 11일 오전 10시 광주고등법원 301호 법정

성희롱 항소심 재판 '남성위주의 판결 재확인' 여성시민단체 평석회 및 규탄집회에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경실련등은 2일 오후 2시 종로기독교연합회관에서 '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전문가평석회 및 여성·시민 규탄 대회'를 가졌다.

이날 평석회는 박성호 변호사, 배금자 변호사, 심영희(한양대 사회학과)교수, 이정희(한남대 법학과)교수가 발표자로 참가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위법성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내세운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 평균인'이란 도구를 통해 남성중심주의적인 시각을 재 확인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평석회가 끝난 후 성희롱 사건의 당사자인 우조교가 나와 "죄다는 것을 알았을 때 두렵고 참담했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싸울 것이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평석회에 이어 가진 규탄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박용상 판사의 사퇴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희롱 규제조항 신설 △신속수사의 엄중징계 등을 요구하고 항소심 판결의 부당성을 널리 홍보할 것이며 성희롱 재판이 승리할 때까지 범여성 시민운동 차원에서 계속 싸울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여론조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장외군씨 만기 출소

지난 87년 간첩죄로 구속되어 복역해온 장외군(44)씨가 5일 새벽 전주교도소에서 만기출소했다. 장씨는 85년 일본 경도대학에서 상고사 연구 중 초총련계 동포를 만난 것과 일본 조선대학을 방문하여 북한의 상고사 자료를 본 것이 간첩활동으로 몰려 8년형을 선고받았다. 엠네스티는 장씨가 자의적 구금을 당하고 있다며 한국정부에게 장씨의 석방을 요구해왔고 일본에서도 장씨의 석방을 위한 '장외군을 구원하는 회'가 조직되는 등 그의 석방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있어왔다. 한편 장씨는 장기수 40명과 함께 92년 비전향장기수 사상전향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바 있다.

생존권 쟁취 결의 목동 철거민들

「목동영구임대입주추진위원회」는 3일 오전 12시 주민, 자원활동 대학생 3백여명과 함께 목동 가수용시설앞 공터에서 '목동 8.3 강제 철거 규탄 및 임대주택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집회는 93년 8월 3일 백골단과 철거장패 6천여명의 살인적인 강제철거에 맞서 목동 철거민들이 벌인 대대적인 투쟁을 기념해 열린 것이다.

집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주거권 및 안정적인 생존권을 쟁취할 것과 주민 모두가 지역연대의 주체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날 행사는 상명여대, 한국외대 학생들과 함께 흥겨운 대동제를 벌였다.

5.18 재항고 기각, 각계 항의와 성명발표 5.18 공대위 천막농성 돌입

5.18불기소 처분 규탄과 책임자 기소촉구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5.18공대위 회원들은 3일 대검이 내린 5.18 재항고 기각에 항의, 검찰청장 면담을 위하여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하려 했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의 저지에 의해 무산되었다.

지난 31일 고려대 교수들은 5.18특별법제정과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하는 집단 성명을 낸 데 이어 3일에는 「민주화를 위한 광주전남교

수협의회」(의장 이종수)교수들도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민족문학작가회의」는 문인 6백41명이 서명한 성명을 발표했다.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 전남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강신석등, 5.18공대위)소속 회원들은 2일 오후, 전남도청 건너편 수협도지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5.18공대위는 12일까지 농성을 벌인 뒤 상해해 13일부터 서울 명동성당 농성에 합류할 예정이다.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익산민주시민연석회의」결성 선전 및 서명,청원사업 전개

8월 5일(토) 오전 10시 익산시 기독교방송국 YMCA 강당에서 익산시민 30여명이 모여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익산민주시민연석회의」를 결성하였다.

이날은 민주주의민족통일익산연합(의장 전병생)과 익산경실련, 그리고 좋은세상 열여가는 익산시민모임등이 2차에 걸친 모임과 논의 끝에 5.18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상설적으로 운영할 공공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정식으로 「연석회의」를 결성케 된 것이다. 연석회의 상임대표로는 전병생목사가 추대되었다. 「연석회의」는 공소시효와 관계없는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하여 선전 및 서명작업과 지방의회 및 국회청원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교육개혁 선언 징계 전교조 비난 성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이수호,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교육청이 윤한탁(청양고등학교교수)씨등 교육개혁선언교사 4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데 대한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10일 서울지역 교사 1백명은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서울교사 1백인선언'을 발표하고 이날 교육개혁위원회를 방문, 송순 사무국장을 통해 국민계안창구에 공식접수시켰다"며, 이를 서울시 교육청이 징계근거로 주장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청이 명령불복종과 품위유지를 내세워 교사들을 징계하려는 것은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반개혁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평화와 인권

제 34 호 (95.8.14)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김선명씨등 양심수 고작 25명 석방, 기득권층만 대폭 혜택 초장기수 24명등 양심수 4백40여명 남아

정부가 해방 50주년을 맞아 11일 발표한 특별사면복권 조치는 구여권 인사에 대한 대폭적인 사면복권에 비해 양심수는 거의 포함되지 않아 대화합조치라는 정부의 발표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안우만 법무부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형사법, 공안관련사법, 등 3천1백69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오는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서 양심수로선 비전향 장기수 김선명(71), 안학섭(65), 한장호(72)씨가 형집행정지로 재일교포관련자 김철(63), 최해실(67)씨등 5명, 전 김대중씨 비서 이근희씨가 가석방된다. 또한 전대협 의장 김중식, 태재준씨와 이길우, 이종현씨등 5.3동의대 사건 관련자 전원이 잔형면제로 풀려나게 된다. 이들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수감중인 각 교도소에서 석방된다.

하지만, 전체 양심수 4백65명(민가협 집계, 6월 10일 현재)중 약5%에 불과한 25명만이 풀려나게 되었다. 이중 장기수는 3명만이 석방되게 되었는데 우용각(67, 38년복역), 윤용기(70, 37년 복역), 윤수갑(73, 37년 복역)씨등 20년 이상 복역한 초장기수가 무려 24명이 남아 있다. 또, 장기수중 60세

이상의 고령자 42명 가운데 7명, 30년 이상 복역자 14명중 3명만이 이번 조치에 포함되었다. 이번에 석방되는 3명을 제외하고 수십년간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비전향 장기수들은 일체 감형조치에서 제외됐다.

더구나, 각종 비리와 뇌물수수등과 관련되었던 구여권정치인,경제인,공무원 등에 대한 파격적인 사면복권과는 반대로 양심수 석방대상자는 잔여형기가 채1년도 남지 않은 이들이 13명을 절반을 넘어 생색내기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특히 노동운동 구속자 중에는 2명만 포함되어 경제인들이 대거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는 반면 구속 노동자 1백여명은 제외되었다. 또 권영길씨등 주요노동운동가 50여명에 대한 수배해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대화합조치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구여권 끌어안기식의 사면복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권낙기(48, 출소 장기수)씨는 "김선명선생등 세분의 대표적인 장기수가 나오므로 장기수에 대해 사람들이 망각속에 묻혀지나 않을까 염려된다"며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인물의 석방을 통한 장기수와 양심수 문제의 희석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 비판했다.

<8.15 특별사면복권에 대한 각계 반응>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김선명씨등 장기수 3명의 석방조치는 이미 풀려나야 할 사람이 당연히 풀려난 것일 뿐 결코 정부의 온전한 의해 석방된 것은 아니

다. 김선명씨 석방에 기뻐하기 보다 너무도 늦은 석방에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다.

전국민주노동총비위원회
 1백여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어 있고 50여명의 노동자가 수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형기를 거의 다 마친 일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면복권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정권에 격심한 분노를 느낀다.

민가협 목요집회 1백회 '양심수없는 날' 그리며

"양심수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쳐온 민가협 목요집회가 10일로 1백회를 맞이했다. 보라빛 손수건의 물결이 명동을 가든 매운 가운데 진행된 이날의 목요집회는 5백여명의 시민, 학생들이 참석해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뜨거운 마음을 모았다.

민가협 총무 남규선씨는 "1백회 목요집회를 해오기 까지 어머니들의 힘이 가장 혹은 엄청난 퇴약력 아래서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빼앗긴 남편과 자식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정말 눈물겨운 것이었다. 시민들과 도우미들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목요집회는 93년 9월 23일 처음 종로 탑골공원에서 시

작한 이후 한주도 거르지 않고 지켜와 한국의 대표적 인권집회로 자리잡고 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빛 손수건'을 쓴 '초로의 아주머니들'은 양심수의 사진과 경력이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힘찬 목소리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다. 또한 경찰폭력, 고문, 노동탄압등 그때 그때 터지는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개선울 촉구해왔다. 45년 세계최장기수 김선명 석방 캠페인, 고문 희생자들의 고문사례 증언, 5·6공 군사정권에서 조작된 간첩사건의 진상 고발, 아르헨티나의 오월광장 어머니들과 함께 했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태인중교사 성폭행사건 원심파기,유죄 선고 "성폭행 피해여성들의 인권향상 계기"

"직장 내에서 불평등 관계로 인하여 시달리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억울함에 대해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여 동안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어려움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였던 김교사가 재판직후 밝힌 소감내용 중 일부이다.

김모(28)교사는 1989년 정읍태인여중 무용교사로 재직하던 중, 지난 1992년 이 학교 교장인 은모(50)교장에게 상습적으로 강간과 폭행을 당해왔다. 이를 견디다 못한 김교사는 93년 9월 전주지방법원에 고소했으나 94년 전주지방법원은 강간과 추행부분은 무죄로 선고하였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이 사건을 직장내 성폭력사건의 전형으로 규정짓고 「김교사 성폭행사건공동대책위원회」(회장 박상희, 공대위, 성폭력예방치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등 5개단체)를 구성하였다.

지난 7월 14일에 열렸던 11차 재판에서 담당검사(문세영검사)는 강간과 추행의 공소제목을 「강간 및 위력등에 의한 간음」으로 변경하였다. 드디어 8월11일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권남혁)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된다'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공대위는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은 수많은 직장내 성폭행 피해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여성의 인권향상에 매우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고 전제하면서 많은 피해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김교사는 학교이사회에서 해임 당했으나, 행정소송으로 복귀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측은 김교사의 복직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양심수 석방을 위한 집회 -10일 전주 교도소에서

8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전주평화동 교도소에서는 전북민가협(회장 오경숙), 전북인권선교협의회(의장 김동진 중부교회목사), 전북총학생회연합(의장 임성복 전북대 총학생회 회장)소속 회원등 100여명이 모여 '국가보안법 철폐와 장기수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 15명 전원을 면회하려 했으나 교도소 측이 반대로 방양균(서경원 의원 방북사건관련), 최수열(방북사건관련)씨만 면회하였다. 8월 11일 오후 2시에 백남운 목사, 민가협 오경숙 회장등 10여명은 원대총학생회 간부 김용환, 이정식 씨를 추가 면회했다.

지난 8월 7일부터 "양심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며 단식에 들어갔던 양심수들이 11일 단식을 풀었다.

8.15 50주년 학술세미나 통일지향적 인간 공동체적 인간 육성

8월 9일 오후 2시 원불교 전주교구 4층대강당에서는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학술세미나, "민족과 통일: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 구상"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정구(동국대학교수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교수는 "분단 50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이 차지하는 민족사적 의의를 자리매김하고, 민족적인 과제로서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할 총괄적인 지향을 제시하고자한다"고 말했다.

강교수는 "현재 우리 민족은 민족사적 전환기에 처해 있으며, 세계정세의 변화와 동북아시아에서의 4강의 각축, 그리고 지구촌화가 민족내부의 통일운동노력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차

유서사건 공대위 향고이유보충서 제출

6공화국의 최대의 정치사건이며, 치열한 법정공방끝에 진실이 뒤바뀐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위원장 함세웅신부, 이하 공대위)는 8일 김형영씨 고발 사건에 대한 '향고이유보충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김형영을 '법정에서의 위증'과 '허위 공문서 작성'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6월 3일 김씨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원 통일정책의 획기적 전환과 민간차원 통일운동의 심대한 발전을 통해 통일이후 진정한 민족공동체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앞으로 통일운동의 내용은 대중적인 통일운동이 정착되어 '통일정치'에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통일지향적 인간" '공동체적 인간'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동서지역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남북갈등을 극복하여 동일한 가치와 상호기능적 연대를 지향하는 길"에 대한 어려움도 지적하였다. 이날 사회자인 이종호 교수는 "앞으로 각 부문에서 통일운동의 대오를 형성, 정권을 포위해가자"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박교수 공소사실 부인

지난 4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창희(63,한국의대 사학과)교수에 대한 변호인 심문이 9일 서울 형사지법 합의 21부 심리로 열렸다.

박씨는 심문과정에서 '안기부의 조작'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일본에서 북한영화 <춘향전>을 비디오로 본일은 있으나, 서대수씨와 함께 「김일성 전집」등을 읽고 토론하거나 주체사상을 공부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평화와 인권

제 35 호 (95.8.21)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방위비 삭감, 복지에산 증액 요구 방위비연대회의, 전년대비 12.5% 증액 반대

최근 국방부가 '96 방위비 예산안을 작년에 비해 12.5% 인상하려는 안을 제출하자 인권, 평화, 종교, 여성등 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며 방위비 증액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김숙임등, 연대회의)는 지난달 27일 1백여 단체 서명으로 '96 국방예산 편성에 즈음하여 드리는 건의문'을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제출, 방위비 삭감과 사회복지비증액을 주장하였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측은 오는 9월 15일까지 답변을 주기로 약속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3월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담에서 김대통령이 한국의 사회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약 1/4를 차지하는 국방예산을 줄인다면 사회복지문제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각종 사회개발, 환경문제에 보다 여유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인간안보를 중심으로 한 사회개발로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지난 7월 15일에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을 반대하는 1만여 명 엽서보내기 운동을 진행시켰고, 9월 20일~11월까지 국방위 국회위원들에게 엽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비 예산안이 발표되는 10월초 토론회를 개최해 예산안에 대한 평가를 할 계획이다.

"최루가스는 독가스가 잘못 표기된 것" 경찰 최루액 가스 살포, 30여명 전신피부염 고통

경찰의 무분별한 최루탄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루액가스로 인해 대 학생 39명이 심한 화상을 입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최루액 가스 사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남부지역 소속 70여명의 대학생들은 지난 7월 안산시 등에서 국가보안법철

페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홍보활동을 끝내고 이동하던 중 안산경찰서 소속 경찰 1백여명과 대치하게 되었다. 경찰들은 학생들을 1-2명 남짓한 골목으로 몰아넣고 최루액가스(일명 칙칙이)를 10센티미터 앞에서 무차별 살포하였다. 최루액 가스를 맡았던 학생들은 그 다음날부터 온몸에 수포가 생겼고 가려움증에 호소하였다. 또 어떤 여학생은 얼굴 전체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시커멓게 변했고 손으로 잡으면 피부가 벗겨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치료를 맡았던 안산 회망병원 이재광 의사는 "학생들의 병명은 접촉성 피부염과 자극성 수포형 피부염이다. 더운 날씨 때문에 상처가 심해지면 흉터가 영원히 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39명의 학생들은 현재 서울, 안산지역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김태림씨는 "한국의 최루가스가 독가스라고 외국 인권단체가 지적을 하자 요즘에는 칙칙이라는 새로운 액체분사가스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최루액가스는 아직 성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른 심각한 독가스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들은 △경찰폭력에 대한 공개 사과 △최루가스 사용 근절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 39명 전부가 경찰청장과 내무부 장관을 상대로 집단민소송 및 형사소송 등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87년 하버드대 폴 에프스타인 박사등 미의료전문가 5명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한국에 시위가 한참이던 87년 7월 한국을 방문 현장 조사를 통해 최루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매사추세츠공대(MIT)에 의뢰한 성분 분석 시험을 통해 "최루 가스가 페름, 페질환 및 호흡기 심장은 간장등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물이라고 결론지었다. 또 "최루가스는 독가스에 속하는 화학물질이며, 최루가스는 독가스가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 하나되기 위한 일일주막 ●

파업87일째를 맞고 있는 국립대 7개노조가 많은 동지들의 따뜻한 격려와 힘을 얻기 위한 일일주막을 엽니다.

- 일시 : 1995년 8월 26일(토) 13:00~
- 장소 : 전북대학교 본부앞
- 주최 : 전북대 노동조합

5.18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부상, 사망유족 전, 노씨 살인혐의 고소

5.18 고소사건과 관련 김찰이 공소시효로 정한 16일 하룻동안 5.18관련단체들과 전국연합, 민교협, 한총련등은 "반인륜적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둘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5.18학살자 불기소 처분 규탄과 기소 관철을 위한 제3차 국민대회'를 장충공원에서 시민, 학생 8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5.18국민위원회와 5.18공대위는 이후의 투쟁일정에 대해서 현재 명동성당과 전남도청앞에서의 농성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기까지 계속 진행하고, 17일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21일 '학살자 공소시효 토론회'를 민변등과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두환, 노태우등 살인혐의로 고소

한편 5.18 부상후 사망자 유족들은 8월말 전두환, 노태우등 35인을 살인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소시효가 사망일로부터 시작되므로 가장 최근 사망자가 93년에 있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살인행위 공소시효는 2008년까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9월초경 5.18행방불명자 가족회도 국가를 상대로 시신반환소송을 제출한 계획이다.

경찰 책임자 처벌 촉구 전국연합, 연노련 성명

전국연합과 5.18국민위원회는 16일 평화적인 집회에 경찰이 합법집회를 폭력진압을 한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 항의했다. 전국연합과 5.18국민위원회는 "경찰의 폭력은 마치 80년 광주 한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광폭하고 무자비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경찰책임자 즉각 파면 △공식사과 △연행자 석방을 촉구했다.

전북지역학생 3명 구속

지난 15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주최로 판문점에서 열기로한 민족공동행사에 참가했던 '전북지역학생회총연합소속' 학생 장남혁(군산대 제적), 조주환(우석대2) 여찬혁(전북대2) 3명이 연행 구속되었다. 구속자는 19일 현재 경기도 고양경찰서에 수감중이다.

정대협 일 수상담화 비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윤정옥등)는 일본 무라야마 수상의 침략전쟁 사과 담화문에 대해 16일 입장을 발표, "국회결의 사죄를 함으로써 계속되는 망언을 막아야 하며, 사죄는 반드시 민간모금에 의한 일시금 지급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사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수 문제 해결 안돼

장기수 65명 아직도 콘크리트 감옥에

지난 15일 김선명씨등 초장기수 3명과 일본관련 간첩사건으로 복역중이던 유종안 씨등 총8명의 장기수가 특사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아직 장기수는 총 65명이 감옥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주, 대구, 대전, 안동, 전주, 진주교도소등에 각각 8명, 13명, 24명, 8명, 11명, 1명등이 복역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60세이상 고령자인것으로 나타났다.

한일인권세미나 개최 엠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광복50주년기념 한일 인권세미나'를 17일 오후 7시에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광장에서 갖는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2차세계대전후 일본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본사회의 인권 및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미즈 기요코 교수(오테봉대학교수)가 "일본에서 인권이 소중해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오오코시 아이코 교수(킨지대학 철학과)가 "일본 페미니즘의 전쟁책임에 관해"란 주제로 발제를 한다.

우주교 대법원 상고

서울대 우아무개 교고는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 내린 성희롱 항소심 원고 패소판결에 불복해 1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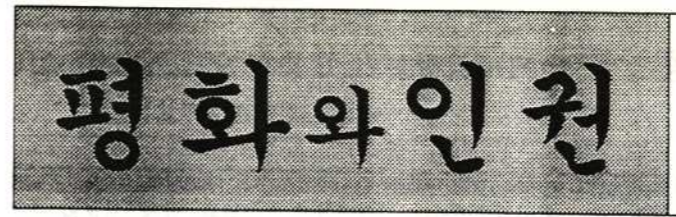
20년이상 복역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명씨등 초장기수가 출소했다고 하지만 석방되어야 할 장기수들이 아직도 많다. 김선명씨는 환영인사에서 "아직도 콘크리트 감옥속에는 많은 장기수들이 있고, 그중에 아픈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자와 초장기수의 대부분이 몰려 있는 대전교도소의 경우 우용각, 운수갑, 김인수씨등이 심하게 아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정부 분단극복 결단 촉구 민교협 성명서 발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김상곤등, 민교협)는 해방 50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 분단극복을 위한 노력에 남북한 정부가 나서줄것을 촉구했다. 민교협은 "민족의 삶을 질곡으로 몰아넣어 온 근원적 요소는 분단체제와 남북한 군사적 대결"이라고 지적하며 남북한 정부에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제9기 장애우대학 개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상재)는 장애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9기 장애우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한국장애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태를 알리고 장애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기간은 9월15일-12월8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10시이다.



제 36 호 (95.8.28)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폐쇄적인운영, 「시설과 공직자간의 이중적 부조리」 시설의 공개 운영과 감시활동 강화 필수적

지난 21일 일어난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이하 기술학원) 기숙사 방화사건의 원인에 대해 정부의 무관심과 시설장의 욕심이 빚어낸 비극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직업교육이나 재활, 요양,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폐쇄성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된다.

경기여자기술학원은 62년 윤락여성의 교육을 위해 세워진 재활학교이다. 그후 여자기술학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83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자선사업재단이 위탁 운영해 왔다.

이 시설의 설치에 윤락행위등 방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것이다. 두 법에 따르면 기술학원은 직업교육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다.

구타 폭행등 인권침해 은상 먼저,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의 소홀과 시설장과의 유착을 들 수 있다.

국가가 운영방식을 보조하는 경우 감사가 필수적으로 따른다. 문제는 입소자비례 지원방식의 국고보조와 감시형식에 있다. 사회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로부

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경비가 모두 국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학원생들의 머리가 끝 운영자금으로 환산된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 역시 '입소자 비례지원방식'을 지급되고 있어 시설의 대규모화를 조장하고 있다"

기술학원이 무리하게 학생을 모집하고, 가족이 원해도 시설을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다. 또한 보조금 등의 인권침해시비가 끊이지 않아요 정부의 지도·감독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와 달리 시설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시설문제연구회」의 보고에 따르면 "시설장들이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해서 1년에 2번정도 형식적인 감사에 나간다" 한 일선공무원의 증언이다. 이러한 관

심을 김국도씨는 '법인운영과 사회복지시설 관리'란 논문에서 "시설과 공직자간의 이중적 부조리"라고 밝히고 있다. 책임을 방기하는 정부와 돈벌이에만 급급한 시설장과의 유착관계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덮어놓고 방치하게 만드는 첫째 요인이다.

시설에 대한 거부감마저 들게, 이런 상황에서 시설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좋을리가 없다. 전국자원활동

단체협의회가 93년에 행한 '사회복지시설 주변 주민 의견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환경은 나쁘다',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우리 동네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등의 이유로 자녀교육상의 문제와 지역위화감을 들고 있다. 시설에 대한 일반의 거부감은 시설문제를 더욱더 음지로 몰아가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설의 폐쇄성은 언론이나 관련전문가, 민간단체의 접근을 막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사태가 터져나올 경우에 대응책은 항상 주변을 맴돌 뿐이다.

시설의 공개만이 해결책

그러므로, 사실의 공개성을

적극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하나의 바람직한 현상을 들자면 올해 들어 보건복지부는 정신요양원에서 강제노역 구타등 잦은 인권침해 시비가 일자 수용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운영의 정기적 공개 △시설운영에 환자보호자는 물론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민간감시체계 구축"등을 뼈대로 하는 '95년도 정신보건사업지침'을 전달했다.

대규모 시설을 점차 소규모로 전환하면서 이들이 지역사회 일원들과 함께 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시설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실제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주민을 비롯 전문가, 언론과 시민단체에 시설을 공개하고 투명한 운영을 하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대대적인 검거선봉 조짐

- 때늦은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등

서울시 경찰청이 과거 운동권 학생 출신들을 계속 대대적으로 연행하고 있어 다시 검거선봉이 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시경찰청은 24일과 25일 아침에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생 13명을 연행하여 조사중이다. 경찰이 이들을 연행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홍제

동 대공 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에는 92년 대규모 반국가단체로 발표되었던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애국동맹 산하 5.1위원회'와 관련하여 이범준(32)씨 등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교수들 사상최대 집단행동

5.18 특별법안등 국회청원

5.18 진상규명을 위해 전국적인 최대 규모로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22일까지 78개 대학 3천5백60명 교수들은 5.18관련 서명 및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어 24일 '5.18내란 주동자 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서명 교수 결의대회'를 여성백인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교수들은 △5.18관련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공소권없음'취소 △12.12군사 쿠데타 재조사 △5.18관련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것 △특

별법 제정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결의했고 '광주민중화운동진상규명등에 관한 법률(안)'과 '헌법파괴적 범죄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특히, 범국민적으로 5.18특별법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때에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은 큰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25일 헌법재판소에 5.18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삼청진상규명투쟁위원회 진상규명 제차 요구

「삼청교육진상규명 전국투쟁위원회」(위원장 서영수)는 22일 삼청교육사건 고소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자 삼청교육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고 제차 요구하고 나섰다. 투쟁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면죄부 결정은 국민들과 피해당사자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모호한 것으로 수사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투쟁위원회가 밝힌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삼청교육학살의 사전계획 및 실사배경 △사망,부상자들의 정확한 숫자 △일상적인 폭력과 총기사건의 실상 △삼청교육관련 기록폐기 진상 △행방불명 및 무효직자에 대한 진상 △순화교육근로봉사감호조치 변화의 배경 △7천5백57명의 강제수용배경의 책임소재 규명등이다.

진보언론 '말' 필권행위로 노조위원장 징계

진보적인 잡지의 대명사로 알려진 시사 월간지 『말』(대표이사 노항기)의 노조위원장이 징계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말』의 경영진은 지난 18일 '해사행위'를 이유로 신준영 노조위원장(33)에게 징계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사건은 현 경영진이 노조가 제시하는 신규사업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친분 있는 인물들 직원들의 동의 없이 영입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세문씨 집행유예 석방

비전향 출소 장기수고 윤기남씨 장래와 관련하여 지난 3월11일 국보법상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되었던 기세문(60)씨가 25일 징역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세계여성회의 비정부기구(NGO)포럼

북경 화이러우에서 8월 30일-9월4일까지

오는 8월 30일부터 중국 화이러우에서는 '세계여성회의 비정부기구(NGO)포럼'이 개최된다.

한국 여성단체들은 93년 3월 부터 NGO 포럼을 준비해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의 배상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캠페인과 심포지엄을 연다. 이 심포지엄의 주제는 '전쟁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중 집단폭력을 중심으로 UN과 인권관련 전문가, 국제법가들이 참석해 문제해결을 논의한

다. NGO위원회는 이 심포지엄과 함께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진출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펼쳐 계획이다.

또한 NGO위원회는 정치세력화, 여성폭력, 개발, 환경, 평화등 11과 분과별 포럼에 참가해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연대를 모색한다.

NGO위원회는 이번 행사장에 NGO위원회, 정대협, 환경 관련 사진과 홍보물을 전시한다.

삶의 질 어디까지 왔나.

통계청은 18일 '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을 발표하여 인구, 노동, 산업생산등 각분야를 세계 여러나라와 비교 분석했다. 사회권의 주요내용인 노동, 사회보장, 의료, 교육등의 지표를 통해 한국의 인권지수를 매겨 보도록 하자.

<노동>

- 제조업 주당 평균노동시간 49시간(92년)으로 세계 최대
- 노동제해율 노동자 10만명당 19명으로 세계3위(1위 요르단 4백58.5명), 2위 체코 30.5명)

<의료/보건>

- 의사비율 인구10만명당 1백11명 (이탈리아 4백75명, 스웨덴 2백53명, 캐나다 2백24명, 일본 1백75명)
- 총 정부지출 대비 보건비 지출은 0.9%(미국 16.0%, 호주 12.7%, 독일 18.1%, 아일랜드 13.0%, 영국 13.9%)
- 간암 사망률 남녀 각각 세계 1위

<사회보장>

- 중앙정부의 세출구성중 사회보장 및 복지비는 9.3%(미국 28.5%, 캐나다 35.1%, 뉴질랜드 39.6%, 독일 48.5%, 스웨덴 50.7%, 영국 33.1%)

<교육>

- 초등교육기관 교사1인당 학생수 31명 (미국 15명, 프랑스 16명, 말레이시아 20명, 대만 25명, 타이 17명)
-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여학생취학비율 35%(구서독 41%, 프랑스 54%, 일본 40%)
- GNP대비 총교육비지출 4.4% (미국 5.3%, 일본 4.7%, 스웨덴 8.8%, 대만 5.7%, 말레이시아 5.5%)
- 총 정부지출대비 교육비 지출 14.8%(미국 12.3%, 덴마크 11.8%, 일본 16.5%, 대만 17.1%, 말레이시아 16.9%)

<환경>

- 이산화탄소 방출량 세계 14위

평화와 인권

제 37 호 (95.9.4)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민간단체 국가이미지 손상시킨다”

세추위, 민간 국제연대활동에 왜곡된 시각 보여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민간단체들의 국제연대활동에 대해 국가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는 행위를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비난했다.

세추위는 보고서에서 "국내민간단체들이 국제인권회의등 'NGO활동'에 참석하여 우리의 실상을 편향되게 소개함으로써 국가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외국인들은 우리의 특수상황에 대한 이해없이 이들의 일방적인 설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용환 변호사(36,민변 국제위원장)는 "국가 이미지 손상의 책임을 국민과 민간단체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지난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민간단체들이 한일일은 김선명씨가 42년간 감옥에 있다는 것과,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석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실이 편향된 것이라면 편향되지 않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정부는 국제회의에서 수준이하의 거짓말로 오히려 나라방신을 시킨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비난했다.

조변호사는 유엔 인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등이 한국의 법과 제도가 인권을 탄압하고 부당한 것임을 여러차례 지적,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덧붙여 그는 "국제사회의 정당한 지적을 귀담아 듣기 는 커녕 눈과 귀를 닫고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가의 이미지와 정권의 체통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성훈(34, 인권협국제연대 간사)씨도 "진정한 세계화는 인권, 평화등 보편적 가치의 확대를 의미한다. 세추위는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서 국가의 체면이나 이미지만을 걱정하고 있다. 결국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경쟁력에 인권을 종속시키고 있다. 이것은 거꾸로 된 세계화"라고 꼬집었다.

보고서 중 '국가이미지개선방안'은 총19쪽으로 한국의 국가이미지 실상과 문제점, 국가이미지 개선추진과제 등을 분석해 놓고 있다.

한·일 장애인 삶의 질 현저히 낮아 -한일장애인국제교류대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일본장애인전국공동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일 장애인정책의 현황과 과제'란 제목으로 28-31일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1회 한일장애인 국제교류대회를 갖는다.

김정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씨는 "해방 50주년을 맞아 화해의 장을 여는 의미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해 한·일 양국의 경험을 나누고 해결방법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교류대회를 갖

는다"고 밝혔다. 29일 이들은 '장애인과 사회통합'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운동 △고용 △교육 △사회환경등의 상황을 토론했다. 토론에서 한·일장애인의 고용상태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장애인의 일반고용 전체 장애인의 0.44%이고 일본의 경우 공공서 2.0%, 민간기업 1.6%로 대기업일수록 장애인의 고용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장애인들

도 단순생산직 근무가 대부분이고 월급여 수준도 일반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취학률은 한국의 경우 의무교육인 국민학교 진학이 19.7%, 중학교 진학은 11.97%에 그치고 있다. 또한 97%에 이르는 29만명의 장애아동들이 조기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가장애인교육과 직업재활교육은 전무하다. 일본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9년의 의무교육후에는 치열한 고교입시가 이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박탈되는 선별, 격리교육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참석자들은 소주제별 분반토론을 통해 한·일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격리, 분리되어 있고 이것은 진정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공유하였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장애인의 생존과 평등한 보장을 위해 장애인 문제를 인권문제로서 인식하고 공동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장애인 운동의 동지로서 풀뿌리 교류를 충실히 확대하여 간다"는 등의 5개조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류대회에는 일본장애인 2백여명, 한국장애인 1백여명등 총3백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대회는 31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폐막하였다.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지난 7월 19일 검찰이 5.18 광주 책임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8월 15일로 법적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광주학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광범하게 형성되고 있다.

지난 24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대표 김상곤등)는 광주특별법과 함께 국회에 「헌법 파괴적 범죄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을 청원했다. 이 법률안에는 대상 범죄로 내란죄와 외한죄, 반란죄, 이적죄, 고문이나 집단학살 등의 범죄를 적시하였다. 또, 위 범죄들에 대해서 "법 시행일 이전에 행해진 경우에는 범죄행위 당시부터 공소시효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안 작성에 중심적 역할을 한 박노현(방송대, 법학)교수는 "헌법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둘 수 없다"며 "공소시효는 헌법적 질서를 준수한다는 전체 위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지, 헌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범죄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원순변호사도 「역사와 비평」가을호에 실린 「세계 각국은 과거사를 어떻게 심판했는가」라는 논문에서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하여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전범과 반인도적 범죄자들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형태로 공소시효를 제거함으로써 지금도 계속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법에서 시효를 연장한 독일, 특별법

을 두어 처벌을 가능케 한 영국, 프랑스, 68년 유엔이 제정한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적용을 배제한 경우 등을 들었다. 박변호사는 "독재정권에 의하여 벌어진 각종의 잔혹한 인권침해 역시 비인도적 범죄의 유형에 속하며, 이러한 '국제적 범죄'는 마땅히 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성립, 발전해 왔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문, 살해, 강간, 약식처형, 불법구금 등의 '인도에 대한 죄'와 '평화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대세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현실은 사뭇 다르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기다려 보아야겠지만, 이번 5.18 광주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대개는 각하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이전에 양심수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시키는 등 공소시효를 절대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제노사이드조약>
제 3 조 「불처벌」
다음의 제행위는 처벌한다. 가. 집단학살 나.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공모 다.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직간접 적인 교사 라. 집단학살의 미수 마. 집단학살의 공범

'5.18특별법제정을 위한' 익산시민 결의대회

5.18학살자 처벌과 특별법 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익산 시민결의대회가 9월 2일 토요일 오후 4시 익산역광장에서 열렸다.

익산민주시민 연석회의(연석회의, 상임대표 전병생) 주최로 열린 이날 결의대회는 시민 학생등 130여명이 참석하여 거리행진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5.18특별법제정의 의미를 선전하였다.

지난 7월에 결성된 연석회의는 3천명의 거리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다.

또다시 반국가단체 밀미로 우석대학생출신 5명 구속

국군 전북지구 기무부대와 전북경찰청 보안과가 또다시 군인 4명과 제적학생 1명을 「자주대오」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하였다는 혐의로 구속하여 학생운동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육군에서 병장으로 근무중인 서운근(24)씨등 5명은 지난 94년 전주우석대 재학당시 「자주대오」란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뒤 「주체사상에 대하여」등을 비롯한 불온서적을 통해 주체사상을 학습하며 복합을 찬양, 고무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주우석대총학생회와 관련자가족들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하였을 뿐이며, 기무사와 보안과의 이같은 탄압은 학생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조작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형시간근로제 반대" 민주노총 성명

최근 정부가 '중소사업자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에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 파견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노총(준)은 8월 31일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준)은 "정부의 방침으로 전체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강행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변형근로시간제는 사용자 주 44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일일노동시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주 44시간, 일일8시간 노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자가 8시간 이외에 해당하는 잔업을 할 경우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변형근로시간제가 시행되면 주44시간의 한도에서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해도 추가근로수당이 없다.

근로자파견제는 사용자가 용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금도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는데 용역업체는 소속 노동자의 임금에서 30-50%를 관리금 명목으로 거두어들이고 있다. 집단해고제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를 집단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준)은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수당이 없어지고 노동자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근로자파견제가 도입되면 용역업체가 중간에 가로채는 돈이 합법화되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진다"고 우려했다.

평화와 인권

제 38 호 (95.9.18)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5.18 특별법 제정 요구 전국 확산 전북지역 각계각층 선언운동전개 예정

검찰5.18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한 국민적 항의가 정기국회 개원이후 더욱 확산되어, 특별법 제정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하자는 행동을 모아지고 있다.

9월 16일 서울과 지방에서 동시다발로 대대적인 항의 집회가 열렸다.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이창복등, 5.18국민위)16일 오후 2시 여의도광장에서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4차 국민대회를 가졌다.

5.18국민위는 "1차 청원뒤에도 1백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계속할 것"이며, "절대적 국민여론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광주 학살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이를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공동대표 함세웅 신부등, 정의구현사제단)은 사제와 신도를 포함한 약 12만명의 서명을 받았고 18일 국회에 청원했다.

9월 16일 오후 4시 전주교아백화점앞에서는 민주주의 민족통일전북연합, 5.18민중항쟁전북동지회 주최로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촉구대회」를 가졌다. 시민과 학생 3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광주문제해결을 위한 합법적인 제도적 장치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대학교수 2백3명등 교수들도 5.18진압책임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의하는 성명을 냈고, 학생 종교인들도 5.18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검제 도입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각계각층 선언운동전개

전북연합은 앞으로 5.18문제에 대해서 종교계, 여성, 청년, 노동, 각종사회단체의 선언운동과,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 1만인 선언」 과 선언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5.18특별법 제정 국회청원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한다.

3자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유엔인권이사회, 정부에 개정 요구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7월 19일 우리나라의 제3자개입금지가 유엔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조약)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 했다고 정부에 개정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권조약의 해석에 가장 권위있는 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번 결정으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민주노조 결성을 앞두고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이사회는 손종규(전금호노조 위원장)씨가 92년 7월 이석대 변호사등을 통해 인권이사회에 통보하였 다. 이에 대해 정부측과 손씨측의 반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결정을 내려, 이를 지난 8월 한국정부와 손씨측에 통보했다. 인권이사회는 최종 견해에서 "손종규씨의 행위를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보는 것은 자유권조약 제19조 2항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 정부는 손씨에게 배상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고,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을 재검토하여 장래에 이

일 민간기금 위안부 조사 정대협 등 여성단체 반대

국내 일본군 위안부들과 「정대협」 「여성단체연합」 「전국여대생대표자회의」등 23개 여성단체들은 12일 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민간기금) 조사단 파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한국방문계획취소 △민간위문금 계획취소 △국제법에 따른 배상 실시 △일본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위안부 명단 공개 등을 주장했다.

일본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민간기금」은 지난 7월에 발족되었는데 아시아 정신대관련단체들은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들의 문제를 축소·정리하기 위해 만든 단체"라며 설립초기부터 반대해 왔다.

러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며, 90일 이내에 한국정부가 취한 조치를 보고할 것"등을 요구하였다.

손씨는 지난 91년 2월 대우조선노조의 파업을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제3자개입금지 조항 위반혐의로 구속, 1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기각당했다. 손씨는 지난 92년 7월 자유권 조약과 선택의정서에 근거하여, 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을 인권이사회에 통보, 이런 결정을 받게 되었다.

정의구현 사제단 통일염원 미사
1995년 9월 25일 오후 7시 전동성당

'종합병원' 장애인 경시풍조 조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과 요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이성재, 장애우연구소)는 13일 MBC에 항의서한을 발송, 지난 3일자 방영된 종합병원이 "이미 태어난 장애아동을 수술하지 않고 죽도록 방치하는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장애아동을 출산한 부모와 의사가 이와 같은 행태를 따라할 것이 우려된다"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우연구소는 「서울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종합병원의 '생의 조건'편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술하면 살릴 수 있는 아이를 장애가 있다고 수술하지 않고 사망케 해 생명에 대한 경시를 조장하고 있는 점 △장애아동을 출산한 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데 이런 경우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 및 운동치료,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아과 의사 개인의 경험을 여과없이 부모에게 얘기해 결국 아이를 포기하게 했다는 점 △장애인 가정은 모두 불행한 것처럼 묘사한 사카고 의사의 비리 및 비인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반대급부적으로 아이가 죽어 버린 점 등이다.

장애우연구소는 17일과 24일분 '종합병원' 방영직전에 공개사과하고 △장애아동을 출산한 부모와 의사가 출산 장애아동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제2차 세계주거권회의, 민간위원회 구성

오는 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2)를 준비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모임이 6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있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28일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간사단체로 '전국민민협의회'(상임대표 김진홍, 전민협)를 선정했다.

제2차 세계주거회의는 76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 이어 20년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도시문제와 주거문제에 관해 유엔이 주관하는 세계회의이다.

96년 6월 3-15일까지 열리는 2차회의에서는 무주택자의 주거문제, 도시의 인구증가 등을 포함하여 도시문제 전반을 다루게 된다.

미군범죄 발언 사과요구 운동본부 토론회 제안

최근 레이니 주한미대사(8월24일), 나이 미국방부 차관보(9월6일)가 연이어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민의 여론을 언론의 왜곡보도 탓이라고 발언하고 나서자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전우섭 등, 운동본부)는 13일 주한미대사관을 방문, 레이니 대사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운동본부는 "레이니 대사가 한국인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한미행정협정의 전면 개정등 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빨리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오는 26일경 공개토론회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북한 수재민 돕기 캠페인 전북여성단체 연합 한달간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북한 수재민 돕기 운동을 시작한 데 이어 여성단체들도 이에 호응하고 나서 북한 동포돕기 운동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20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회장 이미경 등, 여연)은 수해를 당한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15일부터 한달동안 펼쳐진 캠페인을 위해 여연 소속 각단체와 지역조직에 물품 접수창구가 설치되어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회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5일 성명을 발표하여 "정부가 민자당과 보수세력의 반발을 의식해 북한의 수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적극 나서서 남북 상호간 신뢰구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전북여연 0652-86-3457)

검찰총장등 탄핵소추 검찰총장 내정자 교체요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회장 김상곤 등 3명, 민교협)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5.18쿠테타에 대한 공소권없음 결정 주역인 김도연 검찰총장, 송중의 대검차장, 안강민 대검공안부장, 최영광 서울지검장, 장운석 서울지검 공안1부장과 상급기관인 안우만 법무부 장관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했다.

한편, 11일 청와대가 김기수 현서울고검장을 김도연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발표하자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12일 논평을 발표, 검찰총장 내정자의 교체를 요구했다.

전국연합은 "5.18 불기소 처분과 4천억 비자금 축소 수사등으로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만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검찰의 독립성을 무시한 채 권력유지를 위해 검찰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전북여성의전화 제6기 여성상담원 공개교육 ●

교육내용은 부부문제, 법, 언론매체, 올바른 성문화등 여성문제를 다양하게 접근함으로써 여성이 처해있는 현실과 문제를 제기한다. 여성의 전화는 공개교육을 통하여 20여명의 상담원을 배출하였다.

시간은 오전 10:30~12:00까지 (전화 : 0652-87-7324)

△ 일 정 △

- 10월 9일(월) : 한국사회 현실과 여성
- 10월 10일(화) : 부부관계학(남성에대하여)
- 10월 13일(금) : 상담사례를 통해서본 여성문제
- 10월 16일(월) : 여성상담과 상담원의 자세
- 10월 17일(화) : 여성과 범생활과 실제
- 10월 20일(금) : 성과 성문화
- 10월 24일(월) : 대중매체와 여성
- 10월 27일(금) : 상담기법 및 실습
- 10월 27-28일(금,토) : 인간관계훈련, 수료식

평화와 인권

제 39 호 (95.9.25)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 스 : 0658-45-0152

5.18 특별법 청원 잇따라 5.18국민위 1백만명 서명 추진

5.18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야의 입법청원과 야당의 의원입법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공동대표 이창복 등, 5.18국민위원회)와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강신석 등, 5.18공대위)는 22일 오후 3시30분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5.18특별법 제정을 입법청원하였다. 이번 입법청원에는 5.18국민위가 1차로 모은 28만4천7백93명의 서명부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관광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특별법청원경과와 취지를 밝혔다.

10일 까지 1백만명 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18일 천주교 측에서 12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특별법 청원한 것을 더하면 41만명 이상이 5.18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날 청원에서는 이미 법률안이 청원된 상태이므로 법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특별법 제정에서 꼭 들어가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에 5.18진상규명, 5.18 학살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특별검사의 임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들었다.

전북총련 삭발식 강행

9월 25일 오전 11시 전북지역총학생회연합(의장 엄성복, 전북총련)소속 대학생 150여명은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려 하자 경찰이 불법집회라는 것을 이유로 원천 봉쇄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검찰청 앞에 있는 건물 옥상에 올라 기습 삭발식을 진행하였고 경찰이 이들을 4명을 연행하였다. 학생들은 다시 전북대로 이동하여 17명이 삭발식을 진행하였다. 한편 소시효배제, 특별검사의 임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들었다.

철거민 강제로 옷벗겨 연행 암사동 철거현장 여성주민 주장

지난 19일 오전 서울 암사동 철거지역에서 옷이 벗겨진 채 경찰서에서 끌려간 문연희(상계3동 철거대책위 위원장)씨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경찰이 강제로 옷을 벗겨 연행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당시 암사동 철거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주민들을 지원하려 들어가려는 문씨에게 신분증 조사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문씨가 이를 거부하자 연행했다. 문씨에 따르면 경찰은 연행

이유를 묻는 문씨를 강제로 차로 끌고간 뒤 차에 타지 않으려는 실경이 과정에서 옷이 약간 들리자 이를 본 경찰이 "여자들은 옷을 벗겨야 말을 더 잘 듣는다"며 강제로 옷을 벗겨 차에 태웠다.

이러한 문씨의 주장에 대해 강동경찰서측은 "농성에 들을 지원하려 들어가려는 문씨에게 신분증 조사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문씨가 이를 거부하자 연행했다. 문씨는 "이번 일로 남편과

이혼하게 될지 모른다"며 경찰서장의 공식사과는 물론 담당자를 고소하겠다고 분개했다.

3자개입금지 철폐 민주노총, 하반기 집중

유엔인권이사회가 제3자개입금지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노동부가 19일 제3자개입금지 조항을 고수할 의사를 명백히 하고 나서서 올해 하반기 이를 둘러싼 노동운동전열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등, 민주노총(준))은 20일 을 하반기 노동악법 투쟁의 핵심고리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철폐로 확정지었다.

또, 유엔인권이사회가 결정을 최대한 부각시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철폐를 위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준)은 9월말까지 노동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철폐를 촉구하며, 권영길 공동대표등 제3자개입금지 조항으로 수배중인 이들의 수배해제, 구속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고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제3자개입금지 조항으로 구속되었던 이들을 모아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농민탄압 공무원에 무더기 표창

-농림수산부 국정감사자료에서-

25일 농림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최옥철 의원은 93,94년 추곡수매와 쌀수입 개방정책에 항의하는 농민들의 시위를 방해하거나 진압하는 데 공로를 세운 경찰등 공무원 1백59명을 표창한 사실을 폭로했다.

1. 불법 예비군 동원

•전북 정읍군 내무과 공무원 김씨의 경우

92.11 전북 정읍군에서 농민시위에 대비하여 예비군 62명을 군청사 경비에 동원시켜 농민시위를 무력화시킨 공적으로 93년에 농림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음

2. 관계기관대책회의 소집 농민시위 대처 논의

•전북 정주경찰서 정보과

전국사제단 통일염원미사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공동대표, 함세웅신부등, 전국사제단) 제4차 통일염원미사가 9월 25일 8시 전주전동성당에서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심용섭신부(서울대교구)는 "통일염원미사는 우리의 염원이 북쪽에 닿을 수 있도록 기원하는 하느님의 순례이다"라고 말했다. 또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북쪽형제의 목소리를 듣고 장점을 배우려 하는 마음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의의 길을 향해 나아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사제단은 전국교회 통일염원미사를 실시하고 있고 제5차 통일염원미사는 청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 이씨의 경우 92.11 전북 정읍군, 정주시에서 유관기관대책위원회(정읍군, 정주시, 농협, 축협, 농지개발조합등)를 구성하여 농민대회 원천봉쇄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읍면 유관기관장회의(면사무소, 농협, 정주경찰서등)소집, 운영한 공적으로 93년도에 농림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음

3. 민주당 정당활동 방해

•전북 김제경찰서 정보과 경찰공무원 이씨의 경우

93.12.7 민주당 주최 쌀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국민 결기대회에 참석하려는 농어민 후계자등 농민들을 방해하여 대회참석자들을 축소시킨 공적으로 94년 농림수산부 표창을 받음

서울구치소, 박장로에 비인도적 처우

심장발작을 일으킬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박용길(76)장로가 서울구치소(소장 김명배)의 여사에 병동이 없다는 이유로 0.75평 독방에 아무런 간병조치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등 비인도적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당뇨병 때문에 식이요법으로 치료를 해야 함에도 일 반수들이 먹는 맵고 짠 음식을 그대로 지급 받고 있어 충격 더해주고 있다.

22일 접견한 백승원 변호사에 의하면 "운동시간에도 겨우 햇볕을 쬐는 정도등, 심신이 허약한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조작사건에 이어 프락치 사건 발생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학생들 강력 반발

전주북부경찰서 보안과가 전북대학교에서 계속적인 학원사찰과 프락치 행위를 하고 있어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에 의하면 북부경찰서 보안과 소속 주성철씨가 94년 총학생회장 임효준씨의 검거하고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학내에 자주 드나들면서 학교직원등을 매수하여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사건 관련자인 전북대 수위실의 한 직원이

프락치 활동과 돈(4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데도 전주북부경찰서장은 '학생들의 불필요한 오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지역총학생회연합은 성명서를내고 "전북도정은 원광대에 이어 우석대에서 조작사건을 만들어내어, 공간탄압을 계속하더니 이제 프락치 공작마저 서슴치 않고 있다"며 진상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국가보안법 부칙조항 형평성에 어긋나 이화춘씨 대법원 상고심공판 원심 확정

9월 15일 대법원에서 열린 이화춘씨의 상고심 공판에서 원심의 형량인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해 김한주 변호사는 상고이유서에게 이화춘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이 1991년 5월 31일 개정되었는데 이화춘씨의 경우는 개정되기 전의 법률이 적용됨으로써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보안법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여 벌칙에 있어서 개정후의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개정전의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행위당시에는 무거운 죄로 판단하여 처벌하였더라도 그후 처벌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 굳이 과거의 무거운 벌을 적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부칙 제2항은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도 없이 벌칙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무거운 구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법의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인 것이다.

변호인측은 구국가보안법(1991.5.31.법제4373호로 개정되기전의 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현행국가보안법 부칙(1991.5.31)제2항(경과조치)에 대해 위헌여부심판제정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평화와 인권

제 40 호 (95.10.2)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5.18학살자 처벌을 위한 전북지역 투쟁 가속화 종교, 교육, 여성등 각계 선언 시작

5.18학살자 처벌에 대한 전국적인 투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5.18 학살자 처벌을 위한 투쟁과 1만인 선언을 계속하고 있다.

전북지역총학생회연합(의장 엄성복)소속 8개대학 대학생들은 29일 동맹휴업을 실시하고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5.18학살 책임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총결기 대회'를 가졌다.

26일 상오10시에는 천도교 동학혁명 기념관에서 천도교, 천주교, 원불교, 개신교 4개 종단 대표자들은 '5.18 학살자 처벌특별법 제정 촉구 전북지역 종교 지도자 선언'을 발표하고 "광주문제는 죽은 자들은 있지만 죽은 자들은 없다. 종교적 양심은 거짓과 타협하지 말 것과, 학살자들을 무조건 용서하고 감싸 주라고 말하지 않는다"며 범종교적 연대운동과 광주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각계 각층과 싸워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내 초중고교사들도 '5.18 학살 주동자 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북교사선언'을 통해 "미래의 주인공 아이들에게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더라도 성공하면 합법성을 부여받는 현실에서, 거래의 역사를 올바르게 잡아

야 할 소명이 있기에 정부 당국에 5.18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여성운동연합(상임의장 엄영애)등 전북지역 여성단체들은 '5.18 관련자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북여성 251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에서 "지난 7월 18일 검찰의 '공소권 없음'의 결정은 광주 민주화 운동과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한 올바른 법적 판단을 기대했던 국민의 열망을 무참히 꺾어버린 것이며, 전북여성 200인은 모든 세력과 연대해 특별법 제정과 광주 학살자들을 법정에서 세위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는 10일에는 전북지역 교수 91명이 공동발의단을 구성해 전북지역 교수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5.18관련 사법심사를 촉구하는 전북지역 교수 연대성명 및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각계의 선언에 이어 오는 10월 5일 목요일 오후 7시 원불교전주교구청 4층 대강당에서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북연합, 전북민주전북교사선언,을 통해 "미래의 주인공 아이들에게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더라도 성공하면 합법성을 부여받는 현실에서, 거래의 역사를 올바르게 잡아

야 할 소명이 있기에 정부 당국에 5.18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총연맹추진위원회(공동대표 이송준등)도 '5.18 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조화원 서명 작업을 시작하였고, 지역차원에서는 "5.18 특별법제정을 위한 익산민주시민연석회의" (상임대표 전병생)를 중심으로 익산시민 518인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재야노동연구소에서 고성능 도청기 발견돼

25일 서울 봉천동에 위치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소장 김세균, 연구소)서 고성능 도청기가 발견된 뒤 연구원의 집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내가 전화를 걸어 "협상"을 제의해와 도청기 설치자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25일 오후 2시경 연구소의 현관문(33)씨가 전화선을 확인하다 옆 건물 지하계단 통로로 연결된 전화선을 옥상에서 발견하였고, 이 선을 따라가 간장약 헬민 박스 안에 들어 있는 도청기를 발견했다. 이후 연구소 측은 봉천전화국에 이 사실을 통보, 전화국직원이 도청기침을 확인했는데 도청

기는 고성능 통화조절기능을 갖춘 독일제 도청기 그릴 플러스(Green Plus)로 소형녹음기에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해 연수소측은 26일 성명서를 발표, "민주노동운동에 진보적 연구소가 이론적-정책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며 "민주노동운동과 이를 지원 하려는 모든 진보적 단체에 대한 반민주적, 반인권적폭거"라고 비난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도 "경찰은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인 정보, 공작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 4월에도 만기출소한 장기수 박정숙(79)씨의 집 장롱 밑에서 도청기가 발견돼 경찰에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전해부, 병역특례 해고자 국방부 항의방문

국방부 국정감사가 진행된 27일 오전 9시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장영길)소속 회원 20여명은 병역특례해고자 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국방부 항의방문을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군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민주당사 농성에 들어간 병역특례해고자 10명은 농성 7일째 "문제해결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민주당측의 약속을 받고 농성을 풀었다.

김교사성폭행사건 항소심 승소 평가 토론회 “여성계의 단합된 행동의 결과”

26일 오후 2시 성폭력예방 치료센터에서는 '김교사성 폭행사건'의 승소판결에 대한 평가 및 토론회가 여성 단체들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번 사건은 기존의 통념을 무너뜨린 본보기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아길수 있다는 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 여성계의 단합된 행동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의 법적 자문 역할을 담당했던 이종걸 변호사는 “아직 완전한 승리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고소권자로서의 자격유무를 해석하는 문제나, 증거자료를 제시해야만 처벌받도록 되어있는 위치에 의한 강간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여성계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맞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폭행 피해자 피고석에 봉천동 전철순씨 재판

지난 4월 철거반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전철순(40, 봉천 6동철거민대책위 대표)씨가 경찰폭행죄로 재판을 받았다.

27일 오후 3시 서울형사지법 재판부는 김성식, 김재홍순경(관악경찰서 소속)이 낸 폭행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성식 순경등은 지난 5월 17일 신고를 받고 봉천6동 철거대위 사무실 앞으로 출동하자 이를 본 전씨가 경찰차를 부수고 폭행을 휘둘렀다며 전씨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주민들은 “그날 현장에는 철거대위 주민 7명이 있었고, 경찰 12명이 순찰차 4대에 나눠타고 와 수적으로 불대폭행이나 경찰차 파손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전씨는 성폭행상처를 치료받고 얼마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전씨의 성폭행사건이 커지자 경찰이 보복하려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5세아 취학반대, 유치원 공교육화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유치원교사들의 모임인 '유아교육을 위한 인천교사모임'(회장 김혜은, 유인교)는 30일 오후 5시 인천 가톨릭회관에서 5세아동 국민학교 입학에 대한 국민학교, 유치원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연다.

교육부는 지난 8월 31일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방안'공청회를 갖고 만 5세아동 국민학교 입학 허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들은 “정부가 유치원에 국민학교의 40분의 1, 중·고등학교의 25분의 1정도밖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만 5세아동을 입학시켜 영세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보다 국민학교 입학전에 다니는 유치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유치원 공교육화'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아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모임'은 9월부터 교육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전용복지공장은 분리고용정책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장애인 고용 문제점-

26일 감사원이 노동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30대 재별기업 2백99개 업체 중 장애인 고용율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2%에 훨씬 못 미치는 0.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7월말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2천3백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적용대상인 27만9천8백여명의 0.83%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2%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다.

한편 25일 진남 노동부장

관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전용 복지공장을 전국 15개 시에 1개씩 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36) 실장은 “정상인과 분리고용하려는 노동부의 왜곡과 편견, 무지를 드러낸 것이고 장애인 고용정책이 통합고용이 아닌 분리, 보호고용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먼저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올바른 장애인 고용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 참교육학부모회 언론모니터교육

참교육학부모회 전주지회는 26일 '한국언론의 현황과 문제점'이란 주제로 강좌를 개설하였다.

이 모니터 교실은 TV 및 신문 등 언론매체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 건강하고 알찬 교육프로그램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감시자와 여론의 기능을 기하기 위하여 개최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모니터 활동의 정착과 질적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교육과 주 1회 후속모임을 갖고 도내 타 분야 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와 연대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두번째 강좌는 '방송보도론'이라는 주제로 10월 4일(수)상오 10시 30분에 CBS(수)상오 10시 30분에 CBS 보도국 최인기 기자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성폭력상담소 성희롱예방비디오 시사회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성폭력상담소)는 25일 오후 2시 대학로 인텔아트홀에서 자체 기획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비디오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의 시사회를 가졌다.

이 비디오는 사무실 잡무나 개인적인 심부름시키기부터 노골적인 언어폭력, 신체적 접촉, 접대부로 만드는 회식 자리등, 직장여성이 사무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성희롱 사례와 그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매년 늘어나는 성희롱의 원인을 “성희롱을 ‘직장의 윤활유’로 여기는 왜곡된 성문화와 여성에게 불리한 지위체계, 여성을 상품화하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평화와 인권

제 41 호 (95.10.9)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전북지역 5.18 특별법 제정운동 계속 확산 도내 경찰, 5.18서명자 및 선언자 뒷조사로 물의

5.18 학살자들에 대한 전북지역 각계각층의 선언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5일 오후 7시 원불교 전주교구청4층 대강당에서 '5.18관련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북지역 각계 선언인 대회'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북대 김승환 법대 교수는 '5.18 '공소권 없음' 결정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연설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김교수는 '공소권 없음'의 법적근거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결정은 사법부의 권한이지 검찰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결정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95년 8월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에게 사실상의 형사소추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노대통령의 재직기간동안은 공소시효 제외해야 하며 전두환씨의 공소시효는 2003년 2월 8일, 노태우씨는 2000년 8월 15일 완성된다”고 말했다.

또한 “5.18에 대한 방대한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찰부를 설치해야 하며 이와 함께

5.18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배제규정, 기소강제 규정,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으로 5.18수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5.18사건에 대한 수사소추기간과 재판 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않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속에서 5.18책임자 처벌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언자들에 대한 탄압조짐 익산시민 연석회의등

한편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5.18관련자를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도내 경찰 일부가 5.18서명운동자와 선언자들에 대한 뒷조사를 시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한편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5.18관련자를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도내 경찰 일부가 5.18서명운동자와 선언자들에 대한 뒷조사를 시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의 경우 특별히 경찰의 조사를 받을 일이 전혀 없는데다가 최근 5.18관련 활동을 하면서 조사가 시작되어 5.18관련 수사인것이 하나같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 단지 뒷단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짐작할 뿐이라는 것이다.

시민들은 경찰의 이러한 조치가 5.18서명운동과 선언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교란술책이자 명백한 시민권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경찰의 이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의 수사는 익산민주시민연석회의 회원뿐 아니라 전남북지역 교사선언자와 익산노동자의 집등 노동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5.18국회 위증 수사 촉구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은 6일 민자당의 5.18 위증수사반대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에서 “민

자당은 5.18 국회위증자들이 국회법을 어기고 위증을 한것이 명백한 사실인데도 수사를 막는 것은 스스로가 범죄집단을 비호하는 세력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자당은 지난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이하 민변)의 5.18 국회위증관련자 검찰 고발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에 대한 고발유무의 판단은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이 할 수 있다”며 “제3자의 고발이나 검찰의 자체결정으로는 위증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

시민단체들, 관변단체 예산지원 삭감요구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한국 YMCA연맹, 환경운동연합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시민단체협의회는 28일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관변단체지원금을 올해보다 39.1%가 늘어난 7천7백68억원으로 책정했다”며 “이는 6.27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정부와 민자당이 관변단체를 이용해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성의 평등 실현 전략 마련 성과” 한국 NGO 위원회 북경 세계여성회의 보고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 세계 인권문제로 보고 행동 강령으로 채택하는 성과를 낳은 북경세계여성회의의 보고회가 「한국NGO위원회」 주최로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4만여 명이 참여한 북경회의는 20년에 걸쳐 여성의 평등, 국가발전,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실적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할 행동 계획과 북경선언문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8월 30일 -9월 8일까지 열린 NGO포럼 참가보고에서 이연숙(한국NGO위원회 공동대표)씨는 전세계 2백여국에서 2만6천여 명이 참가해 하루평균 5백차례씩 회의기간에 총 5천여차례의 다채롭고 폭넓은 행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이번대회에서 한국여성문화기획의 사물놀이팀의 활약을 비롯해 한국 NGO 활동은 최고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간 국제무대를 중심으로 한 정대협 활동은 정부간 회의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또한 '행동강령 중 '여성어린 이'의 차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동성연애자의 문제, AIDS 환자의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한다.

NGO포럼에 뒤이어 9월 4-15일까지 열린 정부회의에는 1백89개국 정부대표 5천7백여명을 포함해 1만3천여명이 참가했다. 회의를 통해 향후 5년간 각국이 정책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주요 관심분야로 12가지 분야가 선정되었다.

종암서 경찰, 대학생에 총기 난사 번3동 철거현장에서, 주민들 책임자 처벌 요구

경찰이 철거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하던 대학생의 옷을 모두 벗기고 수갑을 채운 채 끌고 다니며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종암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4일 새벽 4시경 드림랜드 후문쪽 번3동 철거지역 강제철거에 대비해 규찰을 들고 있던 설영덕(한성대 산업공학과)씨를 강제 연행하려다 이같은 난동을 저질렀다.

이번 사건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갑을 채우고 총기난사까지 벌인 것은 명백한 살인미수"라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종암경찰서측은 "이 지역에서 강도신고가 들어와 출동했으며, 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져 총을 쏘았다"고 주장하였다.

번동 경찰 총기난사와 같은 경찰폭력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도 경찰은 '고려대 서캠퍼스 총기난사사건' '암사동 철거 주민 나체연행' '5.18 대회 장 난입'등 지나친 공권력 남용을 행사했으며 책임자 처벌에 있어서도 미온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88명 산재 보상 청구 ‘귀향모임’, 1년여동안 사례수집

산재를 당한 후 치료와 보상도 받지 못하고 추방당한 동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 88명이 5일 노동부에 산재보상청구서를 제출했다. 「귀향한 외국인 노동자 체불임금, 산재보험금 찾아주기 시민모임」(귀향모임)은 지난해 5월부터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등 4개국을 방문하여 피해사례 2백여 건을 수집, 이중 지난해 9월 22명의 산재 보상을 요구한데 이어 이날 다시 산재보상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날 산재보상 명단에는 네팔 30명, 방글라데시 14명, 스리랑카 2명, 필리핀 42명 등 총 88명이 포함되었고, 이중 14명은 지난해 1차 산재보상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다.

박용길 장로, 첫 재판 거부

서울지법 형사4단독(판사 조승곤)은 4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21호 법정에서 박용길(76)장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열려 했으나, 박장로는 "국보법으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했다.

박장로의 법정대리인 한승현 변호사는 "박씨는 국가보안법을 법률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 법으로 재판하는 것은 모독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용길 장로 석방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근 등 3명)소속 회원들은 5일부터 기독교 회관7층에서 박장로 석방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전남영광 핵발전소 생존권 위협

최근 핵연료봉의 파손으로 인해 영광핵발전소 4호기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 2달여만에 알려지자 영광지역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광핵발전소추방협의회」(회장 박재완 신부 등 2명)는 1일 이번사고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국전력이 핵발전소에 대한 정보를 통제해 주민들을 위협에 빠뜨린다"며 "주민들과 정밀조사, 방호약품 지급, 영광3,4호기 가동중지 및 5,6호기 추가 건설 반대, 대체에너지의 적극개발"등을 촉구했다.

평화와 인권

제 43 호 (95.11.27)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Q658-44-0152 팩스 : 0658-45-0152

“특별검사제 없는 5.18특별법은 기만” 시민사회단체들, 특별검사제 강력 촉구

갑작스런 5.18특별법 제정배경 의구심

명동성당에서 지난 7월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진 직후 천막농성을 시작, 133일째 농성중인 광주 5.18 관련단체 회원들도 민자당 당사를 둘러싸고 특별검사제 도입을 투쟁국면을 준비해 들어가고 있다.

그동안 특별법제정을 요구 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갑작스런 발표의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김영삼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다. 단체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씻어버리기 위해서는 대선자금 공개 △특별검사제 도입등을 통해 5,6공과와 단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연합등 특별검사제 요구 민자당사 앞 시위

민자당의 5.18특별법제정에 특별검사제 불가방침이 밝혀지자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강력히 일고 있다.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소속 회원 500여명은 27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의사당앞에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회에서 “불과 몇달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검찰에 5.18수사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그러므로 “아직도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특별검사제가 없는 특별법 제정은 기만이다”며 특별검제를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민자당 사 앞까지 행진을 벌여 민자당을 둘러싸고 특별검사제 도입과 전두환,노태우씨등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를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 연세대에 머물고 있던 「광주 전남총학생회연합」(남총연) 소속 학생 500여명을 강경진압해 학생 20여명이 다쳤으며 전남대 박종채(18, 신방과)씨 등 2명이 연행되었다. 한편, 「한국대학생총연합」 소속 학생 50여명은 마포 민주당에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5.18비대위, 대통령의 ‘혁명적 결단’운운은 국민우등

「5.18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근 등, 5.18비대위)는 27일 헌법재판소의 5.18재수사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5.18비대위는 “김영삼대통령이 5.18특별법 제정을 발표하기 하루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5.18재수사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충격과 분노를 금

할 수가 없다”며 “헌재를 통해 검찰의 재수사를 결정하면서, 통치권자의 혁명적 결단이라고 늘어놓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광주시민을 두번 죽이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이미 5.18문제에 대한 공정한 수사능력을 상실한 검찰에게 재수사를 맡긴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전북지역, 특별검사제 요구 시위 전북연합, 익산민주시민연석회의등

지난 24일 민자당의 5.18특별법제정 방침이 발표된 후 전북지역사회단체들의성명과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북연합」(공동의장 한규채)은 민자당의 특별법제정 발표직후 특별검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28일에는 전주시 팔달로변에서 '5.18특별검사제 및 관련자 전원사법처리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특별검사제 도입 및 5.18 관련자 처벌의 범위를 주동자급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발표가 있던 다음날 「5.18특별법제정을 위한 익산민주시민 연석회의」(상임의장 전병생)는 시민학생등 150여

것으로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단식 풀어

지난 16일, 명동성당 앞에서 천막을 치고 5.18특별법제정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와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하면서 단식투쟁에 돌입했던 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장용주, 안충석신부등 10명의 신부들이 학살자가 처벌되는 그날까지 싸우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9일간의 단식을 마쳤다.

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익산시민선언대회'를 열고,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전상규명, 그리고 학살책임자 전원처벌"을 요구하면서 올바른 5.18특별법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조정권 공동대표겸 집행위원장은 “솔직히 말해 김영삼씨와 민자당의 5.18특별법을 어떻게 믿겠느냐”면서 “이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들은 선언대회를 마친 후 “익산시민 쟁취했다. 5.18특별법, 익산시민 쟁취하자. 특별검사제, 학살책임자 교수형”등의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을 벌인 뒤 시내 제일은행 앞에서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화형식을 가졌다.

정부와 민주노총 대립격화 권영길위원장 구속, 대화상대 불인정

정부와 민주노총간에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11월 11일 창립대의원대회를 마치고 정식으로 출범한 민주노총에 대하여 정부가 초대 위원장인 권영길 전 언론노련위원장을 구속하고, 설립신고를 반려하는등 대화상대로 민주노총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민주노총측에서도 앞으로 노동부를 정식대화통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는등 날로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23일, 권영길 위원장이 동대문경찰서 형사들에게 연행되어 방배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즉시 구속되자 민주노총은 서울지방노동청과 방배경찰서등에서 권위원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한편 3차개입금지조항을 비롯한 전근대적인 노동악법을 근거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는 정부당국을 규탄했다.

한편, 노동부는 권용목 민주

노총 사무처장이 접수한 민주노총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고 뒤이어 배석법 건설노련위원장등 민주노총 부위원장 4명이 공식요청한 면담신청을 법외조직이므로 응할수 없다고 면담을 거부하여 민주노총, 산하의 합법노조연맹조차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이에 민주노총에서도 노동부를 공식대화창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오는 30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의 노조대표자들이 집결하는 집회를 갖고 민주노총의 합법성을 인정할 것과 권영길위원장 석방을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공동의장 이송준·이철규)도 24일 권영길위원장 석방과 3차개입금지, 복수노조금지등 노동악법철폐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30일 전국노조대표자결의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하였다.

학살자특별대우 중단 요구 유가족협의회, 5·6공 의문사향의

5,6공시절 분신, 고문, 의문사등으로 죽은 이들의 유가족이 서울 구치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국민주화유가족협의회」(회장 박정기) 회원 20여명은 22일 오후 1시경 “학살자 도적놈 노태우를 처단하자” “노태우 특별대우 구치소장 각성하라”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시간여동안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광주학살로 양민을 학살하고 5,6공에서 의문사를

만들어낸 장본인을 특별대우할수 있느냐”며 구치소 안으로 밀고들어가려 하자 경비교도 대가 이를 저지,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우리의 자식들은 광주학살의 진상규명, 책임자처단을 위해 민주화를 위해 죽어갔다”면서 “5,6공의 의문사가 한건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판에 학살자만 구치소에 수감되어 특별대우 받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세계성폭력 추방주간」 전북여성단체, 다양한 행사 마련

「세계성폭력추방주간」(11월 25일 ~ 12월 10일)을 맞아 전북지역 여성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와 전북여성운동연합의 활동을 살펴본다.

성폭력 가해자 82%가 알고지내는 사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개원 1주년 상담사례분석결과

사단법인 성폭력예방치료센터(소장 박상희)가 25일 맞이한 개원 1주년과 제 4회 세계성폭력추방특별주간을 맞아 지난 해 11월부터 지금까지의 상담사례를 모아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같이 생활하는 친밀한 관계가 확인된 총 48건중 39건으로 81.7%나 차지하였으며 이경우 폭행이 지속되고 인간관계상의 치명적 상처가 뒤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아는 사람을 분류해보면 아버지와 오빠를 포함한 친족이 30.8%(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동네사람, 직장상사순으로 나타났다.

성폭행 피해자가운데는 최근 그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가 23%(19건)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련예방교육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 지원등 직장탁아활성화 방안 제시
전북여성연합, 취업여성 자녀보육문제해결 위한 토론회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28개소로 전국의 3%에 불과하며, 민간보육시설과 가정, 직장탁아까지 모두 합한 187개소의 수치는 제주와 충남에 이어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자녀보육이 취업여성의 가장 큰 걸림돌인 실정을 감안하면 이러한 전북지역의 열악한 조건은 큰 문제이다.

이번에 전북여성운동연합(상임의장 임영애) 주최로 25일 하오 2시 전북여성회관에서 열린 자녀보육문제에 대한 토론회는 이러한 의미에서 취업여성의 보육실태와 문제점을 더듬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우 절실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북대 이민경씨는 발제에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으로 규정된 직장보육시설 의무규정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죄의 말씀 ■

편집진의 사정으로 상당기간 발행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사죄드리며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활동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편집진에서는 창간 1주년을 맞아 연말까지를 새로운 모색기간으로 정하고, 좀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좀더 산뜻한 발행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평화와 인권

제 44 호 (95.12.4)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5.18특별법은 과거인권유린에 대한 반성 전체 현정부는 진심으로 인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가?

- 고문자행 · 간첩조작, 노점상 살해, 통일운동탄압 -

김영삼정부가 5.18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노태우씨 구속에 뒤이어 전두환씨마저 구속함으로써 15년전부터 자행되어온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가능성이 내비치고 있는 호를과는 반대의 조짐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현정부의 인권옹호의지가 심각하게 의심받고있다.

박충렬씨, “고문에 못이겨 노동당입당 허위자백” 폭로

지난 달 15일 새벽 안기부에 연행된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거부된지 5일만에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변호인 접견이 거부되었던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에 걸쳐 박씨는 이곳저곳을 끌려다니며 고문을 받고, '조선노동당에 입당했다'고 허위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박씨를 접견한 윤기원 변호사(전국연합 인권위원장)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이 거부된 11월 30일 이후 3일동안 안기부의 수사내용이 또한번 바뀐 것이다. 즉, 이전에 혐의를 두던 회합통신에 대한 수사에 진척이 없고, 검찰송

치기간이 6일로 다가오자 안기부는 이제까지의 수사방향을 바꿔 박씨의 반국가단체 가입부분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경기도 남양주군 능내리에서는 한밤중에 옷옷을 벗기우고, 16명의 수사관들에게 무릎이 꿇린 상태에서 집단구타를 당하는 등 고문을 당했다고 윤변호사에게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안기부가 요구하는 대로 '노동당에 입당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뺨질로 묶인 채 사체로 발견된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 씨시신 강제철취 · 부검실시

지난 28일 오전 9시, 인천 아암도 바닷가에서 뺨질로 묶인 채 사체로 발견된 이덕인씨의 시신을 경찰이 강제로 철취하여 가족을 따돌린 채 일방적으로 부검을 실시하고서는 일방적으로 시신을 '익사'라고 밝힌 경찰의 만행에 대해 전국빈민·장애인단체 회원들의 격렬한 항의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인천남부경찰서는 29일 새벽 5시 이씨의 시신이 안치된 인천 길병원에 전경 1천 2백여명을 투입, 이씨의 시신을 철취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쇠파이프를 휘둘러 1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고, 노

점상 12명과 학생 9명을 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연행 전격 구속하였다.

시신을 철취한 경찰은 가족들이 계속 부검동의를 거부하자 가족의 동의와 회피없이 부검을 진행했다. 부검을 마친 경찰은 오전 12시경 시신을 돌려준 뒤 이씨의 사인에 대해 “바다에 빠져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족들은 “이씨가 지난 9월 사법고시 1차시험에 합격하고, 2차시험을 준비하는 중이었다”며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맨처음 시신을 진단한 인천 세광병원 측도 이씨가 구타에 의해 사망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국노점상연합회, 전국장애인연합회, 인천 주거권실현 시민연합회 등 7백여명과 학생 300여명은 30일, '고 이덕인씨 시신규명을 위한 시민대회'를 갖고 고 이덕인씨의 시신철취 및 강제철거를 자행하는 김영삼 정권과 최기선 인천시장을 성토했다.

법민련 관계자 긴급구속 강희남의장등 계속 단식

안기부와 경찰은 합동으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 가입혐의로 「조국통일법 민족연합 남측본부」(의장 강

희남, 범민련) 주요간부 29명을 긴급구속했다. 안기부와 경찰은 29일 새벽 6시에서 7시경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등의 범민련 중앙과 지방조직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범민련 활동자료, 컴퓨터, 예금통장등을 압수했으며 동시에 강희남(75) 목사등 29명을 연행하여 긴급구속하였다.

긴급구속된 강씨등은 지난 2월에는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를 결성했으며, 조총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연합」등은 긴급성명을 발표, “최근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공안사건은 노태우 부정축재파문과 5.18 정국의 부담을 민족민주운동세력에게 전가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정보공작기관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며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통일인사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강희남 범민련 상임의장과 이천재(65)부의장은 “국가보안법으로는 수사를 받을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계속 단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북지역에서는 강희남 목사와 범민련 전북본부 집행위원장 김형근(36, 익산 황토서점)씨가 함께 구속되었다.

비정상적 언론 집중성토되어야

군사반란자행적보도와 인권탄압행위보도 심각한 차별

과거의 인권유린행위를 극복하겠다는 5.18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에서 고문·살해·구속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재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오직 전두환·노태우씨들의 세세한 동정에만 관심을 쏟는 언론의 비정상적 행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간첩과 만났다는 혐의를 받고 안기부에 연행된 박충렬씨는 고문에 못이겨 노동당 입당을 허위자백했다고 폭로했으며, 인천노점상 이덕인씨는 노점철폐거부대투쟁을 하던 중 실종되어 밧줄로 손이 묶인 시체로 발견되었으며, 통일인사 강희남목사를 비롯한 범민련 관계자 29명이 전격 구속되었다.

하이델의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의 한 회원은 "5.18과 5,000억 비자금으로 구속되

어 있는 전·노씨의 경우 옥중에서도 호강을 누리게하고 있으면서도 이와 대조가 되는 빈민들과 철거민은 환경미화를 문제로 그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포장마차를 강제 철거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폭력 연행에 구타에 의한 살인행위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현 정권은 도대체 개념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라고 비판하면서 "이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보수 언론과 그나마 진보적이라고 믿고 있었던 한겨레 신문마저도 진상을 외면하고 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보수언론들...우리나라는 도대체 누가 주인이며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회인가? 이런 일이 비밀비재하지 만 그 누구도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며 '제도언론의 침묵'과 '정권의 침묵'에 대해 강도높은 비난을 퍼붓고 있다.

민가협 창립 10주년 기념 일곱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말할 자유도, 모임 권리도 없던 억눌려 있던 군사독재정권 당시인 85년 12월 12일, 양심수의 어머니들이 모여 「민주화운동실천가족협의회」(민가협)를 만든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민가협은 민가협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일) 오후5시에 한양대학교 율령체육관에서 갖는다. 올해로 일곱번째인 이 공연은 해마다 1만여명의 관객이 참여해왔는데 주최측에서는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관객들이 참여하는 공연, 관객과 함께 만드는 공연 그리고 고동속에서도 감동과 기쁨이 배어나는 인간애를 그리고자 한다"고 올해 행사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가협 10년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 '양심수어머니들의 눈물과 희망 10년'이 상영되며,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가 8.15특사로 석방된 후 45년만에 어머니와 상봉하는 극적인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장재인노점상 이덕인사망사건의 경과

지난 11월 23일 오전 7시에 환경을 해친다는 것을 명분으로 인천 아암도 일대의 포장마차 강제 철거를 위해서 포크레인을 앞세운 전경 1,000여명과 무장이라는 200여명의 용역 깡패들이 타이탄 트럭, 굴삭기로 철거를 시작했다. 이 폭력 단속에 몸부림쳤던 이씨를 비롯한 많은 장애인들, 노점상들은 살인적인 바닷바람을 마다않고 망루에 올라가 죽기를 각오로 싸웠다.

삼의 터전을 박살낸 것으로 부족해서 망루에 올라간 사람들을 향해 엄동설한에 계속 물대포를 쏘아 얼어죽이려는 만행을 자행했다. 물대포와 단속반의 쇠파이프 세례속에, 추위와 려기집 속에 연약한 여자 및 장애인들은 망루에서 내려오기에 이르렀다. 무자비한 단속에 견디지 못한 장애인들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연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8일날 아침에 온몸에 시벨건 멍이 들고 상의가 벗겨진 채로 두 손이 포승줄에 묶여서 양 어깨, 목, 머리 등에 피멍이 든 이씨가 망루에서 50m떨어진 바닷가에서 의사체로 발견되었다. 즉시 인천 세광병원에 옮겨 부검을 해 '구타로 인한 사망'으로 판정 받았다. 이후 인천 중앙길병원 안치소로 시신을 옮겼다.

그런데, 29일 새벽 04시 유가족과 시신을 지키고 있던 학생들 사이에 인천시장이 방문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았고 이때문에 분위기가 어수선해져 사람들이 흩어진 틈을 이용해서 04시 45분경 병원을 에워싸고 있던 천여명의 전경과 백골단이 영안실로 침입해서 고 이덕인씨의 시신을 탈취해 갔다.

이 과정에서 당시 밤을 세우며 시신을 지키던 수십명의 청년학생과 장애인 노점상들은 필사의 노력으로 사수하려하였으나 저들의 폭력적인 진압에 속수무책이었다. 심여명이 중상을 입고 현재 치료중이다.

이덕인씨의 시신이 발견될 당시 상의가 벗겨진 채로 두 손이 포승줄에 묶여서 양 어깨, 목, 머리등에 피멍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서 타살이 명백하고, 이 사인의 조작을 위해서 시신을 탈취한 것이 분명하다.

현재 전국 노점상 연합회, 전국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 전국장애인항아협회등과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인하대총학생회등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있고, 시신은 없으나 영정은 길병원에 있다.

고 이덕인씨는 향년 만 28세. 지체 장애인 4급이었으며, 전국 장애인 한가족 협회 인천지부회원이다. 7월부 터 아암도 노점상 협회 총무직을 맡고 있었다.

서울대 중퇴자로 95년 사시 1차에 합격했었고, 사망 당시까지 사시 2차를 준비중이었다.

평화와 인권

제 45 호 (95.12.11)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서울지방법원이 한백렬씨등 29명의 출소장기수들이 지난 91년 위헌적인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호감호처분을 받았다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 제41부는(재판장 채대병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9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보호감호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이 있다"며 한법상의 권리인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

한, "남북이 이데로기로 분단 되었으며 특수한 안보여건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최고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간첩등 반국가사범에 대한 관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통일성 및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며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제정된 점에 비추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구인들이 2년마다 보안처분이 갱신될 때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장기수들은 지난 73년 제정된 사회안전법에 의해 만기출소했거나 형만기로 출소할 예정이었던

비전향 장기수들로서 다시 청구보호감호소에 수용되었다. 이에 따라 한백렬씨등은 89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될 때까지 10-16년간 보안처분을 받아야 했다. 사회안전법은 이미 재판을 받고 만기형을 산 이들에 대해 단순히 행정감호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어 위헌적인 법률로 지목되어 왔고, 이에 따라 89년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되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당사자들은 곧 서울 고법에 항소할 예정이다.

범민련등 양심수석방 촉구 불교인권위 성명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한상범)는 8일 성명을 발표, "범민련 사건 관계자등 통일인사와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안기부와 경찰이 범민련사건을 빌미로 임선 8개월의 고애순(전 광주전남연합 교육부장)를 구속한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라며 수사기관의 인권탄압중지를 촉구했다.

반인권적 관행 척결 촉구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인권사회단체성명

세계인권선언일 47주년을 기념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의 고문과 간첩조작중단등을 요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한상범)는 10일 성명에서 "한국의 인권은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고 규정하고 "최근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안정국조성을 위해 박충렬, 김태년, 허인회씨등을 구속한 것"이라며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 인권침해의 기본요인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아직도 감옥에는 양심수가 넘쳐나고 어린,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의 인권현실은 아직도 암울하기만 하다"며 "법과 제도를 비롯한 모든 반인권적 관행을 하루속히 척결할 것"을 주장했다. 또,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도 성명을 발표, 정부의 반성과 인권개선노력을 촉구했다.

안기부, 김동식 기자회견통해 여론재판 민가협, "안기부 간첩사건 발표 인권침해" 반박

국가안전기획부(부장 권영해, 안기부)가 지난 8일 부역 간첩사건에 대한 종합수사발표를 하면서 여론재판을 유도하고 간첩사건을 기정사실화해버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김동식(33)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9월 제주도 해안으로 침투해 허인회, 이인영, 함운경, 우상호씨외에 황광우(37, 전 민중당 당원), 정동년(52, 5.18광주민중항쟁연합

의장), 고은(62, 시인)씨를 만났으며 지난 90년 납파되었을 때 제야인사등 30여명을 포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민가협」은 성명을 발표, "민주화운동세력을 친북인사로 매도하고 회대의 악법 불고 지피로 구속한데 분노한다"며 "재판도 받지않은 이들의 혐의사실을 기정사실인양 발표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비난했다.

9일, 5.18비대위 전국집회

전주·군산에서도 특별검사제 수용 요구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등)는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공원등 전국 9개지역에서 특별검사제 수용, 김영삼대통령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하는 제 9차 국민대회를 가졌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등 「5.18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 소속 200여명은 9일 오후 2시경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5.18관련자 전원구속, 5·6공안전청산 및 대선자금 공개촉구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관련자의 전원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과거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김영삼대통령은 반드시 대선자금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주택은행 앞등 "뺨군대를 정해 선전전을 계속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군산연합」, 소속 100여명도 이날 2시경 군산시청앞에서 김영삼대통령의 대선자금공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뒤 가두행진을 벌였다.

무리한 간첩조작 중단돼야

간첩공대위 안기부항의방문·박충렬씨 변호인단 고문상처증거보전신청

간첩공대위 안기부항의방문

「총선시기 안기부 간첩조작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창복등, 공대위) 소속 회원 50여명은 5일 오전 10시 30분 내곡동 안기부항의방문에서 박충렬·김태년씨 석방과 안기부의 해체를 요구했다.

이날 참석한 서래스님은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 구시대적 좌경용공 간첩조작이 이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대위는 이후 공동변호인단을 선임해 법적대응을 하며 계속적인 안기부항의방문을 계획중이다. 또한 조작간첩진상을 밝히는 홍보지 50만장과 천주교 인권위가 제작한 조작간첩 비디오 테이프를 배포, 홍보할 예정이다.

박충렬씨 변호인단 고문상처 증거보전신청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하고 노동당입당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진 박충렬(36, 전국연합사무차장)씨에 대한 변호인접견과 의사검진이 계속 거부되고 있어 심각한 인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4일, 안기부에서 이루어진 변호사 접견이후에는 계속 접견이 거부되었다. 이어 6일과 7일에도 이기법담당검사에게 접견신청과 함께 의사검진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원재변호사등은 박씨의 고문 상 처가 사라지기 전에 이를 확보, 고문의 증거로 삼고자 박씨의 상해 부위에 대한 검증 및 감정신청을 요구하는 증거보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언론의 반성없이 민주개혁 없다!!

※과연 5.18특별법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5.18특별법제정이 단순한 과거청산작업으로서만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개혁으로 나아가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가운데서도 5.18문제에 대한 언론의 빠저린 자성이 없이 민주개혁으로의 전진은 험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 언론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보자.

언론의 과거 - 학살정권의 옹호자

▶"22일 현재 군과 경찰이 전남도청에서 철수한 뒤 광주시는 일부 무장한 폭도에 의해 장악돼 행정은 완전 마비됐다... 소요는 21일 목포까지 번져 광주에서 내려간 폭도에 의한 과격행위가 있었으나 대다수 시민들은 이들을 추종하지 않았으며 대학생들이 과격한 군중들의 해산을 중용했다."(1980.5.23. 조선일보 1면)

▶"광주는 죽음의 도시, 공포의 도시가 돼있다... 광주시가지는 현재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무법지대... 군인을 잡아 낮으로 찢어 죽이고 꺾질을 벗기는 만행을 저질렀는가하면 한국방송은 못믿으니 이북방송을 들으라 권유하는 사례 그리고 사상범등 중범이 가득한 광주교도소를 7차례나 습격하고 그때마다 어린이·중학생을 앞세운 행태등은 도저히 데모나 소요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당국의 설명이다."(1980.5.24. 서울신문 6면)

▶"전두환 장군을 새지도자로"(1980.8.21. 경향신문 1면 머릿기사 제목)

▶"사천에서 청와대까지, 전두환대통령 - 어제와 오늘"(1980.8.28. 중앙일보 특집연재기사 4회)

▶"새시대의 기수 전두환대통령, 우국충정 30년 군생활"(1980.8.29.동아일보 특집란)

언론의 현재 - 현정권의 단순추종자

TV 3사의 11월 24일, 김대통령 "역사적 결단" 찬양

▶KBS 뉴스 46분 50초중 26분 28초(13쪽지) 할애 찬양

▶MBC 뉴스 53분 17초중 33분 58초(18쪽지) 할애 찬양

▶SBS 뉴스 34분 5초중 23분 38초(14쪽지) 할애 찬양

특히, SBS는 <김대통령과 5.18>특집 편성, 김대통령이 광주민주화운동의 피해자며 가택연금상태에서 5.18성명을 발표하는등 23일간의 단식투쟁을 통해 온몸으로 항거하였다며 김대통령을 영웅으로 미화, "현정부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도

평화와 인권

제 46 호 (95.12.18)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계속되는 죽음

노점상 이덕인씨 죽음 이어 수배노동자 조수원씨 자살

지난달 28일, 인천 아암도 노점상철거반대 투쟁중 사망한 이덕인씨에 뒤이어 이번에는 노동조합활동과 관련 4년 6개월동안 수배를 당해왔던 해고노동자가 자살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조수원(29)씨가 15일 오전 8시30분경 전해투 노동자들이 농성중인 민주당 서울시지부 당사(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백화점) 6층 비상계단에 목매죽은 것을 청소년 김화춘(39)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는 지난 91년 6월18일 대우정밀에서 병역특례 노동자로 근무중 노조활동과 관계되어 병역특례 기간 5년

이라면서 6개월이 모자라는 4년6개월간 근무하다 해고, 군대 징집을 거부하고 수배를 받아왔다. 현행 병역특례법은 병역특례 노동자가 해고를 당해 해고의 효력을 다루는 중에도 재판없이 군에 입대할 수 밖에 없게 되어있어 조씨는 4년6개월간 수배생활을 해온 바 있다.

조씨는 다른 해고특례노동자들과 함께 병역특례제도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종관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해왔고, 93년에는 38일간의 단식농성을 하기도 했다. 또, 94년에는 회사인 대우정밀과는 복직합의가 되었음에도 군대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복직도 하지 못했다.

"민중 탄압에 맞서 범국민대책위 만들자" 이덕인대책위 제안

[장애인 노점상 고 이덕인씨 비상대책위원회] (이덕인대책위)는 14일 민주단체와 인권단체측에게 (가칭)민중운동 탄압 분쇄와 민중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이덕인대책위는 지난 9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현재 진행되는 민중운동탄압에 각각 대처하기에도 급급한 실정"

이라면서 6개월이 모자라는 4년6개월간 근무하다 해고, 군대 징집을 거부하고 수배를 받아왔다.

현행 병역특례법은 병역특례 노동자가 해고를 당해 해고의 효력을 다루는 중에도 재판없이 군에 입대할 수 밖에 없게 되어있어 조씨는 4년6개월간 수배생활을 해온 바 있다.

조씨는 다른 해고특례노동자들과 함께 병역특례제도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종관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해왔고, 93년에는 38일간의 단식농성을 하기도 했다. 또, 94년에는 회사인 대우정밀과는 복직합의가 되었음에도 군대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복직도 하지 못했다.

이어서 "5.18특별법이 국민적인 요구로 제정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의 민중탄압은 더욱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이덕인대책위는 지난 9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현재 진행되는 민중운동탄압에 각각 대처하기에도 급급한 실정"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병역특례제도의 부당성을 꾸준히 제기하여 지난 6일 국회 국방위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회사, 당사자, 본인 3자가 모여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안을 내리도록 했다. 지난 12일 조씨는 다른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2명과 함께 대우그룹, 풍산그룹, 병무청 관계

노동자들, 신한국당 쇠사슬 항의투쟁 병역특례노동자 고 조수원씨 사망 항의

12월 18일, 오후 6시경 병역특례해고자 고 조수원씨의 죽음에 대해 항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농성중이던 전해투와 대우정밀 동지들에 대한 강제집압이 실시되었다. 노동자들은 같은 날 12시부터 서울 장기신용 금고 앞에서 5.18유가족과 함께 120여명의 노동자들이 5.18문제완전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난 후 신한국당 당사 앞에서 노동자 30여명이 함께 쇠사슬로 온몸을 묶고 연좌농성을 시작한 바 있다.

이들의 신한국당 항의농성은 고 조수원동지의 죽음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 병무청 당국이지만 국회에서 형식적인 처리만 하였

자와 함께 자리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이 자리에서 병무청측은 "군대를 가는 길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함께 농성했던 동료들은 "4년6개월 수배생활 끝에 국회의 권고가 있어 일말의 희망을 가졌으나, 병무청 관계자의 만남에서 다시 절망적인 답만 들어 장래 문제를 고민해 자살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해고노동자들의 단체인 전해투와 민주노총, 전해투 지원대책위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조씨의 시신을 서울대병원 영안실로 옮기고 장례위원회를 구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더욱 근본적인 문제라 판단하여 병무청에 대한 항의방문에 그치지 않고 신한국당 결사항의방문을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이 1시경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신한국당의 면담불가 방침이 전해지자 장례대책위와 5.18유가족들이 함께 한 가운데 스티로폼돌을 준비, 장기농성체제를 갖추자 신한국당이 경찰 투입을 요청, 오후 6시경 영등포경찰서 소속 백골단과 전경들이 강제집압을 개시해 농성자 중 34명을 영등포서로 연행, 각 경찰서로 강제분산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법원, 전창일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유치장소를 맘대로 바꿔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와 수십년간 계속된 불법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오철석)은 15일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75)씨가 낸 준항고 심리 결과 "구금장소를 구속영장기재장소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안기부가 수사를 하려면 일시 청구인의 신병을 인도받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나면 다시 서초경찰서 유치장으로 인도하였다가 다시 수사를 위하여 신병의 인도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함에

도 불구하고, 안기부가 구속영장상의 구금장소를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안기부의 유치장소 변경은 형사소송법 제209조, 제75조가 구속영장에 구금장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취지에 어긋나는 불법이라고 명백히 규정했다. 또, 재판부는 "안기부의 유치장 시설이 법정 유치장보다 우수하고, 변호인의 접견에 하등의 지장이 없고, 검사의 유치장 감찰도 실질적으로 받고 있어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고, 지금까지 대공수사의 관례로 되어 왔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결정으로 안기부 밀실수사가 타격을 받게 되었다

남한은 우리의 조국이 아니다!! 중국교포 노동자들, 노에취급 항의하면 구타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체불 임금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공동대표 박승룡 등 3명, 귀향모임)과 [중국노동자센터](소장 오천근)는 15일 노동부에 귀향 중국교포에 대한 산재보상·노임 청구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신청서를 낸 중국교포는 이보금 씨등 산재피해자 112명, 이기만 씨등 임금채불자 165명이다. 귀향모임 등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중국 길림성, 후룡강성, 요녕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중심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귀향모임은 이 날 법무부에 중국교포에 대한 한국인의 사기·횡령 수사 청원서와, 중국교포 김명산 씨등 실종된 외국인노동자 5명 소재확인 청원서를 냈다.

직접 조사를 한 귀향모임 간사 김재금씨는 "중국교포는 다른 외국인노동자들에 비해 언어 등 문화적 충격이 적어 다른 외국인노동자

들에 비해 언어 등 문화적 충격이 적어 중소기업이 선호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의 외국인노동자들 가운데 중국교포가 반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노동시장의 필요조건을 이유로 중국교포의 불법유입을 방관하며 형식적인 단속을 할 뿐이다.

김재금씨는 "산재를 당한 교포 중에서도 선원으로 일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선상폭력을 지적했다. 사조산업, 동원산업, 대림수산, 삼호물산 등 국내 유명 참치회사 선박에서 일을 한 이들은 배에서 "노에취급을 당했다"며 치를 떨고 있다. 계속되는 구타에 항의하면 한국인들은 "우리는 일본배에서 더 많이 고생했다"는 한마디를 던지고 다시 때렸다고 한다. 김씨는 "중국교포사회에 한국에 대한 적대감정이 극에 달해 있었다"며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유서사건 재항고 기각 대책위, 유엔인권조약 근거 제소 검토

대검찰청 주선회 검사는 지난 11월23일 [유서사건 강기훈무죄선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함세웅신부가 제기한 김형영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에 대한 고발건의 재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주검사는 "서울 고검의 항고기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난 91년 고

검기씨씨가 분신사망한 이후 강기훈(32)씨는 유서를 대필해 주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3년의 실형을 살아야 했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김형영씨의 문서감정 뿐이었고, 김씨는 다른 사건에서 영터리로 문서감정을 하여 실형을 살기도 했었다. 이에 따라 강기훈 공대위는 지난해 10월 김씨를 공문서 위조와 법정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14일, 분신 경원대생 사망 대책위, 학교측의 고발·경찰 고문문제제기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일신여상 앞에서 분신, 투병중이던 경원대 제적생 장현구(27)씨가 14일 서울 대치동 순화병원에서 운명했다

장현구씨 92년 학내문제로 학교서 고발·구속

이번 사건의 발단은 92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여름 경원대 직원노조가 결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직원노조 간부들을 학교측이 고발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 사건의 와중에 학교측은 장씨와 황기룡, 문영복씨 등 3명을 폭력, 방화,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 불법구금·가혹행위 장씨는 같은 해 12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공정선거 캠페인 활동을 하다 성남시내에서 성남경찰서 형사들에게 영장없이 연행되어 3일동안 잠을 못자고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손에 땀수갑을 채워 의자에 묶여진 상태에서 구타를 당하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후, 장씨는 감옥에서부터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가족들이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했다. 이후 상태가 더욱 악화돼 스스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고 주위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평화와 인권

제 47 호 (95.12.26)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 스 : 0658-45-0152

정부 노동운동 탄압 국제적 논란

민주노총, ILO에 정부제소 · OECD 노조자문위, 노동법개정없이 OECD가입 불가능 밝혀

민주노총, 정부 제소 ILO 87호 조약 위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19일 민주노총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결사의 자유 위반 혐의'로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민주노총은 제소장을 통해 "정부는 민주노총이 정당하고 민주적방식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과 핍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침해에 대한 부정으로 ILO조약 제8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제소의 결과는 늦어도 96년 5월중에 1차 판결과 권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 개정없이 OECD 가입 불가능

한국정부가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금지조항 위반으로 구속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석방과 노동관계법 개정(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맞게 개정할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냈다. TUAC의 존에 반스 사무총장은 21일자 서한에서 "노조 지도자를 구속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권영길위원장 석방과 노동관계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국이 완전한 OECD 회원국이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그간의 ILO와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등의 노동관계법개정에 대한 지적과 권고를 일일이 상기시켰다.

또, OECD-TUAC는 OECD 각국 대표들에게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 한국정부의 OECD 가입에 있어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발행인, 문규현신부 보안관찰법 기소 전주지검, 7일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검찰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시효 3년을 마감 직전 기소하였다. 보안관찰대상자가 보안관찰 위반만을 이유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검 김광로 검사는 최근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공동대표 문규현 신부를 보안관찰법 제27조제2항, 제6조제1항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문규현신부는 92년 12월24일 성탄절 특별사면으로 가석방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이므로 출소후 7일 이내에 거주지인 김제경찰서 서장에 출소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

해고자 명동성당서 식사술 류고 단식농성 병역특례해고 병무청은 해결 약속, 대우그룹 복직방침 철회

『전국구속·수배·해고자해고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 소속 해고노동자와 대우정밀 노동자 12명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오전 8시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대우그룹의 불성실한 태도를 규탄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식사술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성당입구 계단 난간에 쇠사슬로 몸을 묶은 채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89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비전향출소자 감시 목적으로 대체입법된 보안관찰법에 저촉, 기소된 경우는 91년 서준식(47,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서씨는 집시법 위반등의 혐의에 추가된 경우였지만, 이번처럼 보안관찰법 위반만으로 기소된 적은 없었다.

보안관찰법에서는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출소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효는 3년.

5.18을 넘어 민주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범국민비대위, 5.18특별법 성과보고대회

지난 10월26일 전국의 2백98개 단체로 구성된 5.18특별법 제정운동을 주도한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는 21일 오후2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이창복, 강신석 상임공동대표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특별법 제정 성과보고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민변, 민주노총, 천주교전국사제단 등 8개 지역·부분단체가 경과보고를 했다. 이들은 “5.18특별법 제정에서 특별검사제가 빠지고, 명예회복, 집단배상, 정신제송을 위한 조치등의 내용

이 빠졌다”며 “이제 시작된 과거청산이 미봉과 굴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5.18 내란학살등의 사법처리과정 에 정부가 엄정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광주영령 및 민주열사들의 뜻을” 부연하기 위해 실질적인 민주화와 사회정의실현을 가로막는 각종 반민주적, 반민중적, 구조와 법제, 관행과 의식을 혁파하는데 계속 신봉에 서서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5.18명동성당 농성단에 감사패가 주어졌다.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허인희씨, 불고지죄는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간첩’ 불고지 혐의로 지난 11월7일 구속된 허인희(32, 세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가 변호사를 통해 13일 법원에 불고지죄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제청신청서를 제출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씨는 신청서에서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씨는 이어서 국가보안법 제10조가 “국가기관이 개인의 사상과 양심을 외부적인 형태로 나타내도록 강제하고 처벌함으로써 개인이

가지는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고지죄는 실정법적으로 따져도 ‘간첩의 정을 아는 순간’ 이미 고지의무가 발생하는 동시에 즉시 불고지죄가 완성되는 범죄’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기수가 되어 버린 범죄인 불고지죄를 고백하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 제12조 제2항의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무노동 무임금” 판결

‘쟁의기간 부분임금’ 기존 판례 뒤집어
민주노총, 수용거부 긴급 성명

대법원이 쟁의기간 중에도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 쟁의기간중 무노동에 대해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내려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일고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임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쟁의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임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한다”

며 “따라서 노동의 제공없이 단순히 근로자라는 신분에 따라 발생한다는 생활보장적 임금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긴급성명을 내고 이러한 결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백히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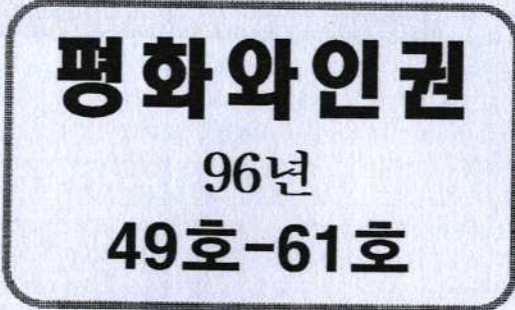
민주노총은 “대법원의 논리대로 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주차, 월차 및 연차, 생리, 산전산후휴가는 물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도 노동의 댓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에 의하면 “임금은 노동의 댓가가 아니라 노동력의 가격, 즉 생계비”라는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95년 순위별 인권 10대 뉴스◆

- ① 5.18특별법 제정
- ② 전·노 두 전직대통령 구속
- ③ 삼풍백화점 붕괴등 대형 참사
- ④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등 석방
- ⑤ 명동성당·조계사 공권력 투입
- ⑥ 부여간첩과 공안한파
- ⑦ 중무로지하철역 미군폭행사건
- ⑧ 민주노총 건설
- ⑨ 노동탄압에 잇따른 죽음으로 항거
- ⑩ 외국인 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평화와 인권」이 송년인사 올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에 대한 경외를 절절히 느끼게 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보다 더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년말년사 잘 보내시고 1월 8일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평화와 인권

제 49 호 (96. 1.17)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0금주의 사진한장0

미결재소자 흘겁 옷으로 겨울지내

법무부, 졸속 행정이 빛은 인권침해

미결수들이 영하의 날씨에 여름 흘겁 옷을 입고 추위에 떨어 인권침해라는 지적이일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전국 구치소·교도소 미결수들의 복장을 일제히 바꾸고, 미결수들이입던 관복과 한복을 착용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미결수복은 법무부측 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전국 미결수 중50% 전 후가 구입할 수 없어서 영하의 날씨에도 여름 흘겁 옷을 입고 지내야 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의 출발은 지난 93년 12월 노태훈(32, 인권운동사랑방)씨가 미결수가 재판을 받을때 기결수와 같은 수의(囚衣)를 착용하고 재판정에 나오는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미 죄를 진 사람으로 느끼게 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을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이후 95년 1월 정부 행정쇄신위원회가 미결수가 재판에 나올 때 평상복을 입고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재판 때 평상복을 입게 하면 되는 것을 본말을 전도해 평상복을 입는 것은 허용을 하지 않은 대신에 미결수들의 복장을 평상복과 비슷한 모양과 색상으로 일률적으로 바꾸도록 법무부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민가협의 손민아(32)간사는 "졸속적인 교도행정 의 표본"이라며 "공급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놓던지 실정에 맞게 해야 하는데 법무부의 방침에 따라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방침을 적용, 물의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교도행정이 재소자의 입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뤄진 사례라는 것이다.

한국표준생계비, 3.2인당 189만원

민주노총 발표, 임금은 52만원정도나 모자라

* 우리나라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까? 인권문제는 삶의 질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지난 15일 표준생계비를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했다.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우리사회의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생계비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생활을하고 있는 층은 노동자이므로 노동자들의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토대로 표준생계비를 산정하였다.

기존의 생계비, 이를테면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가 91년부터 94년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민주노총준비위)가 95년에 산정한 생계비는 모두 최저생계비이다. 이들 생계비는모두 전 노동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낮은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들의 생활실태를 반영하여 산정된 생계비이다.

민주노총 95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조합원 평균 부양가족수는 3.2인이고 조합원 임금(통상임금+상여금월할금) 평균은 1백37만3천5백71원이다.

3.2인의 표준생계비를 산출하면 1백89만2천1백69원이다. 따라서, 표준생계비와 조합원 임금 평균과의 차액은 51만 8천5백98원에 이른다.

따라서, 이 모자라는 액수를 임금인상을 통해서 확보하려면 37.8%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나오게 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96년임금투쟁에서 표준생계비모델을 토대로 15%내외의 임금인상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소한의 주거권 확보 위한 민간 공동실천지침 마련

제2차 세계주거회의 아시아민간단체 준비회의 폐막

지난 15일부터 필리핀 안티폴로에서 열린 제2차 세계주거권회의(Habitat II) 아시아지역 민간단체 회의가 17일 막을 내렸다.

아시아지역의 시민단체와 주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 한국에서는 이 회의에 [세계주거권회의 민간위원회]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거권을 단순한 주거, 주택의 문제가 아닌 "삶의 공간(Housing Rights) 보장"이라고 정의하고 토지의 공공성등을 주장했다. 특히 "모든 개발과 계획은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국의 토지, 기후, 환경 등의 상황에 따른 최저주거기준(Basic guide line)을 정해 정부가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해야한다"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마치며 공동실천지침을 마련했다.

아시아민간단체회의는 이번모임의 성과를 오는 6월타키에서 열리는 세계주거회의에 낼 계획이다.

<공동실천지침>

1. 가난한 사람들을 비

롯한 인간중심의 계획과 개발이어야 한다. 즉 경제개발전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완전고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탁아소등 각종 사회시설이용이 편리해야 한다.

2. 지역, 국가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적절한 가격의 집값, 강제철거로부터 자유, 전월세값의 안정, 사회정의 등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3. 사회정의와 남녀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위 때문에 사회적·성적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4. 공동체문화는 민주적이고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정책은 주민의 참여와 투명성이 보장되는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정책결정의 모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5. 공동체는 인간과 환경간에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공동체의 기본시설인 식수, 하수도, 공원, 교통등이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된다.

고교입시 성차별, 평등권 위배

고입점수 높은 여학생이 불합격하는 것은 불평등한 정원 때문

남학생보다 우수한 성적을 받은 여학생이 일반 인문고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15세의 어린 여학생들에게 가혹한 성차별이 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즉, 고등학교 입시에 서 남학생보다 점수가 높은 여학생이 불합격되는 것은 고등학교 남녀학생 정원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국 성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정부 행정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위원장 정철길)가 이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주목 된다.

지난 5일 발표된 서울지역의 96년도 일반고 고입선발고사 합격선은 남자 1백17점, 여자 138점으로 남녀의 합격선 차이는 무려 21점이었다. 또, 부산은 남자 124점·여자 148점(24점 차), 광주선 남자 114점·여자140점(26점 차) 등으로 나타났다.

95학년도 남녀 학생의 합격선 차이는 서울 18, 부산 26, 인천 19점, 대구 10점 이었다.

이같은 성별간 합격선 격차는 올 중학졸업 남녀의 비율이 51.5대 48.5인데 비해 일반고 남녀간 정원은 55.2대 44.8로 벌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올 일반고 입학정원이 남자 6만4천5명, 여자 4만8천6백3명으로 남자가 1만5천4백2명 더 많다. 이 때문에 남학생의 64.2%가 일반고에 진학하지만 여학생은 53.5%만 진학이 가능하다. 따라서, 서울지역중

학 졸업 여학생의 약 7천5백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연숙, 여협)는 지난 10일, "모든 국민은 본인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학생 보다 20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은 여학생이 불합격 처리되어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분명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여협은 "남녀공학교고의 여학생수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런제도가 철폐되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여학생을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교(35,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환경실장)씨도 "15세 어린 여학생에게 지울 수 없는 성차별의 첫 상처를 주는 불평등은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반계 여고를 증설할 것 △남자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것 등을 제시했다. 남자고의 남녀공학 전환은 공립학교가 먼저 시행하고 사립학교가 뒤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헌법 제11조(국민의 평등)>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한일병원 노조위원장 분신 김시자씨 죽음 "한국전력 어용노조 퇴진운동" 불붙어

지난 12일 '어용노조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한 한국전력 산하 한일병원지부노조 위원장 김시자(36, 여)씨가 13일 새벽 사망했다.

김씨는 12일 오후 2시경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최태일, 한전노조) 중앙집행위원회 도중 "어용노조 즉각 퇴진"등을 외치며 분신했다. 김씨는 최태일집행부가 민

주적성향의 영광발전소 위원장 오경호씨와 자신을 규약 위반, 조직 분열책동 등의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김시자씨의 분신직후 최태일위원장은 영안실에 와서 김말룡국회의원등이 지켜보던 가운데 퇴진각서를 쓰는 등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쓴 각서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퇴진 운동에 반발하고 있다.

원진레이온 실직노동자 사망 공사장서 화상입어

지난 93년 7월 폐업으로 문을 닫은 원진레이온 실직 노동자 김상근(44)씨가 지난 95년 12월 6일 인천시 도시기하철공사 1-13공구 'LG 건설(주)'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전선 40% 3도 화상을 입고 서울 영등 포구 한강성심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3일 오후4시경 숨졌다.

김씨의 죽음은 실직 이후 어디에도 취직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원진레이온노동자들의 현실을 웅변하고 있다.

지난 93년 원진레이온 폐업과 관련 노·사·정 3자 합의서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에 원진레이온 노동자를 전원채용한다"고 협의했으나 도시철도공사에서는 600명중 50명만 채용했다.

고 장현구군 사건, 학생들 농성 계속 경원대학측에서는 천막 칠거

경원대학교는 17일 오전 9시경 교직원 1백여명을 동원해 고 장현구씨의 문제로 학생들이 농성중인 대형천막 1동을 철거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세워 놓은 5층 천막은 학생들이 석사술을 묶은 채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철거하지 못했다.

이날 현장에는 20여명의 학생들이 있었으나, 큰 마찰은 없었다. 경원대 학생들 2백여명은 오후1시경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학교측은 장씨문제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있다"며 △학원이사장의 사과 △제적생전원복적 △폭행교수 보직해임 등을 촉구했다.

'5,6공청산 이대로 좋은가?' 대토론회 열려 박종철 기념사업회 주최로

[민주열사 박종철기념사업회](회장 김승훈신부)는 '6월 항쟁 정신에 비추워본 과거 청산, : 5,6공 청산,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토론회를 1월12일 오후3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가졌다.

70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이 토론회에서는 김장권교수(숭실대)의 사회와 박원순 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의 기본발제로 진행되었다.

박원순변호사는 "한국의 현대사는 백범 김구선생의 피살과 거창양민학살등 미해결사건으로 가득차 있다"고 전제하고 "과거에는 정치범포에 대한 추궁이 불가했었지만 박종철고문살해사건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에 균열이 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정권이 벌이는 과거청산은 과거 군사독재하에서 그 독재를 지지했던

언론인, 법조인, 고위관료들이 그대로 그 직위를 차지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청산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생명권을 중심으로 토론을 한 박래균실장은 "5,6공 청산이 이루어지기위해선 양심세력에게 가했던 고문대에 대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하지만 과거 청산을 외치는 문민정부조차도 간첩조작과 고문을 행하고 있다"고 현정부를 비난했다.

토론에 참가한 모든 토론자와 발제자들은 현재 과거청산이 수속구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몇몇의 구속으로 그치는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문제가 어느정도 해결이 되기 위해 많은 광주시민들이 노력을 기울였듯이 지금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양심있는 시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물증없이 긴급구속, 검찰이 무혐의 석방 강원도경, 남한조선노동당 재건 기도 무리한 수사

최근 안기부등이 박종철, 김태년씨등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문제가 되고있는 가운데 검찰이 확실한 물증없이 긴급구속을 남용한 것이 드러났다.

지난 9일 강원도경에 의해 남한조선노동당 재건기도 혐의로 긴급구속된 7명 중 5명이 11일 새벽4시 무혐의로 풀려났다.

검찰은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된 이강훈(35)씨와 연관지어 재건기도 혐의를 조사하다 아무

런 혐의도 나오지 않자 이들을 내보낸 것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없이 92년 구속된 이씨의 조서만을 가지고 재건기도를 추궁했다고 한다.

한편, [전국농민회 강원도연맹]과 박씨등 풀려난 이들은 1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부당한 긴급구속 수사에 항의했다.

이들은 이사건이 "총선을 앞두고 보수우익층의 표를 의식한 정치조작극"이라며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고 이덕인씨 비디오 제작○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씨 사인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진관스님, 진상조사위원)는 이덕인씨 죽음의 의혹을 알리는 홍보용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판매하고 있다.

'햇빛 아담도'라는 제목의 이 비디오는 이씨가 참가했던 아담도 노점상 철거반대 농성에 대한 전후 사정과 사인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다.

비대위를 통해 판매되는 이 테이프 상영시간은 20분이며 가격은 1만원이다.(문의전화:725-5025)

<자료> 80년 계엄포고령피해자 특별재심 청구 성명

현정부는 '역사바로세우기'를 올바르게 하라

* 5.18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각계에서 과거청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0년 당시 신군부의 계엄포고령에 맞섰던 피해자 20명이 이에 대한 특별재심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이에 이들의 성명서를 요약한다.

12.12 군사반란과 5.17내란의 수괴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역사와 법의 이름으로 단죄받는 오늘, 그들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다가 불법적인 계엄포고령으로 십수년을 죄인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은 명예회복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특별재심을 청구한다.(...중략...)

그러나 (5.18특별법은 제정되었으나 편집자) 아직도 군사반란과 내란의 수괴인 전두환과 노태우에 맞서 민주화투쟁을 전개했던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미아로 떠돌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현정부가 주장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 좀더 확실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중략...) 따라서 이른바 신군부에 대항하였던 많은 사람들, 12.12에 맞선 참군인들, 해직언론인들, 해직교수들, 학생운동관련 제적자, 강제징집자, 그리고 수배자들까지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국가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군사반란과 내란의 수괴가 정권을 잡았던 5·6공하에서 민주화투쟁을 전개했던 사람들과 박정희 정권 시절 민주화투쟁을 전개했던 사람들도 당연히 '역사 바로 세우기'의 정신에 입각하여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진행중인 현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한낱 구호에 불과할 뿐이며 다시 역사의 준엄한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중략...)

<우리의 요구>

- 1. 정부는 12.12. 군사반란과 5.17내란에 항거하다 사망하고, 부상당하고, 해직, 제적되고 수배받고 구속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1. 정부는 5·6공 시절의 민주화운동과 유신독재 시절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그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를 즉각 강구하라.

전북지역의 양심수들을 소개합니다.

1월 19일, 익산 한아름예식장에서 열리는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후원의 밤" 준비위원회 자료중

전북지역 출신 양심수

Table with 4 columns: 사건명, 성명, 적용법규, 현재수감지. Rows include: 범민련사건 구속자 강희남, 김형근; 간첩 조작사건 구속자 이화춘; 범청학련사건 구속자 임효준; 사노맹사건 구속자 이은경, 정명섭.

전북지역 복역 양심수

Table with 6 columns: 이름, 소속, 사건명, 적용법규, 구속날짜, 수감지. Rows include: 하현기, 김광균, 김동철, 임인출.

Table with 6 columns: 이름, 소속, 사건명, 적용법규, 구속날짜, 수감지. Rows include: 박화국, 문정우, 박영희, 손성모, 구영식, 문철태, 김성만, 김효준, 이경섭, 손유형, 신광수, 임효준, 김창원, 석달윤, 방양균, 손병선, 진창식.

평화와 인권

제 50 호 (96. 1.24)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사진으로 보는 세상

"양심수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19일, 저녁
익산 한아름예식장에서 열린
'양심수후원의 밤'에서

익산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후원의 밤" 성황
양심수석방 촉구·국가보안법 철폐투쟁 결의

'양심수후원의 밤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조경권)과 전북 민주화운동 가족협의회(회장 오경숙)가 준비해온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후원의 밤"이 19일 밤 7시 익산 한아름예식장에서 25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 행사는 95년 2월에 열린 '양심수후원의 밤'에 이은 2번째 익산지역 인권행사로 그동안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전북지역의 양심수들에 대한 관심과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지적하는 행사이다. 그동안 꾸준한 익산지역에서 지역운동을 전개해온 민주주의 민족통일 익산연합, 익산 노동자의 집, 좋은 세상 열어가라는 익산시민모임 등을 비롯한 지역사회단

체들과 작년 통일운동단합으로 강희남목사와 김형근씨가 구속된 범민련 전북연회(회장 오경숙)가 준비해온 양심수들을 지원해온 전북민가협 등이 결합하여 준비한 이번 행사에서 사회를 본 조정권준비위원장은 작년이 행사를 마치고 나서 이런 행사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며 실제로 양심수 자신보다 가족들의 생활상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강연을 맡은 문규현신부(본지 발행인)는 간첩조작으로 곤욕을 치른 뒤 7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 복역중인 이화춘씨의 예를 들면서 누구라도 간첩으로 몰릴 수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문규현신부는 일단 혐의를 받으면 주변사람과의 모든 인간관계마저 단절시켜버리는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반인륜적인 악법이며 국제적으로도 철폐권고를 받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철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으로 이 법을 이용하기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행사장 주변에 대자보로 준비된 전북지역 출신 양심수들의 소개내용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있으며 특히 구속자가 가족중 이화춘씨의 부인인 이순덕씨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자 간간히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였다. 이날 주최측에서는 가입서를 비치하여 지속적인 양심수후원을 위한 양심수후원

회원을 모집하였는데 30여명의 회원이 모집되었다. 이날 행사는 노래와 피아노 연주, 섹스폰 연주등 많은 음악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재미를 더해주었는데 특히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전주지부 노래패 '어울림'이 힘차게 '불나비' 등을 부를 때는 한데 어울려 힘찬 박수와 합창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참가자 일동은 전교조 신동범 익산지회장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석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행사를 마쳤다. 준비위원회측은 그동안의 광고후원과 당일 행사에서 모금된 후원금을 모아 전북지역출신 양심수들과 전북지역복역 양심수들에게 전달하고 인권단체활동비에도 일부 보탬 예정이며 지속적인 양심수후원활동을 위해 "양심수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률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김선명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국방경비법'으로 구금되었던 출소 장기수들이 "법률로 제정 공포된 일이 없는 '국방경비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고 수십년간 불법구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된 세계최장기수 김선명(71, 만43년 10개월 구금), 안학섭(66, 만 42년 5개월 구금), 한장호(73, 만 37년 9개월 구금)씨 등 3명은 23일 서울 민사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방경비법'이 '1948년 7월5일 공포, 법령호수 미상'으로 '남조선과도정부 법률'로서 일부 법률집에 수록되어 마치 법률인 것처럼 집행되어 오다가 62년 1월20일 군형법의 제정과 함께 일부 조항이 폐지되었다"면서 "그러나, '남조선과도정부 법률'을 제정한 '조선과도입법의원'은 이미 48년 5월19일 해산되었으므로 그 이후 조선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한 법률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48년 7월5일 당시 민군정 역시 어떤 법률도 공포한 일이 없고, 대한민국 수립 이후 국회가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은 처음부터 미군정 당국에 의하여 법률로 제정된일이 없으므로 그 효력 여부를 따질 여부도 없이 대한민국에서 법률로 효력을 가질수 없다고 주장했다. 모든 법률은 제정되어 공포되어야만 그 효력을 받

생할 수 있고, 법률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방경비법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법률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들은 "국방경비법이 법률로 제정, 공포된 일이 없는 이상, 그것에 근거한 '기소'와 '재판', '형의 선고'와 같은 외형상의 행위가 어떤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95년 8월15일까지의 수감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구금'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김선명씨는 50년 한국전쟁에 인민군 병사로 참전하였다가 51년 포로로 체포, 안학섭씨는 한국전쟁에 인민군으로 참전하였다가 53년 체포, 한장호씨는 57년 11월20일남파되어 구속되어 장기수로 수감중 지난해 석방되었다.

한국전쟁 전후 체포되어 국방경비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장기수중 이들이 처음으로 국방경비법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

62년 1월20일 군형법이라는 것이 나오기까지 전까지 의심없이 시행되던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이라는

법률은 6.25전쟁 중에 특히 위력을 떨치던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하여 처형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는 알 길도 없거니와 그 중에 얼마나 무고하고 억울한 사람이 있는지는 아마 상상도 못하리라. 그런데 그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45년 8월9일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항복하자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는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에 군정을 선포하고 제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을 설립하여 군정법령(제141호부터는 남조선과도정부법령)을 공포·시행하였다. 그 중에는 현재까지 유효한 것이 있다. 미군정은 48년 3월17일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5호로 국회의원선거법을 공포하고 48년 5월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였으며 국회는 48년7월12일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장 이승만은 7월17일이 헌법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도 같은 날 공포·시행되었으며 48년 8월15일에는 정부의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법령집을 보면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은 48년 7월5일 공포, 48년 8월4일 효력 발생, 법률호수 미상이라고 써여 있다. 그러나 48년 7월5일 이러한 법률이 공포된 일이 없다. 미군정은 군정법령(남조선과도정부법령) 이외에 46년 8월24일 군정법령 제118호로 창설한 조선과도입법의

원에서 제정한 '법률'을 인준, 공포한 일이 있으나 그것은 47년 5월6일법률 제1호에서 48년 5월19일 법률 제12호(조선과도입법의원의 해산)까지를 제정하였을뿐이었다.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09호(법령 제13호)가 48년 7월3일에 공포되었고, 같은 법령 제210호(동결재산의 해제)가 48년 7월12일에 공포되었으므로 그 중간인 7월5일에 다른 법령이 공포될 수 없고, 더구나 48년 5월20일로써 이미 해산된(법률 제12호)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률을 제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렇게 공포된 일이 없는 법률을 법률이라고 하려니까 그 법률호수는 '미상'이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국방경비법을 법률인양 적용했고, 군법 피적용자인 군인·군속 등은 물론, 국방경비법 제32조(이적), 제33조(간첩)의 죄는 민간인에게도 적용되었다. 국민들은 이것이 법률인 줄속아서 살아왔고 허구많은 사람들이 그 법률에 의하여 처형되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위원회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다고 하지만 도시 법률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할 것일까?

출소하신 장기수분들의 주소를 구합니다. 신원노출을 꺼려하셔서 알려지 않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하는 바램으로 광고합니다. 주번에 계신 분들의 주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화와 인권) 주소 그대로입니다.

검찰 5.18 수사결과 비난

전국연합·민변 성명

23일 검찰이 5.17내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전·노씨를 비롯한 핵심관계자 8명(관련 국회의원 3명 국회의원회 기소)을 기소하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성명을 발표, "검찰의 결정은 5.18특별법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전국연합은 5.17내란의 진실이 정확하게 규명되고 제대로 된 청산을 법률이라고 하려니까 그 법률호수는 '미상'이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국방경비법을 법률인양 적용했고, 군법 피적용자인 군인·군속 등은 물론, 국방경비법 제32조(이적), 제33조(간첩)의 죄는 민간인에게도 적용되었다. 국민들은 이것이 법률인 줄속아서 살아왔고 허구많은 사람들이 그 법률에 의하여 처형되었다.

"사인규명, 책임자 처벌"

이덕인대책위, 답동성당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장애인노점상 고 이덕인 열사 사인진상조사위원회」는 22일 오전 인천시 답동성당에서 사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씨의 동생 이정운(23)씨, 아암도 노점상 김민태씨, 불교 인권위 서래스님 등 5명은 "고인이 변사체로 발견된 지 56일이 되었다"며 △대책없는 철거를 지시한 인천시장, 연수구청장, 인천 남부경찰서장은 즉각 사퇴할 것 △장애인

성명을 발표, "검찰이 5.18 문제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흔적이 역력하다"고 비난했다. 이런 근거로 △당시 광주지역 대대장급 이상 공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성명을 발표, "검찰의 결정은 5.18특별법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전국연합은 5.17내란의 진실이 정확하게 규명되고 제대로 된 청산을 법률이라고 하려니까 그 법률호수는 '미상'이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민변은 검찰에 대해 △5.18 광주학살 발포 명령사가 임명되어 수사와 소추를 담당해야 한다"며 "또한 검찰의 한계를 절감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도

정부3개 유보조항 철회시사

유엔, 어린이 권리 조약 정부 최초 보고서 심의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가 유엔 무대에서 심사대상에 올랐다. 유엔 아동권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센터에서 지난 18.9일 이틀간정부의 어린이권리조약 최초 보고서 심의를 했다. 이 회의에는 아동권위원회 의장 Alila Belembaogo씨등 위원 7명, 허 승 주재네바 대사 등 정부 대표단 10명이 참석했고, 옮겨버로 민간단체를 대표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연대회의) 실무간사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씨가 참석했다.

첫날 회의에서 허대사는 "성장 위주의 국가정책으로 인한 아동권의 제한과 과중한입시제도의 부담, 전통과 문화로 인해 아동은 '미성숙한 성인'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가 있다"며 시인했다. 또 그는 한국정부가 유보한 3개 조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정기적인 부모면접권, 아동 입양이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하는 것,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아동의 경우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도록 보장하는것)에 대해 "관련 민법과 형법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위원들은 공로로부터 회의 초반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는 △국내법과 조약의 조화방안 △아동권 관련예산 할당 문제 △조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문제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촉구하는 조직과 방

법의 문제 △민간단체와의 협력과 조정 등에 대해 정부 대표에게 질문했다.

특히 아동 입장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날 정부대표는 지난해 8월 구 성된 아동권리에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가 있다며, "이 위원회는 아동권 조약의 홍보, 전문집단의 훈련, 아권리의 증진을 정부에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국내에서도 알려지지 않고, 민간보고서를 제출한 연대회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웠다.

회의 둘째날, 위원들은 아동에 대한 성차별 중 태아 감별문제, 가정내 성폭력 대처방안, 장애아동의 교육 기회 확대방안, 국가보안법에 의한 아동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여부 등 광범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정부대표단은 차별, 성감별, 학대 등을 기존법률이 엄격히 금지하고있으며, 아동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한국 학생시위의 99%는 폭력시위"라는 등의 본질을 벗어난 답변으로일관해 위원들의 비웃음을 샀다. 이번에 심의 결과는 오는 26일 아동권위원회의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채택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권고는 이후 아동권 관련예산 할당 문제 △조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문제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촉구하는 조직과 방

계속되는 선거철 공안탄압

희망의 노래 꽃다지 대표 이은진 구속
진보정치연합 회원 무더기 구속

신년들이어서도 계속해서 근거없는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늘고 있어 선거철용 공안탄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합법적인 활동 (음반, 콘서트)과 방송출연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희망의 노래 꽃다지' 대표 이은진(31세)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2월 3일 오후 1시 50분경에 사전구속영장의 집행으로 이루어졌는데 영장에는 <노래책 희망의노래>의 대표편집과 음반제작으로(이적표현물) 남한 사회주의상을 노동자,학생에게 선전선동, 배포. 또 혁명사상으로 수령찬양을 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꽃다지는 92년에 창단해서

여섯차례의 콘서트, 한장의 음반과 두장의 음니버스 음반으로 건강한 노래를 보급해 온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3일 아침 진보정치연합 노동위원장 민병래씨와 부인 구미경씨, 진보저널 초기 편집국장을 역임했던 강희원씨, 논산에서 92년 총선에 민중진영 후보로 출마했던 우희정씨, 그리고 권순미(고려대 대학원과정)씨, 윤형욱(광노협선봉대)씨등 6인을 연행, 구속했다.

이들은 모두 사노맹재건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책위측은 이들이 지난 93년 사노맹해산이후 활동을 중지한 사실을 들어 선거철용 공안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 유구영씨 간암 판정 투병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 정책부장 유구영(38)씨가 간암 중기 판정을 받고 투병중이다.

유씨는 고려대를 중퇴한뒤 80년대초부터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영등포 기계공단에서 노동자 생활을 했고,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정책실장을 거쳐 민주노총준비위 시절부터 정책실에서 근무해왔다. 그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80년대 중반에도 간이 안좋아 치료를 받은뒤 곧 회복된 듯싶었으나, 지난 1월초 진료에서 간암 중기 판정을 받은 것

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유구영동지 완치를 위한 후원인단(대표 진방주 목사)를 구성하고 유씨의 쾌유를 위한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중앙위원들이 10만 원씩 모금하는 것을 비롯, 조합별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후원인단은매주 일요일 오후5시 영등포 산일선교회(성문밖 교회)에서 기도회를 가지고 있다.

국민은행 031-01-0410-415 권 용 목
국민은행 807-01-0249-355 유 구 영

택지개발사업이란 무엇인가?

용인철거민 신연숙씨의 사망 사건 배경

여타 재개발에 비해 손쉬운 택지개발

택지개발 사업은 비교적 나대지(빈땅)의 비율이 높은 농공지역, 준농림지역, 또는 시외곽에 택지를 조성하여 일반건설업체나 도시개발공사 등에 조성한 택지를 분양하여 임대주택(공공, 장기)을 포함한 공동주택(apartment)을 건립하는 개발사업이다. 개발이익에 관한 권리 관계는 여타 재개발 사업에 비교해 간단하다.

시공사(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가 개발지역의 지구나 가옥주에게 토지수용과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고나면 직접적인 권리관계는 일단락된다. 단지 개발지역에 거주 하였으므로 당해 개발지역에 건립되는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분양(일반분양조건)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뿐이다.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공공(또는 장기)임대입주자격 또는 주거대책비중 택일 할 수가 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에서는 토지수용시 보상수준이 비현실적인 점과 임시거주대책이 갖춰지지 않은 점등이 문제로 대두된다.

허울뿐인 사업집행으로 실거주민 축출결과 야기

노태우정권 당시주택 200만호 건설로부터 비롯된 택지 재개발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없이 무리한 집행으로 인해 정책만을 위한 정책, 보여주기식의 사업집행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중상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로 인한 실질적 주거수요에 대

한 물이해와 배제를 통해 사실상 현 거주민을 축출하고 마는 결과를 낳았다.

토개공-공공소유 토지를 민간의 투기적 개발에 의존

사업지구 내의 공공용지(국공유지)를 국민 공공의 소유와 국가적 복지 차원에서만이 고려되었어야 함에도 시장경제에 의해 민간에게 팔아넘긴다든지, 그 이외의 개발구역 내의 사유지 등을 국공유지로 매입했다가 다시 민간에게 되파는 형식으로, 토개공은 투기 및 전매를 일삼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인 개발 이후의 수혜로부터 지역 주민 이하 국민적 주거권의 위협이 상존한다.

현거주민의 현실성에 기초한 대책마련이 시급

세입자 대책으로 주어지는 이주대책비가 전혀 현실적이지 못할 뿐더러 공영공공임대 주택의 건립 보다는 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 5년 후 분양) 또는 민영임대주택의 건립을 시공주체가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임대주택의 건립을 기피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옥주와 세입자에게 공히 발생하는 문제점은 단기간에 집중된 대규모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전월세가 폭등하고 있는 조건 속에서 가수용단지나 임시거주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선입주.후철거의 원칙이 견지되는 순환식재개발로 바뀌어야 한다.

평화와 인권

제 52 호 (96. 2.28)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국민 손으로 독재자 부정축재 재산 환수"

참여연대, 인권피해자로 소송단 꾸릴 예정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5,6공 인사들의 뇌물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부정축재 재산의 국환수운동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사]는 27일 오전 10시 필리핀 전 상원의장인 쥘비토 살롱가(66, Jovito R. Salonga)씨를 초청해 '필리핀의 경험 : 마르코스와 그의 일가, 친지들의 부정재산 환수'란 제목으로 강연회를 가졌다. 살롱가의원은 86년 '민중의 힘' 혁명 이후 아키노 정부의 [좋은 정부위원회](Presidential Commission on Government,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마르코스 일가의 축재 재산을 찾아내고 환수하는 일을 전담했다.

방직특별법을 제정하여 부정부패를 영원히 추방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국내원로와 피해자 등이 환수단을 구성하고 스위스와 미국내 은닉재산의 소재 추적과 확인작업을 벌이며, 스위스와 미국에서 '국가 혹은 전두환, 노태우씨를 피고로, 피해자들을 원고로 하는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전개할 계획이다. 필리핀 전 상원의

원 살롱가씨 초청강연은 그 첫 사업인 셈이다.

오재식(참여연대 공동대표)씨는 "환수단과 소송인단이 구성이 되면 독재잔재 청산 운동 주체들과 국제연대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라며 "국민 스스로가 운동의 주체가 되어 하는 운동인 만큼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과거청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6 "사회개혁 실현 공동선언" 발표

민주노총·민교협·전국연합·환경운동연합등 8개 단체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화를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등 8개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은 23일 오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96] 사회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선언에서는 "인간의 모든 가치를 경쟁의 상품으로 대치시켜 버린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제 삶의 해리로 도피시킨 재산을 국민의 힘으로 환수하고, 이를 피해자들의 배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이를 기초로 부정부패

항상, △남녀 평등 구현,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 토대의 건설등의 사회개혁 과제를 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의 출범을 계기로 정당한 노동권의 실현과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정착이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적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민주노총 합법화와 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 활동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8개 단체는 공동선언을 통해 "무엇보다도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최초로 사회 개혁에 대한 공동의 입장과 정책도 확립을 통한 삶의 질

특별사면 양심수 완전제외
보수세력만 면죄부 비난불몰

정부는 23일 김영삼 대통령 출범 3주년을 맞아 이부영 전의원등 24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등을 단행했다.

하지만,이번 특별사면복권에는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16년째 복역중인 석달윤(62)씨가 무기에서 20년형으로 감형된 것 외에 양심수는 완전히 제외된 반면 슬롯머신 사건에 연루되었던 천기호 전치안감등 부정비리 사범은 포함시켜 재야단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현재, 감옥에는 3백52명의 양심수가 갇혀 있다.

통해 집중된 권력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견제력을 형성하고 새로운 개혁의 좌표를 제시하며,새로운 사회연대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 개혁과제로서 △복수노조 금지조항과 공무원,교사의 단결권 제한조항의 삭제 △3자개입 금지조항 및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노동법 개정 △정경유착과 비리 관행 근절 △토지과표의 현실화 △민간기업에서의 여성 고용할당제 도입 등을 천명했다.

“국가보안법 철폐”등 결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5기 대의원대회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은 지난 25일 연세대학교 상경대 경영원 강당에서 전국 대의원 3백80명이 모인 가운데 제5기 대의원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95년 사업평가와 96년 사업계획과 함께 전국연합의 확대재편과 정치조직 건설을 위한 특별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전국연합의 96년 주요사업으로는 △국가보안법 철폐 △5·6공원전정산 △통일관련 단일행사 추진 △주한미군 기지반환운동 등이 결정되었다. 이번에 채택된 '민주주의민족통일운동의 조직발전을 위한 제5기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은 민

족민주운동의 대중화를 이룩하고 연합전선조직 강화 △정치조직 건설의 토대 강화 △전국연합의 자기혁신운동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국연합은 결의문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대중조직 토대를 강화하고 민생민권문제와 함께 환경, 교육, 교통, 보건 등의 분야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5기 의장단에는 4기 의장단 이창복, 천영세, 윤영규 씨가 연임되었다. 현재 전국연합은 전교조, 한총련, 전농 등 28개 소속단체와 민주노총, 민예총, 민교협, 민가협 4개 참관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권영길위원장 석방 국제캠페인 강화 국제자유노련, 3월 11일 방한

제 3차개입금지 위반혐의로 구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 석방캠페인을 벌여온 [국제자유노련(ICFTU)은 민주노총 양규현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을 계기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제자유노련 집행위원회는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구속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하고 각국 노

총 및 관련 국제단체를 통해 한국정부에 항의서한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김영삼대통령에게 권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올해 2월 민주노총 양규현 수석부위원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자 더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이게 된 것이다.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의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이 널리 읽혀지고 다양한 취재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십시오.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민은행 508-24-0144-967
예금주 문 규 현

호봉체계 성차별 문제 쟁점화 법원 연세대에 약식명령, 에너지관리공단 여직원 회사 고발

법원에서 최초로 남녀 성차별 호봉체계에 대한 약식명령이 내려진 데 이어 승진상의 차별을 문제로 여직원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고용상의 남녀 성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연세대학(총장 송자)은 지난 93년 5월 단체협약의 중요사안이었다던 입사시기가 같은 남녀노동자의 호봉 차이를 '군 경력으로 인정'하고 같은해 10월 남성 노동자의 군 경력을 호봉에 재가산함으로써 남녀간 성차별 호봉체계를 도입하였다. 이에 김은수(32, 도서관 사서)씨등 10여명은 노조와 총무처장을 면담하며 문제해결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이 이를 무시하자 김씨 등은 94년 7월 노동부 서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서부지방사무소(근로감독관 안재형)는 연세대학을 평등법 위반혐의로 수사하여 서울지방 검찰청(서부지청)에 고발하였다. 이에 법원은 올 1월

연세대학에 대해 약식명령(1백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정양희(36, 고용평등추진본부 사무국장)씨는 "남녀간의 차별임금이 최초로 검찰에 고발되어 범죄사실로 인정된 점에 주목하고 아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판례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비록 약식명령이긴 법해석이 내려져 상징적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성, 황정미(30, 집단에너지사업부)씨 등 6명이 13일 회사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에너지관리공단노동조합]은 92년에 평등법 위반시정요구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해 시정조치 통보를 받아 여직원들이 승진되었다. 하지만 공단측은 95년 정기승진시 승진대상 여성 10여명에 대해 임용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결과를 발표, 이에 노조는 다시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노동청은 "여성의 근무기간은 승진과 상관없다"며 지난번과 반대되는 의견을 통보한 바 있다.

살인철거 즉각 중단 촉구 세계주거회의의민간위

[96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공동대표 권태준 등 3명,한국위원회)는 19일 서강대 메리홀에서 무주택자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6 주거권 실현을 위한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한국지역 주민대회'를 가졌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공동대표 김영준 등, 주거연합) 창립 6주년을 겸해

평화와 인권

제 53 호 (96. 3.21)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선거연령 만 20세 평등권 침해 18세로 개정 경우 유권자 1백80만명 증가

'선거연령을 만 20세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4·11 총선을 한달 앞둔 현재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만20세 미만의 대학 1,2학년생과 직장인 등 15명은 현행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의 선거연령 만 20세 규정이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주권과 제11조 1항의 평등권,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2일 오전 한청화변호사를 통해 위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라학진(19, 서울대 정치 2학년)씨는 "혼인자격, 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자격, 병역의무 및 현역입대 자격, 공무원 자격, 운전면허 취득자격 등은 그 기준을 만 18세로 하고 있는데 반해 유

독 선거권만은 그 기준을 만 20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다른 법률과 형평에 어긋나는 선거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원석(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씨는 "만 20세미만의 직장인은 세금과 직장인 등 15명은 현행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의 선거연령 만 20세 규정이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주권과 제11조 1항의 평등권,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2일 오전 한청화변호사를 통해 위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라학진(19, 서울대 정치 2학년)씨는 "혼인자격, 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자격, 병역의무 및 현역입대 자격, 공무원 자격, 운전면허 취득자격 등은 그 기준을 만 18세로 하고 있는데 반해 유

성남미래 김태년씨 보석 김씨, 재판에 최선 다할 것
지난해 11월15일 간첩 김동식으로부터 무전기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남미래준비위원회 대표 김태년씨가 16일 정봉진판사(서울지법 형사23부 부장판사)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다. 김씨는 보석결정이 된 것

이 뜻밖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안기부에서 받은 가혹행위에 대해선 "함께 구속되었던 박충렬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며 "현재 무죄로 석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재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 세아를 즉각 처벌 유가협등 고발장 접수
15일 오후3시 유가협(회장 박정기)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등 사회노동단체는 서울지방검찰청에 '전두환씨 세아를 집단폭행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주거 빈곤의 문제 최저기준 마련돼야 국가보고서 작성에 민간위원회 참여주장

'세계주거회의와 인간적 주거환경-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전략수립과 주거권 확보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공동대표 김진홍등) 회의가 8일 오후 2시기독교연합회 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1부는 오는 6월3일부터 14일까지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회의에 대해 주거, 환경, 노동,교통 등 민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각 관련 단체의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2부는 민간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전망에 대한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주거문제에 관해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씨는 "그동안 많은 주택이 건설되었고 이에 따라 평균적인 주거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졌으나 주거빈곤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고, 주택소비에서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씨는 주거빈곤의 문제에 대한 기준인 최저주거기준이 설정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활동방향과 전망에 대해 조홍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교수는 국제회의에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위원회가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의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이 널리 읽혀지고 다양한 취재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십시오.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민은행 508-24-0144-967
예금주 문 규 현

"진술서 수사관이 직접 작성했다"

허인희씨 3차공판, 간첩 김동식사건 조작의혹

간첩 시나리오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지법(317호 법정)에서는 소위 '간첩 김동식사건'에 연루된 허인희씨의 3차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허씨와 김동식씨의 만남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 심리로 진행됐는데,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세 사람 모두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자신들의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관련없다고 증언함으로써 이번 사건의 조작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두번째 증인으로 나선 한성옥(식당종업원)씨는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른채 형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했다. 두 번의 진술중 한 번은 자신이, 또한번은 남편이 진술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형사들이 사진을 보여 주었을 때, 비슷한 사람을 본 것 같기도 하다는 진술만 했다"고 밝혔으나,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진술서에는 한씨가 실제로 김동식씨와 식사하는 피고인을 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증인 박미아(다방 주인)씨도 "경찰이 제시한 김동식

씨의 사진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이와달리 진술서에는 김씨를 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첫번째 증인 이훈개(국회 방호조장)씨의 경우, 진술서 일부를 수사관이 직접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검사와 변호인간에 연달아 반대신문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한편, 이날 박미아씨의 증언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다. 박씨는 "경찰조사가 있기전 다방으로 박영희씨라는 여인이 찾아와 취직을 했는데 4-5일만에 그만둔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뒤 경찰과 함께 나타나 경찰로 여겨졌다"고 진술함으로써 이 후 재판전개에 변수로 등장할지가 주목된다.

'간첩불고지 사건'으로 떠들썩하게 시작된 이번 사건은 관련 혐의자들의 불구속 결정에 이어 몇몇 증인들의 예기치 못한 증언으로 당초 수사기관의 시나리오와는 어긋나게 진행되는 듯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모두 검찰측 증인이었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사노맹 관련 또연행 김정희씨 임신 3개월

14일 오후 5시경 김정희진보정치연합 울산지부 사무장 김정희(부산대, 86)씨가 부산시경에 연행되었다. 사노맹관련자측은 김씨 역시 '사노맹가입혐의'로 연행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정희씨는 현재 임신 3개월이며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휴가중이었다.

한편 올해들어서만도 사노맹관련사건으로 연행된 사람은 모두 17명에 이르고 있다.

"정책의 부재, 인권의 부재"

김영삼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토론회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등, 여연)은 14일 프레스센터에서 김영삼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전개된 여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여연은 출범당시 공약사항에서 내세운 여성정책의 실현정도, 여성계의 의견 수렴과 국제기준과의 비교 등을 틀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간략히 담는다.

□여성의 고용안정현황과 과제 - 여성민우회 정강자

정부는 신경계정책의 여성노동정책과 관련해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비정규노동인력으로 충원하고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주부·고령자·장애인을 산입인력화하고 시간제노동의 활성화, 파견노동의 합법화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시간제여성노동자(93년 37만명), 파견제여성노동자(94년 66만명)의 증가로 여성상용노동자가 감소되고, 비정규직여성노동자를 양산하는 등 여성고용구조를 악화시켜 고용불안을 가속시켰다. 그러므로 '유휴인력의 활용'보다 '산업인력의 확보·개발'의 관점에서 정부의 여성인력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여성의 인권현황과 과제 -여성의 전화 이상덕

정부가 내놓은 정책중 성폭력·매매춘·정신대문제 등은 평등과 보호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

다. 실제 추진계획에서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제도의 개정과 가정폭력에 대한 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 전후 아동보육 현황과 과제 -지탁연 남미영

영유아의 보육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은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핵심이 있다. 그러나 숫자만 늘리는 것은 보육 문제가 근본적 해결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보육정책의 공공성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재정확보해야 한다. 또한 문제의 핵심주체인 아동이 보육과 방과후지도, 학교급식과 관련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여성정책추진평가와 주무부서의 문제 -여연 이미경

김영삼 정부는 '삶의 질 향상'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제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 도입에서 '여성의 시각'이나 저소득층의 시각이 되돌아와 있었으며 가사노동에 대한 충분한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만들어진 여성발전기본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무장관 제 2실을 여성부로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에 여성국(과)이 신설되어 중앙부처의 사업을 연결해야만 여성의 지위와 인권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와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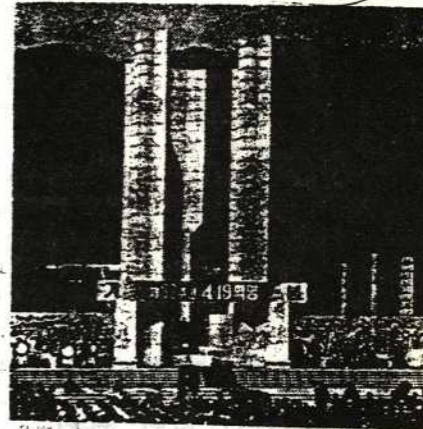
제 55 호 (96. 4. 24)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전 준 형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금주의 사진한장○



죽어갔다!!
그날도, 오늘도
꽃같은 젊음들!
민/주/주의를 위해!



아직도 관계기관대책회의의 망령이 남아 있다니 관계기관대책회의, 민주노동 전북지역본부 노동절행사 방해

전두환·노태우가 범피자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는 지금도 군사독재시절의 대표적인 반민주적 기구인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것이 전북지역에서도 여전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관계자에 의하면 제 106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를 전주시청 앞에서 개최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마친 뒤 시청광장 사용문제로 시청측에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사용불가 통보가 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청 총무계장이 "안기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광장 사용불가방침이 정해졌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안기부등 수사기관과 해당 주요행정기관등이 모이는 임의적 기구로서 군사정권 당시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으로 인해 그 실체가 밝혀진 바 있으며 군사정권이 주요한 권력유지와 통치수단으로 삼아온 바 있다.

제106주년 노동절 기념대회, 성황리에 열릴 예정 5월 1일, 12시부터 전주 덕진종합경기장 앞에서

민주노동 전북지역본부·한국통신노동조합 전북지방본부를 비롯한 도내 1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제106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전북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06주년 노동절 기념대회가 소속 조합원과 시민학생 3000여명이 참여한 5월 1일 오후 12시부터 성황리에 열릴 예정이다.

"제106주년 세계노동절기념 전북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정오에 한국통신노동조합 전북지방본부가 주관하는 "정보통신주권수호와 개별독점방지를 위한 국민대회"를 갖고 바로 이어 1시부터 노동절기념대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집회가 끝난 뒤 집회 참석자들은 덕진경기장 앞에서부터 토아백화점 앞까지 '사회개혁'과 '산별노조 건설'을 주장하는 선전전을 가질 예정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도내 학생운동 조직사건! 도경, 원광대학교 정현중(야간장학과 89학번)군 연행

지난 23일, 원광대학교 학생 정현중군이 전북도경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들에 의하면 지난 94년부터 "단기학생동맹" 조직사건으로 수배를 받아오던 정현중군이 군입대를 앞두고 익산경찰서에 자진출두하는 형식을 밟아 수배생활을 정리하려 했으나 갑자기 전북도경 소속 형사들이 들이닥쳐 연행하여 갔다는 것이다.

정현중군은 91년에도 4.19시위판계로 구속된 바 있으며, 92년 원광대학교 야간강과 제13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학생운동을 열심히 해오다가 지난 94년 조직된 단기학생동맹사건에 연루되어 수배를 당해 현재까지 수배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원광대학교 야간강과 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은 즉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변호사선임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단체, 판검사 감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조계의 공개화와 민주화를 위해 법조인자료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법조인자료실은 전현직 판검사 2천6백여명의 개인파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개인기록과 경력 등을 신고 있다. 또한 사법감시센터는 부장판검사를 중심으로 92년 이후 3천여건의 판결자료를 모아 관리하고 있으며, 이후 변호사로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법조인의 소송 및 재판기록, 관련 신문기사, 판결문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법조인자료실에는 시민들의 제보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796-8364).

성대 분신 황혜인씨 장례

유가족 시신 화장 고집

지난 16일 분신사망한 황혜인씨의 장례식이 18일 오후 2시 성균관대학교 울전교정(수원소재)에서 학생·시민 2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학생 고 황혜인열사 학생장'으로 치뤄졌다. 참석자들은 "김영삼정권의 살인적인 민중탄압이 죽음을 부르고 있다"며 정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황씨의 시신은 유가족의 주장에 따라 속초 화장터에서 화장되었다.

여수수산대 오영권씨 장례

현정권타도 유서 남겨

지난 19일 '김영삼정권타도, 조국통일' 등의 유서를 남기고 분신사망한 여수수산대생 오영권(21)씨의 장례가 22일 거행되었다. 윤구는 여수수산대에서의 영결식과 시내노제를 거쳐 장지로 이동했다. 한편, 21일 저녁 여수지역 학생들은 분신과 관련, 왜곡 보도를 내보낸 MBC를 항의 방문했다. 여수 MBC는 19일 오씨 사망에 대해, 오씨가 작년 한국통신파업시위에서 경찰의 돌멩이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것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도했다.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인권옹호와 양심수후원을 위해 "평화와 인권"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구독료는 월2,000원-년 10만원입니다.
전북은행 711-22-0006413 문규현
국민은행 508-24-0144-967 문규현

범민련 고애순씨 제수감 위기 모면

손배소송 첫 재판 5월10일

18일 태아사산으로 형집행이 중단되었던 고애순(29, 광주전남연합 자통부장)씨의 보석신청이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 이틀을 남겨놓고 받아들여졌다. 이 보석신청은 이상훈판사후임으로 온 오세욱(광주지법형사합의 2부)판사에 의해 내려졌다. 그전에 구속기간중 보석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광주지역단체들은 "고씨가 태아사산을 하기 전에 재판부의 이성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뒤늦게나마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장기수 2명 단식농성 광주교도소 김동기씨등

광주교도소에서 장기수 김동기(66·31년 복역), 최수인(57·32년 복역)씨가 서신교류불허철폐를 요구하며 16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김씨의 경우 외부로부터 온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으며, 최씨의 경우 외부로 쓴 편지가 몇차례 부쳐지지 않았다고 한다.

단체협상중 노동자 구속 정성철씨등 국보법 위반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을 준비중이던 노조원이 집앞에서 잠복중인 경찰에 의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

속돼, 경찰과 회사측에 의한 노조탄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남도정은 지난 19일 밤 10시경 태광산업 울산공장(공장장 허의용) 노조원인 정성철(27, 조사통계부장)씨와 윤현정(24, 여성부장)씨를 윤씨의집앞에서 연행,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이들은현재 울산중부서에 수감되어 있으며, 경남도경(장원 소재)으로 오가며 수사를 받고 있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은 현재 노조와 회사측이 단체교섭중이며, 이 과정에서 정씨는 임금요구안을 작성하는 등 노조업무의 중책을 맡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재벌의 통신시장 독점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개인휴대통신 범국민대책위원회> 전북지역에서도 5월 1일 1차 국민대회

'정보통신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위한 개인휴대통신(PCS) 범국민대책위'(공동대표 김금수, 대책위)가 결성되었다. 이는 통신사업에 대한 국가독주를 견제하고 통신사업이 재벌에 의해 이윤추구 수단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금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대표는 "PCS를 비롯한 정보통신사업은 국가와 산업, 국민을 연결시켜 주는 신경망과 같은 중대 산업임"을 강조하고 "현재의 사업자 선정과정과 결정이 국민적 토론과 공유없이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제기했다. 따라서 "정보통신의 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위해 국민적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위 구성 배경을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현재 진행중인 재벌기업 위주의 사업선정에 있어 통신장비제조 재벌(현대·삼성·대우·LG)중 한

군대를 검토사업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들 재벌이다. 더욱이 "통신서비스간 구별이 모호해지고 유무선이 통합되어 멀티미디어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PCS, 파수공용통신(TRS) 등 각 서비스별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재벌들에게 사업권을 분배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책위에는 전국연합과 민주노동당 43개의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5월 1일경 노동절 행사와는 별도의대규모 집회를 잡고 있다. 한편 정부는 15일에 시작된PCS와 TRS등 통신사업에 대해 6월까지의 사업자 선정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에서도 23일, 5.1절조직원위원회 대표자회의 석상에서 "PCS 전북대책위" 구성에 대해 동의하고 5월 1일 12시 집회를 가지기로 결의하였다.

국민 참여 속에 통신업 재검토 필요

23일, PCS문제 시민사회단체 공개토론회

17일 구성됐던 '정보통신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위한 개인 휴대통신(PCS) 범국민대책위'(공동대표 김금수, 대책위)는 23일 PCS 사업자선정 등 정보통신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23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강당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는 1백50여명의 시민과 노조원들이 참석해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김금수(대책위 공동대표,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씨는 "98년 통신시장의 완전 개방을 앞두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앞서야 할 통신산업의 지분을 재벌이나늪가질 위험에 처해있다"며 "뒤늦게나마 구성된 범국민대책위가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통신사업자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신사업이 갖는 특수성에 대한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저공해산업으로 시장잠재력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의식까지도 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산업에 전체 국민과 통신관련 노동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89년부터 진행된 미국의 통신개방압력으로 내적 역량이 키워지기 전에 모든 것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진행되는 정부주도의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통신산업정책의 공공성과 공익성, 기간산업적 특성, 주체인 국민의 동의 등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주권국가의 대표로써 통신시장 개방압력에 대처해야 하고,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공익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므로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계획은 철회해야한다.

□ PCS 사업자선정 문제점과 대책 (김영철 한국과학기술 청년회 지도위원 발표)

통신시장 개방과 통신사업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검토 (김상곤 민교협 공동의장발표)
통신서비스 사업과 결합해 통신시장을 독점·지배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기타 기업들의 몫으로 1개의 사업권을 할당된 것은 법적 최대주주 지분 제한 등의 보완책이 없어 대주주 재벌에게 흡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정보통신산업이

PCS 사업자의 선정은 경제적인 PCS망의 구축 방법과 저렴한 요금체계, 기간망 보유자에 의한 서비스의 조기 제공 등이 이뤄진 다음에 그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정책의 방향은 국익과 국민 편익에 복무해야 한다. 서비스 체제에 대한 논점은 '독점이나, 경쟁이나'가 아니라 '망의 통합이나,분할이나'는 차원에서 맞춰야 하고,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에이피루쟁, 재판투쟁으로 연장전

첫공판에서 이재경 사무국장 폭력등 혐의사실 부인

54일간의 파업을 마치고 정상조업에 돌입한 에이피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이 법정투쟁으로 연장되었다.

파업을 마치고 5명의 구속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노조의 첫 구속자인 이재경 사무국장에 대한 첫 공판이 8월 7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전주지방법원에서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승겸사는 사무국장이 급행기관을 둘러싸고 폭력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와 노동자들이 화염병 쇠파이프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경 사무장은 사측 관리사원들과 몸싸움을 한적은 있으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를 맡은 진봉원 변호사는 파업전 태업행위가 사측이 무비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는등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에게 압박을 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생산량이 감소한 것이며 노조 지도부의 태업지침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공소장 기재사실을 반박하였다. 특히 24일, 휴일에 조합원들이 공장울 비운 틈을 이용하여 관리직사원들이 라인을 가동하다가 조합간부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 사무국장이 개입하였다는 공소장의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당시 사무국장은 고향의 어머니 집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고 변론하였다.

이날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대하여 이재경 사무국장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자신이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 사실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판사 연남구)에서 이를 수용하여 확인작업을 한뒤 2주후 소개하기로 하였다.

다음 공판은 21일(수) 10시

구속된 에이피노조 조직부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지난 6일 경찰에 자진출두한 에이피노동조합 조직부장 신소철(28)씨가 진봉원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피노동조합에 의하면 현재 원광의료원에 입원하고 있는 신소철 조직부장의 어머니가 긴 암투병 끝에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통고를 받고 병원에서 퇴원을 앞두고 있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기독교, UN인권소위 외국인노동자인권탄압 폭로

"외국인노동자인권보호 기독교대책본부"(본부장 최의팔, 기독교대책본부)는 5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소위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노 인권보호를 위한 보고서'를 지난 2일 제출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78년 비준한 인종차별철폐조약에 비추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과 △한국노동자에 비해 50%의 월급만을 받고 △노조결성이나 가입권이 없으며 △주거도 공장내로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공안탄압, 이제 합법 월간지까지.....

전주경찰서, '말'지 '길'지등 반쯤강요

학생과 노동자, 재야 인사들의 인신구속도 모자라, 이제는 공보처에 정식 등록돼 전국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월간지에까지 공안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월간「말」지축에 따르면 지난 18일「말」8월호가 전국서점에 출고되자 마자 각 출판과 서점에 보안과 형사들이 찾아와 "판매금지도서니까 팔지말아라"는 등 협박과 조사를 했다고 한다.

전주 광장서점 이광식 씨에 의하면 전주 북부경찰서에 의한 탄압 속에서도 글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도서목록을 가져와 "판매금지 도서는 팔아서는 안되니까 반쯤하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주북부서 보안과 정아무개형사는 "담당형사의 실수였다"며 "상부에서는 몇가지 책목록을 주고, 내용만을 검토하라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러한 사태에 대해 29일 민주언론운동협의회는 성명서발표를 통해 "「말」지는 군사정권하에서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글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대협, 일 순회집회 "국민기금 반대이유 설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당사자들과 관련 민간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국민기금)과 일본정부는 팽복 51주년인 오는 15일을 기해 국민기금 2백만 연을 지급할 것을 밝혔다.

이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 정대협)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지난 달 13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일본 동경을 시작으로 국민기금 반대이유 등에 대한 순회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윤미향(정대협 총무) 씨는 "동경집회의 경우 6백여명의 청중들이 모여 강연을 들었고, 보통 다른 도시에 서도 1백50여명의 청중들이 모일 정도로 관심이 높다"며 "국민기금 반대이유를 알리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윤정옥(정대협 공동대표) 씨는 "가해자 중의 한사람 하라다가 만든 국민기금에 대해 어떠한 신뢰도 없다"고 밝혔다.

노령수당지급 당연 예산 정점으로 떠올라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소송이 31일 오전 서울고법 제3복합부(주심 이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관악구청장측에 "예산부족으로 노령수당 지급을 70세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예산편성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소송은 참여연대가 94년 이기남씨를 대신해 65세 이상의 생활보호 노인에게 지급토록 되어있는 노령수당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평화와 인권

제59호(복간1호)
1996. 11.15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평·화·마·울"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전 준 형

정의평화정보센터 "평화마을" / (561-162) 전주시 덕진구 진북 2동 1034-1번지 / ID : (천) FORPEACE (아리넷넷 인권소식) 0652-71-5939

복간에 부처

다시 문제는 인권이다!!

다시 복간호라는 이름을 빌어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즘의 세태가 '평화와 인권'을 집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서 요즘처럼 '인권'의 문제가 사람들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군사독재 시절하고야 부러지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한층더 후퇴한 시대에 더욱 엄혹해진 공안바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가?'하는 어두운 한숨을 짓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앞에 나서서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는 사람이 드물어졌다는 현실입니다. 한층더 후퇴한 시대에 더욱 엄혹해진 공안바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가?'하는 어두운 한숨을 짓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앞에 나서서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는 사람이 드물어졌다는 현실입니다. 한층더 후퇴한 시대에 더욱 엄혹해진 공안바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가?'하는 어두운 한숨을 짓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앞에 나서서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는 사람이 드물어졌다는 현실입니다.

1996년 11월 15일

<정의평화정보센터> 대표 문 규 현

제1회 "인권영화제" 전북에서도 열려

조직위원회, 12월 1일부터 4일간, 전북대학교 합동강당에서 16편 상영계획

지난 11월 2일부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막된 제1회 인권영화제가 정부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상황리에 마무리했다. 그러나, 아직 인권영화제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등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는 각 지방에서 비롯되었던 상영요구를 수용하여 11월 22일부터 시작하

는 구미를 비롯해 전국 16개 도시에서 12월까지 행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전북에서도 전북대학교 합동강당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상영할 계획이다.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은교울 영화터등이 중심이 되어 기획한 사업에 전북연합, 민주노총 전북본부등 도내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만든 전북지역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영호 목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영화제는 12월 1일, 오후 2시 서준식 선생의 인권 강연을 시작으로 이화여대에서 상영되어 좋은 반응을 보였던 '잊지말자'등 모두 16편의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다. 일요일인 12월 1일에는 강연이 끝난 3시부터, 평일에는 오후 4시 30분부터 상영

한다. 관람은 모두 무료이며, 누구나 가능하다. 그리고 매일 관람이 끝나고나면 관객과의 토론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문의<전북인권선>82-9887) **● 상영일정 ●** <12/1> 잊지말자 / 어느 관료의 죽음 / 유령을 부르며 / 도둑맞은 아이들 / 배신의 시간 속에서 <12/2> 비밀크의 시대 / 콜롬비아:살인자의 천국 / 누가 빈센트 친을 죽였는가? / 그리운 사람들 / 악마의 자식들 <12/3> 평화의 가장자리에서 / 해고자 / 미국의 꿈 <12/4> 암살학교 / 지하의 민중 / 한민족의 죽음

조직사건 연행자에게 존중될 인권없다?

최근 공안 사건, 기본권 존중조치 없어

한총련과 잠수함사건이후 당국의 행태는 진수가 될만한 것이라곤 볼볼을 가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더 이상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투다.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활동해오던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노진추) 사건'으로 50여명을 구속연행, 수배한 이후 최근의 '공산주의자 연합' 사건, '사회주의노동자' 사건, '민족해방군' 사건 등은 조작된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노진추'의 경우 공개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을 명시적인 활동목표로 하고 있었고 회원들이 민주노총내에 있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노총을 유폐하기 위해 사건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으며, '공산주의자 연합' 사건의 경우 세미나 몇번 한 것 이외의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사회주의 노동자' 사건

조직사건이라기보다는 노동자 집회장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이외에는 혐의사실이 없으며 남총련 '민족해방군'의 경우도 무슨 체계적인 조직구조가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사실은 80년대 민주화투쟁의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투쟁조직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에게는 영장제시도 없이 연행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잠을 안재우거나 구타를 당하는 등 기본적인 권조차 존중되지 않았는데 민족해방군 사건에 이르러서는 아예 경찰들이 연행사유도 가족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제시도 없이 온 집안을 뒤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사건 연행자들에게는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상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는 너무나 자명하다.

심판받는 한국인권상황

제네바에서 고문방지조약 심의회 열려

고문방지조약 심의회가 9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지난 13일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한국 인권단체를 대표하여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인권협)에서 차지훈(민변)변호사와 김수지(민가협)씨가 업저버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번에 열리는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고문방지조약)에 따른 것이다. 고문방지조약은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84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93개국 가입해 있다. 한국정부는 95년 1월 가입했으며 가입국으로서의 의무에 따라 12월 최초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심의회가 열리기 전 지난 1일, 국제앰네스티(AI)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민주운동탄압과 안기부수사권확대방침등을 반대하며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한국인권협도 "정부보고서가 구체적인 고문실상은 덮어두고 일반 법조항만을 서술했다"는 내용의 반박보고서를 준비했다.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김주환(미국 펜실바니아 대학 박사과정)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대책위원회」 11월2일 토론회 자료집중

한국에서 과연 전국민에게 강제로 부여하는 전자신분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것인가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가지 41개 항목의 개인신상정보를 하나의 아이씨(IC) 칩 속에 담은 전자주민카드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전국민에게 지문과 의료 등의 개인 신변정보가 들어있는 전자신분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 세계최초의 시도인 것은 당연하다.

세계 최초의 시도기

분단상황의 폐해는 넓고도 깊다. 그 중의 하나가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보편적인 신분증제도, 즉 주민등록증제도도 그 중 하나이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중대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서만 받는 지문을 우리 국민들은 18세만 되면 무조건 열 손가락의 지문을 국가기관에 맡긴다. 전국민에 대해 신분증발급과 지문채취가 과연 꼭 필요한 것이며 또 위험이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보기도 전에 우리는 더욱더 위험한 전자주민카드로 나가고 있다.

행사안내

- 성폭력지원센터 2주년 기념식 / 11.20(수) 오후4시 / 한남문화센터
- 성폭력 추방을 위한 결핵인 / 11.23(토) 오후 2시 / 코아앞, 객사 앞
- 양심수(강희남·이광철)를 위한 작은자리 / 11.15~16 / 그린드커피숍

편집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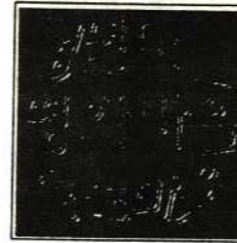
- 지난 11월 12일 전주 YMCA에서 간담회를 갖고 출범한 <안기부법 개악저지를 위한 전북공대위>가 힘차게 활동하기를 바란다.
- 8순노구의 강희남목사님과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지만 굴하지 않는 이광철씨의 건강을 빈다.
- 40여호의 준비호를 냈고, 58호의 본호를 냈지만 결국 상당기간 동안 연속호를 내지 못해 복간호를 내게 되었다. '이번만은' 이라고 다짐해본다.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프라이버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카드 자체보다도 그러한 전자카드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전국민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구축이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전국민의 감시체제를 일컫는 데이터베이스(database+surveillance)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국민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리고, 위험성을 막을 여러 제도적 장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각국의 프라이버시 옹호 관련 단체들은 지금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80년말 전국민신분증제도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국제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들의 반대에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미국에서도 60년대 이래 여러 차례 보편적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려 하였지만 각종 인권단체의 광범위한 저항 때문에 아직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평화와인권

제 60 호 (복간2호)

1996년 11월 30일

발행처: 정의평화정보센터
"평·화·마·음"

발행인: 문규현

편집인: 전춘형

정의평화 정보센터 ⑤⑥②-①⑥② 전주시 덕진구 전북2동 1034-1번지(송정이성지 어린이집 2층)
전화: 0652-76-1253 / 팩스: 74-7486 / ID: (나우컴, 아리컴) 평화마을

안기부법 개악저지 전북공대위 결성 공청회 시민 행동의 날 행사 거행

최근 남북 대치정국의 흐름을 타고 제기된 안기부의 권한 강화 주장에 대해 야당과 시민 차원의 반대여론이 높은 가운데 전주에서도 '안기부법 개악저지를 위한 전북공대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시민 차원의 개악반대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1월 21일 오전 11시 전주 YWCA회관에서 결성식을 갖고 출범한 '안기부법 개악저지를 위한 전북공대대책위원회'는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북연합,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주 YWCA, 전주YMCA, 전북민주화 교수협의회, 전북지역 총학생회연합,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통일시대 민주주의국

민회의 전북지부 등 2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전북지역의 거의 모든 사회단체가 안기부법 개악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있는 셈이다.

공대위 상임대표 문규현 신부(김제 요촌성당 주임신부)는 이날 대회사에서 "최근 잠수함 사건 이후 안기부가 공안기류를 적극 강화하면서 기왕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합법화하려는 시점에서 우리 정치사를 볼 때, 안기부의 권력 강화에는 반드시 민주주의의 후퇴와 무고한 인사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행이 뒤따랐다.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수사가 가능한만큼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 등 무소불위의 권력에 날개를 달

아 주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의 철폐 등 남북관계의 개선과 민주화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전북공대위는 앞으로 정당, 학술, 시민대표는 물론 안기부 관계자도 참가를 보장한 가운데 '안기부법 개정관련 시민 공청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안기부법 개악저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시민행동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안기부법 개정관련 시민공청회는 1996년 12월 5일 목요일 늦은 6시 동학혁명기념관에서 신양균 교수(전북대공법학과)의 '주발제'와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종교계, 법조인, 안기부전북지부 등의 4~5인의 토론자들의 발언에 이어 질의와 보충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 평화와 인권 · 박연경 ·



제1회 인권영화제 The 1'st Human Right Film Festival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

때 : 1996년 12월 1일~4일 (4일간) 곳 : 전북대학교 합동강당

주최 : 제1회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주관 : (전주) 제1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전북대학교 총학생회
(전국) 인권운동 사랑방, 씨네21, 키노, 이화여대 총학생회

영화상영이 끝나면 날마다 관객과의 토론시간이 마련됩니다.



성폭력예방 치료센터개소 2주년 기념식 치루

지난 11월 20일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 (대표 박상희 목사) 개소 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박상희 대표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기념식은 양상렬 전주시장의 축사와 성폭력예방센터의 기간 활동보고 등으로 진행되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는 91년 실질적으로 성폭력여성들을 도와왔던 김부남 후원회의 활동 성과를 가지고 전북지역에서 성폭력 없는 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 성폭력 특별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에 맞는 성폭력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여성을 지원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상담 및 보호의 기능과 예방교육을 담당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94년 11월에 설립되었다.

기간에 성폭력예방치료센터는 성폭력 피해상담, 청소년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생활 호신술 교육, 상담원 재교육등

각종 교육활동을 전개하였고, 여성 공동의 과제 및 사회민주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전개해왔다. 이제 성폭력은 개인과 사회,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여성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전북 지역 노동단체들 중심으로 모든 사회단체, 인사 망라 예정

11월 20일, 전북지역 노동단체들이 회의를 갖고 노동자교육의 산실이 될 전북노동교육원을 건설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노련 자료집 발간위원회 (위원장 이승준, 전 전북노련 의장)에서 <전북민주노조운동

전북노동교육원의 설립을 위한 활동 시작

10년>이라는 책자를 발간한 뒤 전문노동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제안하자 전북지역의 노동단체인 가톨릭 노동사목 노동자의 집, 전북청년 노동자회, 새시대노동자회등이 동의함으로써 시작된 이 사업에는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뿐만 아니라 (사)호남사회 연구회(회장 김의수 교수)과 전북민주화교수 협의회(의장이중호교수) 등에서도 적극 후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노동교육원 추진위 준비모임측은 몇차례 더 준비모임을 가진후 정식으로 추진위를 결성할 예정이며 1만원씩 1만명의 노동자 및 시민들을 규합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 추진위 발족식 ===
때: 12월 6일 7시
곳: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 0652-74-8042

3년동안 활동해온 노동조합 민주노조가 세워지자 등족취소?

원광의료원 노조 설립 신고증 교부 취소 카탈

지난 94년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래 3년여간에 걸쳐 활동해온 원광의료원노조에 대해 전북도청이 노조설립신고증 교부를 취소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 3면 계속 -

숫자로 보는 인권실태

“예산은 가장 적나라한 정부의 의지”라는 말이 있듯이 예산증액의 우선 순위는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3.7% 늘어난 71조6천억원으로 한마디로 ‘팽창예산’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예산의 20%를 넘는 15조여원의 국방비에 비해 사회복지예산은 6.46%(3조2천억원)에 그쳤다. 미국의 41.7%, 타이(12.6%), 스리랑카(20.3%)에 비해 그야말로 쥐꼬리만한 복지예산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국민의 보건과 복지에 관련된 항목이 그 어느것보다 우선 순위로 다루어야 한다.

원광의료원노조(현 위원장 김성철)는 지난 94년 각각 독자적으로 활동해온 4개노조 합병절차를 밟아 94년 4월8일자로 설립신고증을 받고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해왔다.그러던중 지난 8월 원광의료원산하 세개지부의 합병당시 초대 지부장들이 “합병대의원대회 회의록이 허위다”라며 전북도청에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전북도청이 이를 받아들여 등록을 취소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병원노련 산하 전북지역 본부 간부들이 지난 11월 15일 도청을 방문하여 지사실로부터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지사의 약속을 받았으나 면담이 있는지 며칠만에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다.

민주노총에서는 민주적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와해시키

기 위한 일부 반조직세력의 음모에 관공서가 놀아난 것이라고 판단하고 21일, 도청항의방문을 조직하고 유지사로부터 직접 도청의 노력을 약속받았다. 현재는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어슬픈 노무행정이 얼마나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하겠다.

중파입 불사한다! 전북지역 노동법개정 투쟁본부 총력투쟁 일적확인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1월 19일, 오후 2시 전북대학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전북지역 노동법개정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갖고 노동부가 개악안을 내놓은

데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활동을 민주적노동법개정과 대학노조탄압저지를 위한 전북도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법개악안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에 노동법개악안에 대한 대시민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하고 오는 23일부터 대시민홍보활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일단 11월 29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 노동조합대표자결의 대회에 총력을 기울인 뒤 12월 2일 부터는 철야농성, 4일 에는 조합원 총파업찬반투표 등을 조직한 뒤 10일을 전후하여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노동법 개저~영!!

민주적 노동법개정과 대학노조탄압저지 전북도민대책위 본격 활동 시작

지난 19일 도내 18개단체가 모여 결성한 <민주적 노동법개정과 대학노조 탄압 저지를 위한 전북도민대책위원회> (공동의장 문정현신부, 이중호 교수, 엄영애 전북여연 의장, 영경석 민주노총 전북본부 의장등)가 11월 20일, 오전 11시 국민회의 대변인 정동영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고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전달하였다.

이어 23일, 오후 1시부터 코아백화점 부근과 익산역 부근, 그리고 군산시청 부근에서 노동법개정과 대학노조 탄압저지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그리고, 25일 오전 1시에는 군산대를 방문하여 조성한 총장과 면담을 하였고 오후 3시경에는 전북대를 방문하여 장영수 총장과 면담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서 총장들은 민주노총 전북본부 영경석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하였다. 본 센터도 참여하고 있는 전북도민대책위는 오는 30일 2차 선전전을 펼친 뒤 12월 6일에는 민주적 노동법개정을 위한 1차 국민평화대행진을 가질 계획이다.

민주적 노동법개정과 대학노조탄압저지를 위한 전북도민대책위원회

참 / 여 / 단 / 체

-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 민주적노동조합연맹 / 전북민주노총연맹 / 전북여성노동조합 / 전북시민노동조합 / 전북 EYC / 원광노동조합 / 전주 새길생년회 / 가톨릭 노동사목 전주노조 노동자의 집 / 정의평화정보센터 / 민중의료연합 / 새시대노동자회 / 전북청년노동자회 / 일꾼노력 / 새풍 / 전북총학생회연합 / 전북지역학생연대 이상 18개단체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

가. 법적 문제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일명 프라이버시권)의 무력화 : 중요한 개인의 신상정보가 망라되어 있어 이 정보들이 통합되면 더이상 '사생활의 비밀'은 존재하지 않음. 이 점에서 모든 개인신상정보를 통합하겠다는 발상자체를 포기하도록 하여야 함.

▶ 법적근거없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통합 :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산망이나 네트워크로 통합할때는 그 침해의 위험성 때문에 '사전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시행되어야 하나, 이미 시범실시까지 마치고 전산망 구축과 발급작업을 시행하려는 단계에서도 국회에서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지문날인문제 : 주민등록증 제도에 의하여 이미 도입되어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제기 필요. 일본에서 '외국인'에게 특별하게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문제로 전 세계적인 지탄을 받고 있으며 기타 선진제국에서는 지문날인은 범죄자에게만 요구되는데, 우리는 전 국민이 열 손가락의 지문을 17세만 되면 날인하고 있음. 안기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전자주민카드에 지문정보를 수록하기로 함. 이제 전국민은 범죄예방의 목적을 위하여 범죄인 취급을 받게 되는 문제.

나. 사회적 문제

▶ 감시와 통제의 강화 : 주소 이동사항, 가족변동사항, 신체적 특징의 변동사항, 운전면허사항에 포함되는 교통법규위반사항, 병원진료 사항, 국민연금항목에 포함되는 연금납부내역, 분담금액, 직업 등이 통합되어 있어,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만이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의 힘은 무한대로 확장됨. 현실적인 침해가 없더라도 침해의 가능성은 원자탄의 역지력 수준이라 볼 수 있음(보안체계의 관리를 안기부가 담당함).

▶ 행정전산화에 따른 대량실업의 가능성 :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업무나 인감증명의 발급업무, 기타 전자주민카드에 대체되는 민원업무 관계자, 주민등록증 납품업체 등.(안전성과 보안문제때문에 전자주민카드로 창출되는 수요는 대기업이 담당함)

다. 기술적인 문제

▶ 정보유출과 조작의 문제 : ① 크래킹(일반적으로 해킹이라함)에 의한 유출과 조작. ② 내부자에 의한 유출과 조작(최고의 보안기술을 자랑하는 미국 국방성과 FBI의 주컴퓨터의 크래킹사례)

▶ 기계적인 안전의 문제 : 전산망의 작동불능 가능성의 상존(금융전산망이나 증권전산망의 가동중단에 따른 업무중단, 업

무비효율), 전산망 작동불능에 따른 국가관리체제의 마비 가능성, 안전대책은 현재에 가능한 기술수준에 불과하므로 미래(아주 가까운 미래임)에는 새로운 침해 기술이 개발되게 됨.



주민등록에서 자유로운 권리

최근 세계 식량회의(FAO)에서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8억 이상의 사람들과 5살이하 2억에 이르는 어린이들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상태에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96년 10월 현재 생활이 어렵거나 결손가정, 가정내 노동력부족으로 점심을 먹을 수 없는 결식 초중고생이 전국에 최소한 1만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회 예결위 답변자료에 따르면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점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은 초등학교 7천8백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3천9백95명, 고등학교 5백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천4백82명, 중학교 1백7명, 고등학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지역의연사계단 재기흥회**
 때 : 96년 12월 9일
 곳 : 숲정이 사제단 사무실
 ● **AP 민선초 선거캠프 위한 업무 회**
 때 : 96년 11월30일
 곳 : 익산 지화자 호프



평화와인권

제 61호 (복간3호)
 1996년 12월15일
 발행처: 정의평화정보센터
 '평·화·마·울'
 발행인: 문규현
 편집인: 전준형

정의평화 정보센터 ⑤⑥⑩-①⑥②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번지(숲정이성지 어린이집 2층)
 전화 : 0652-76-1253 / 팩스 : 74-7486 / ID : (나우컴, 아리컴) 평화마을

구태의연한 교도행정

군산 교도소 '양심수 이동주씨 실명위기'

지난 12월 10일 '인권의 날'을 맞아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과 정의평화정보센터에서 군산교도소에 있는 양심수를 찾았다.

이 날 면회에서 문정현 신부(군산 오룡동 성당), 김훈 신부, 박인근 신부 등 7명은 3명의 양심수를 면회하였다. 군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8년형을 받아 4년을 남겨두고 있는 학생출신의 조덕원(30)씨와 부산연합에서 구국전위 사건으로 수감되어 98년 2월 출소를 앞둔 박화국씨, 그리고 집시법 위반으로 2년형을 받아 1년을 복역한 이동주(25)씨가 있다.

면회과정에서 이동주씨가 흉체 난중이라는 증상으로 오른쪽 시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는데 큰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군산 교도소 측은 '예산이 없는 관계로 검진과 임시치료밖에 할 수 없으며 예산이 책정되어야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동주씨 및 양심수들은 '이동주씨 눈의 악화는 교도소 수감생활에서 더욱 악화된 질병

이므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시급히 수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동주씨는 인천대학교 재학 학생으로 5.18특별법제정 및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투쟁을 주도했던 학생이며 지난 7월 전경이던진 돌에 오른쪽 눈을 맞아 안구가 파열된 상태에서 구속, 수감되었다.

한편 이동주씨는 12월 13일 부모님과 인천연합 관계자들의 면담과정에서 모금한 돈으로 수

술을 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이동주씨는 '교도소측의 무책임한 교도행정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이므로 교도소에서 전적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가족들의 제의를 거부하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면회 후 정의평화 정보센터에서는 인천연합과 연락관계를 가지고 모금활동과 이동주씨의 수감생활이 더 이상 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병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촉구하는 일을 전개하고 있다.



숫자로 보는 인권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노동자들이 감수하게 될 총 임금 손실분은 한해 29조1천5백여원에 이르리라는 계산은 그만큼 사용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총과업을 불사하는 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지도 모르겠다.

노동법 개정안 시행때 임금손실(추정,노동계산)	
변형근로시간제	13,617,676,800,000
쟁의기간 임금 미지급	17,151,875,650
전임자 임금 미지급	106,042,154,400
임금협약 기간 2년 연장	5,319,405,000,000
법정퇴직금 폐지	10,099,403,496,000
합 계	29,159,679,326,050



12월 1-4일, 4일간 진행되었던 제 1회 인권영화제가 무사히 끝났다. 개막날인 12월 1일, 개막식행사를 포함한 첫날 영화상영은 상영장소인 전북대학교(총장:장명수) 측의 방해로 진통을 겪었다. 전북대학교측은 상영장소인 합동강당의 전기를 끊고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직원 100여명을 동원하여 정문과 합동강당 앞에서 관람객들의 출입을 봉쇄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정보다 늦은 시간에 개막행사를 취소하고 바로 개막작품 '잊지 말자'를 상영하면서 제 1회 인권영화제는 시작되었다. 영화상영을 위한 전기시설만을 간신히 확보한 채 조명시설이나 난방시설도 가동되지 않은 채 촛불과 몇 개의 난로로 추위를 달래며 영화제를 시작하였다. 다행히 이튿날부터는 학교측과의 마찰이 해결되어 영화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4일 동안의 영화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람하는 시민이나 청년·학생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상영장소인 합동강당의 많은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영화제는 계속되었다. 폭넓은 시민들의 참여부족은 안타까웠지만, 젊은 층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12월 11일 제 1회 인권영화제를 준비해왔던 인권영화제조직위는 평가회의를 갖고 97년 제 2회 인권영화제를 기약했다. 이날, 평가회의에서는 영화제 전반에 관한 평가와 더불어 영화제를 통해 남은 예산은 민가협에 전달하여 양심수를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평화와 인권 백악영

공해 식민지 탈출하자... SOFA개정 절실

미군기지 환경조사 실시, 군산기지 하천오염 심각

한민국은 공해 식민지인가? 하는 울분을 터뜨릴 정도로 주한미군들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총 7천3백60만평에 96개의 미군관련기지와 시설이 있는데, 우리 땅이면서도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미군시설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의 심각성이 민간단체들에 의해 최초로 보고되었다. 녹색연합과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준)는 지난 4일 서울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전국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보고회'를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불평등한 한미주둔

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의정부, 부평, 군산,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30여개 미군기지의 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군산에는 군산 AIR BASES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800여명의 미군이 근무하고 있다. 이곳에서 확인된 쓰레기 매립장은 3EA이며, 그중 2EA의 경우는 방치돼 있었다. 방치된 매립장의 경우 지역의 하천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새만금으로 표현되는 이 지역의 습지 또한 오염시키고 있다.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많은 물품들이 독성폐기를 이거나, 장기간 보존을 위한 약품 처리로 중금속에 오염되어있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러한 쓰레기들을 미군은 한국의 강산에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립장에 대한 사후 관리도 전혀 이루지지 않고 있다.

이 지역의 소음도 가공 할만하다. 군산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소음을 측정할 결과 등가소음 83.6dB를 기록하였으며, 항공기 순간 최고소음은 107.0dB를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심장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정도의 소음으로 이곳에 미군기지가 해방 이후 계속 주둔하고 있으며, 하루 종일 미군 비행기가 이착륙하면서 30분에 4대씩(더 많은 경우도 있음) 이착륙을 훈련을 하고있고 할 때 그 피해에 대한 주민건강 조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또한 미군기지와 일부 민가는 철

안기부법개정저지를 위한 전북공대위 공청회 열려...

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음과 공군비행장에서 유출되는 각종 대기오염, 오염물질들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이 미군 기지와 철책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활하고 있으며, 그 기간이 3-40년 동안 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의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각종 중금속과 오염물질을 침출수로 흘러 보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의 경우 미군 활주로를 한국의 국내 비행사가 이용하는 대가로 쓰레기를 전량 처리해 주거나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불합리한 한·미 관계는 극복되어야 하는 문제점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안보라는 미명아래 국토의 많은 부분이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과 하천들이 오염됨으로 지역의 환경을 광범위하게 파괴시키고 있고 이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평화와 인권 전문영

96' 송년한마당

일시: 1996년 12월 19일 오후 6시
장소: 동학혁명 기념관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

전국농민회 총연맹 이수길 의장 단식도중 쓰러져...

수매가 12%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의도 광장에서 단식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의장님께 격려를 보냅니다.

신한국당이 안기부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한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시민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전북지역 2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안기부법개정저지를 위한 전북공대위'(이하, 전북공대위, 상임대표 文奎鉉 신부)가 '안기부의 활동과 권한 어디까지...'라는 주제로 개최한 것이다.

1백여명의 시민이 모여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된 동학혁명기념관에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신양균 교수(전북대 법대)는 기초발제를 통해, "국제간 다양한 양태의 교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엄청난 정보의 이동이 요망되고 이에 따라 정보기관의 업무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외국의 선진국가들은 정보기관의 수사권을 배제하고 고급정보 수집업무체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신교수는 "법이론적으로 볼 때 수사 절차에서 수사기관의 직권남용 금지나 변호인 접견권 보장은 적법절차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전제라는 점에서 개정논의 자체가 법치국가의 이념을 포기한 결과가 된다.", "안기부가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는 정보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정보기관의 성공여부는 국민들과의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정해지는데 수사권의 부여는 오히려 국민들과의 괴리를 가져올 것이다."고 지

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종수 신부(금암동 성당)는 안기부의 인권침해와 정치개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안기부의 수사권 강화가 주는 국민적 불안감을 역설했다. 김영기씨(민주주의민족통일 전북연합 집행위원장)도 "안기부 법이 개정되면 안기부는 과거 군사정권 시기와 같이 무제한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이 충분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신한국당이 개악을 시도하는 것은, 국가안위가 아닌 정부여당의 정치적 안위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 참가자들은 대체적으로, 94년 개정안 기안본이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일정한 역사적 발전이었음을 공유하고 현정부의 긍정적인 개혁조치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2년만에 이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시도는 법이론적으로나 현실적 필요성 어느 면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정보기관에 의지하여 국가를 관리하거나 정치를 하려는 생각을 갖는 정권은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수 없다는 교훈에 주목했다.

한편, 전북공대위는 공청회의 토론자로 안기부전북지부와 신한국당 전북도지부의 참석을 공식 요청했었다. 그러나 당일까지 아무런 답변조차 없자 공청회에 참석한 청중들은 '국민의 정당임을 표방하는 신한국당이 이럴 수 있느냐, 정당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이 의심스럽다.', '안기부가 그처럼 수사권 확대에 열의를 가지고

있다면 당당하게 나와서 의견을 밝히는 것이 마땅한데 정작 열린 토론마당엔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입을 모았다.

◎ 평화연구 박연경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비롯한 도내 시민사회단체
노동법개악 저지 결의 높아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안의 윤곽이 드러나자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적 노동법개정과 대화노조 탄압저지 전북도민 대책위원회"(공동의장 문정현신부등) 소속 18개 단체들은 7일에 이어 14일에도 500여 명의 노동자, 학생, 시민들이 코아백화점 앞에 모인 가운데 '노동법 개악저지와 노동악법 철폐를 위한 전북도민평화대행진'을 계속하였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노동법개정안이 사실상 개악안임을 지적하면서 법안을 폐기하고 96년정기국회에서 강행처리하지 말것을 주문하였다.

20여개의 사업장에서 총파업찬반투표를 실시, 90%이상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한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의장 염경석)는 13일 오후 1시부터 돌입할 것으로 예정되었던 총파업방침을 유보하고 중식집회 등을 계속하면서 정부안이 처리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14일 집회에 적극 결합하고 이어 오는 16일부터 무기한파업에 돌입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도 16일 1시간 시한부파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투쟁으로 노동법개악저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평화연구 박연경

장기복의 양심수에게 원하장을!

3,40년에 이르는 시간을 창살 안에 갇혀 있는 장기수들과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시라. 우리가 쓰는 편지 한 장이 가장 희망스런 소식이 될 것입니다.

광주교도소 (500-110) 광주시 북광주우체국 사서함63호

- 김용태 (38세, 12년) 1997번 이경찬 (62세, 32년) 5047번
- 이상철 (47세, 14년) 2473번 이공순 (63세, 30년) 5041번
- 이재룡 (53세, 25년) 5059번 함주명 (67세, 14년) 5012번
- 김동기 (65세, 31년) 5042번 박찬우 (37세, 13년) 5005번
- 양희철 (63세, 34년) 5029번 최수일 (57세, 32년) 5015번

대구교도소 (711-830) 경북 달성군 화원우체국 사서함1호

- 박동운 (52세, 16년) 3111번 김정묵 (60세, 13년) 3119번
- 안승윤 (65세, 15년) 3151번 정 영 (54세, 12년) 3236번
- 박수관 (53세, 14년) 3245번 오형식 (65세, 26년) 3100번
- 김장호 (56세, 14년) 3122번 홍명기 (66세, 33년) 3125번
- 서경운 (57세, 13년) 3185번 황대권 (42세, 12년) 3164번
- 양동화 (39세, 12년) 3265번

대전교도소 (305-251) 대전시 유성우체국 사서함 136호

- 김태룡 (49세, 18년) 3565번 김인수 (74세, 35년) 3618번
- 나종인 (59세, 12년) 3643번 박왕규 (67세, 30년) 3624번
- 서순택 (67세, 8년) 3635번 신인영 (67세, 30년) 3506번
- 유재선 (65세, 14년) 3573번 안영기 (67세, 35년) 3530번
- 김익현 (34세, 7년) 3855번 양정호 (66세, 28년) 3630번
- 최선웅 (55세, 11년) 3599번 우용각 (68세, 39년) 3514번
- 김윤수 (57세, 12년) 3637번 윤수갑 (74세, 30년) 3649번
- 강희철 (38세, 11년) 3502번 장병락 (63세, 35년) 3645번
- 김은환 (67세, 28년) 3640번 김익진 (67세, 28년) 3574번
- 최선목 (70세, 35년) 3612번 최하종 (70세, 35년) 3561번
- 홍경선 (7세, 30년)

안동교도소 (762-600) 안동시 안동우체국 사서함 171호

- 조상록 (51세, 19년) 1310번 김병주 (72세, 14년) 1368번
- 김기문 (67세, 15년) 1330번 이장형 (64세, 12년) 1302번
- 유정식 (57세, 22년) 1311번 강용주 (35세, 12년) 1313번

전주교도소 (560-280) 전주우체국 사서함 72호

- 박영희 (34세, 5년) 2001번 석달윤 (66세, 17년) 2120번
- 진창식 (50세, 18년) 2679번 손유형 (68세, 16년) 2039번
- 문철태 (67세, 12년) 2019번 최수열 (32세, 10년) 2073번
- 손성모 (67세, 16년) 2011번 김성만 (41세, 12년) 2035번
- 신광수 (66세, 12년) 2053번 김창원 (64세, 26년) 2063번

전주교도소 (663-910) 경남 진양군 대곡면 광석리 700

- 서경원 (60세, 8년) 55번

"연마장을 보내실 때 수편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기입해야 합니다. 단제에서 보낼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으로 보내야 합니다."

평화와인권

97년

62호-79호



평화와인권

제 6 2 호
1997년 1월 4일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평 화 마 을'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김 대 원

정의평화 정보센터 ③⑥① - ①⑥②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번지(금정이성지 어린이집 2층)
전화 : 0652 - 76 - 1253 / 팩스 : 74-7486 / ID : (나우컴, 아리컴) 평화마을

국민을 짓밟은 김영삼 독재정권!

- 총파업투쟁 범국민싸움으로 -

지금 전국에서는 김영삼정권의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맞서 전국민적인 항쟁의 불길이 솟구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6시 김영삼정권의 총북 신한국당 154명의 정치모리배들은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노동법, 안기부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반민주적인 작태를 자행하였다. 이에 민주노총에서는 26일 오전을 기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민주노총은 28일까지 총 146개 노조 20여만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여 서울, 인천, 수원, 대전, 전북, 광주, 울산, 창원, 부산 등 전국에서 지역별로 김영삼정권 규탄집회를 가졌으며, 서울의 명동성당을 거점으로 '노동법의 완전철폐가 이루어질때까지 총파업투쟁을 지속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연말과 97년 새해 휴일에는 잠시 1단계 총파업을 유보하고 97년 1월 3일 오전까지 노동법이 백지화 되지 않을 경우 2단계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폐 및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김영삼 폭력 정권 규탄' 투쟁이 모든 재야단체는 물론이고 종교, 시민단체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재야,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폐와 민주기본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가 결성되어 연일 대국민 선전전 및 규탄집회를 열고 있고,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문규현, 장용주신부)은 시국미사와 함께 전국 각 교구를 통해 신한국당 날치기 처리의 부당성을 홍보하는 규탄기도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보건의료인들도 규탄성명을 통해 불법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무효를 선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매일 전주코아백화점앞 팔달로에서 수천여명의 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이 전개되어 신한국당 규탄과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철폐

회의 합성이 전주시내를 뒤덮었다. 현대자동차 전북지부를 비롯하여 만도기계 익산지부, 현대자동차 서비스 전북지부,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전북대, 군산대, 국제정비등 도내의 수만여명의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즉각적으로 일으켰다. 그리고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염경석의장)는 중앙성당에서 지속적인 투쟁을 조직하기위해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반드시 '노동법, 안기부법을 철폐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전북지역의 각 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은 긴급회동을 가져 '안기부법·노동법 개악철폐와 민주수호 범국민 대책위 전북본부'를 결성하고 김현식목사, 문규현신부, 한규채의장 등 총 6인을 상임대표로 선출하여 '전북지역의 모든 사회단체가 총결집된 연대투쟁을 벌이겠다'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 평화와인권 전문영

안기부법 · 노동법 반대 전북지역 시민 참여 불붙어

지난 12월 26일 임시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로 개정된 안기부법 노동법에 반대하여 전북지역의 각 시민·사회 단체들이 뜻을 함께 하고 나섰다.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은 12월 30일 오후 1시 가톨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선에 위배되는 안기부법과 노동법의 개악은 과거 독재로의 환원이며 이에 대해 김영삼 정권은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노동자·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할 것'을 선언하였다.

또한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을 비롯한 전북지역 각 사회단체의 대표와 김현식 목사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회 지도급 인사들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 사무실에서 12월 31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법·안기부법의 개악철회와 정부여당의 사과, 그리고 관련자들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을 통하여 <안기부법·노동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 범국민대책위 전북본부>는 오늘날 한국경제 성장은 산업재

해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악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일해온 노동자들의 공이며 현재의 경제위기의 주범은 선진 기술의 개발보다는 개인재산의 증식과 땅투기등으로 상황인식과 시대착오적인 개악기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약칭) 범국민대책위 전북본부는 지난 27일 신한국당 이흥구 대표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현재의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의 개악이 내년 대선을 겨냥한 신한국당의 공작정치 부활과 노골적인 재벌 손들기라는 점에서 집권여당의 국정운영능력 부재와 패거리 정치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날치기 관련자들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특히 12월 30일 이수성 국무총리의 담화에서 '근로자 생활향상 특별법' 제정 운운한 것은 정부 여당 스스로 이번 노동법이 개악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현 사태를 호도하는 기만술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국민들의 요구가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개악 철회에 있는 만큼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길만이 현재의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다시한번 개악철회를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힘을 다하여 전북지역의 각급사회단체가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12월 31일부터 민주노총과 공대위 집행부 보위 활동 및 천막농성이 중앙성당에서 실시되어 매일 6시~9시에 농성장 앞 촛불시위가 열릴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1월 4일부터 열리는 행사일정을 살펴보면 1월 4일 인권선교회의 회에서 주최하는 목전평 기도회와 오후 2시에 '안기부법·노동법 개악 철회 및 신한국당 규탄대회'가 중앙성당에서 열릴 예정이고, 6일 오후 2시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 사제단에서 주최하는 '시국기도회'가 중앙성당에서, 3시에는 '신한국당 규탄 및 민주기본권 수호 1차 전북도민대회'가 코아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11일 오전 11시에 종교인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기도회와 오후 2시에는 '신한국당 규탄 및 민주기본권 수호 2차 전북도민대회'가 각각 거행될 예정이다. ●평화와인권 백영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화와 인권 백영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 이 좀 더 많이 배포되고 좀더 다양한 취재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요. 정기구독해주시는 만큼 가능해 집니다.

전북은행 535-21-0027850 우체국 402297-0053040
국민은행 506-21-0876-764 농협 501010-51-025980
예금주: 전준형

● 검찰 파업 관련 구속대상 선별작업 돌입 ●

검찰은 연말에 잠정 중단됐던 노동계의 총파업이 재개됨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상급 단체노조와 각 사업장 파업 주동자들을 중심으로 사법처리 대상자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민노총 산하 45개 노조가 파업을 재개하고 금융사무노련 등이 내주 초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하는 등 총파업이 다시 본격화됨에 따라 파업 주동자 중 구속 대상자를 선별하고 사업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과 각 사업장의 파업지도부는 검찰의 이러한 방치에 맞춰 파업투쟁 지도부에 대한 기습적 공격과 파업 대오에 대한 물리적인 침탈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1995년 1인당GNP 및세계순위	근로자 주당평균 노동시간	연구 10만명 당 역사수(명)	중등교육 교원 1인당 학생수(명)	GDP대비 사회보장 지출(%)
한국	10,076 32위	48.7 (1994)	117 (1993)	30 (1993)	1.7 (1992)
포르투갈	9,757 33위	38.2 (1993)	284 (1990)	-	10.4 (1986)
그리스	8,612 34위	41.1 (1994)	320 (1988)	14.6 (1989)	28.6 (1986)
아르헨티나	8,463 35위	40.4 (1990)	304 (1988)	7.6 (1991)	6.1 (1986)

▶ 1995년 1인당 GNP의 경우 한국은 잠정치. 나머지 국가는 WEFA 96년 세계경제 전망을 이용한 추정치. 괄호안의 수치는 "기준년도"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노동부)

한국은 1인당 GNP가 1만달러를 넘긴하였지만 삶의 질적인 면에서는 1인당 GNP가 비슷한 포르투갈, 그리스, 아르헨티나와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GNP 순위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대안이 시급하다고 본다. ●평화와인권 백영

<독자 의 소리>

정리해고1호 김영삼

현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뽑았기 때문에 국민인 우리들이 고용주겠지요. 따라서 국민의 이름으로 김영삼을 정리해고 시킵시다. 근거는 기업의 책임사항에 준하는 국민전체의 반대여론(즉 정치, 사회적인 악화) 상황이므로, 그리고 정치인들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아 테 몽땅 변형근로 적용시켜 대신까지 쉬게합시다! 물론 월급도 줄 수 없지요.

행사안내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철회를 위한 시국기도회

주최: 천주교 정의구현전주교구 사제단

일시: 1997. 1. 6. (월) 오후 2시

장소: 전주중앙성당

양심수를 위한 미사와 일일호프

주최: 천주교 정의구현전주교구 사제단

일시: 1997. 1. 17. (금) 11시~24시 (미사: 오후 7시)

장소: 가톨릭센터 옆 하이힐호프 (미사: 중앙성당)

<성명서>

이른 바 날치기 정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

신한국당과 김영상정부에 대한 범국민적인 항쟁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1. 우리는 인류구원의 기쁜소식이 울려 퍼졌던 성탄절 다음날 모든 국민이 잠든 새벽 6시에 열린 국회의사당의 나무망치소리를 문민정부의 조종 소리라고 규정합니다. 이제 김영삼 정권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안기부법과 노동법이 포함된 11개법안을 단 7분도 못되는 시간동안에 날치기통과시킴으로써 자신이 '국민들의 정권'이 아님을 확실하게 입증하였습니다.
2.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이어야 할 안기부에게 공작과 정보정치로 국민을 탄압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제 안기부는 '불고지죄' '고무찬양죄'에 대한 수사권을 이용, 수많은 공작정치와 간첩조작을 일삼으면서 97년 대선을 비롯한 모든 선거와 정치에 '정권안보'를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노동법'이 아니라 '자본법'을 만들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정당한 기본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영자들이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이 법안의 통과를 쌍수를 들고 지지하는 것이 바로 이 노동법의 반노동자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3. 이제 신한국당은 공당으로서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스스로 유린하고,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을 회유와 압력으로 끌어모으고,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한 날치기를 두려움없이 행사하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라 정치모리배일뿐입니다.
4. 이러한 날치기정국을 만들어낸 장본인인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총리에게만 미루고 스스로는 청남대로 가 내년 대선에서 또한번 이겨보겠다는 망상만 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총괄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이러한 공작정치와 노동탄압의 '만행'을 조장하고 있다면 그는 이제 '국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5. 우리는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항쟁에 나서고 모든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서 현 정부를 규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현재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은 마음과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항쟁에 나서고 있는 선의의 형제자매들과 결연히 연대하고 동참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 우리의 요구 -

- 첫째, 신한국당이 불법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안들은 원천무효이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즉각 국민앞에 사과하고 법안들을 폐기하라.
- 둘째, 신한국당 의원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의회주의와 헌정질서를 스스로 어지럽힌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하라.
- 셋째, 이번 사태로 인하여 총파업에 돌입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다. 정부는 그들의 노동법 개악 철회와 노동악법 철폐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1996년 12월 30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평화와인권

제 63 호
1997년 2월 1일
발행처: 정의평화정보센터
'평화마을'
발행인: 문규현
편집인: 김대원

⑤⑥① - ①⑥②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번지 (금정이성지 어린이집 2층)
전화: 0652 - 76 - 1253 / 팩스: 74-7486 / ID: (나우컴, 아리컴) 평화마을

군산교도소 이등주 씨 수술비 국비로...

교도소 관계자, "수형자는 관비가 원칙"

군산교도소 수형자 이동주(26·집시법)씨가 우측눈 수술을 받았으며, 비용은 교도소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하루소식 96년 11월 27일자 참조).

우측눈 흥채낭종이라는 질환으로 수술이 시급했던 이동주 씨는 교도소측에서 수술비 일체를 관비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8일 원광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나흘만에 퇴원, 현재 통원 치료중에 있다. 군산교도소측은 그동안 이 씨의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이에 맞서 이 씨는 일주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군산교도소 의무과의 한 관계자는 "수형자가 원래부터 앓고 있던 질병을 제외하고 수형자의 치료는 관비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연말에는 예산이 없었지만 연초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동주 씨 수술비 지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95년 7월 시위과정에서 최루탄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은 이 씨는 95년 11월 5·18특별법제정 시위 등의 이유로 구속, 인천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우측눈의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 이에 이 씨와 가족들이 인천구치소측에 줄곧 수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군산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이 씨의 가족은 아직까지 이 씨가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으며 통증이 남아있는 상황이

라고 전했다. 또 이 씨는 녹내장 치료를 위해 한 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씨의 어머니 김영조(50)씨는 "인천구치소에서 제때 병원에 보내주고 수술을 받게해 주었다면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들 농성 돌입

악법철폐, 민주적 개정 촉구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무효화를 위한 전국 서명교수모임과 민교협 소속 교수들은 27일부터 사흘간 민교협 사무실에서 전국교수 농성에 돌입했다.

교수들은 △날치기한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의 즉각 철회 △노동관계법의 민주적 재개정 △안기부법 및 국가보안법의 철폐 △안기부 등 공안기구들의 정보수집관행에 대한 조사와 개혁 등을 촉구하며, "반민주악법의 원천무효화와 민주적 개정이 이루어질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